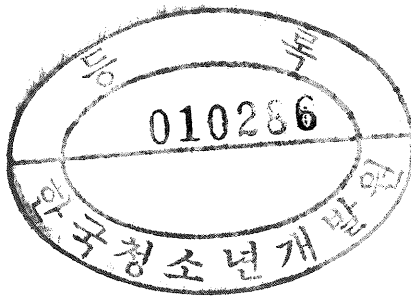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청소년

교육과 교류방안 탐구

- 통일을 대비하는 청소년 교육과 교류방안 -

연구자 : 김 각



한국청소년개발원

목 차

I. 서 론	1
1. 선행연구의 개관	1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필요성	5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1) 연구의 내용	6
2) 연구방법	7
4. 연구의 시각 및 문제점	8
1) 연구의 시각	8
2) 연구의 문제점	10
II. 통일정책	12
1. 통일의 의의와 통일원칙	12
1) 통일의 의미	12
2) 통일의 당위성	14
3) 통일의 기본 원칙	21
2. 남북한의 통일정책	26
1) 남한의 통일정책	26
2) 북한의 통일정책	31
3) 남북한 통일정책의 평가	36
III. 통일교육	42
1. 통일교육의 의의	42
1) 통일 교육의 의미	42
2) 통일교육의 필요성	43
2. 남북한의 통일교육	44
1) 남한의 통일교육	45

2) 북한의 통일교육	64
IV. 남북한 청소년교류 및 청소년 의식	82
1.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실상과 문제점	82
1) 남한 청년학생들의 통일요구와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실상	82
2)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한계와 문제점	87
2. 남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90
1) 통일관	90
2) 북한관	95
3) 민족의식	97
4) 남북한 청소년 교류관	99
5)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에 나타난 청소년 통일의식의 평가	101
V. 독일 통일의 특징 및 한민족에게 주는 시사점	102
1. 독일 통일과 한민족	102
1) 독일 통일을 보는 한민족의 입장	102
2) 독일통일이 주는 시사점	103
2. 서독의 정치교육과 동·서독 청소년 교류	108
1) 독일의 정치교육	108
2) 동·서독 청소년 교류	116
3. 독일통일이 한민족에게 주는 교훈	120
VI. 결론 및 제언	125
1. 결론(논의의 요약)	125
2. 남북한 청소년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과 교류에 대한 제언	129
1) 동질성 회복의 전제 조건	129
2) 청소년 교육과 교류 실재에 대한 제언	133
참고 문헌	138

표 목 차

<표 2-1>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특성 변화	34
<표 2-2>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36
<표 3-1> 북한의 타아소 일과표	69
<표 3-2> 북한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각 단원의 주제별 분포	70
<표 3-3> 북한 인민학교의 교과 과정안	71
<표 3-4> 고등중학교 교육과정안	73
<표 3-5> 고등중학교 과목 영역별 배치	74
<표 4-1> 한총련의 투쟁노선과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비교	86
<표 4-2> 청소년의 통일의지	91
<표 4-3> 청소년들이 통일을 원하는 이유	92
<표 4-4> 통일을 원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이유	93
<표 4-5> 통일추진의 주체	94
<표 4-6> 가장 좋아하는 나라	95
<표 4-7> 가장 싫어하는 나라	95
<표 4-8> 북한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	96
<표 4-9> 대북한 경제지원에 대한 의견	97
<표 4-10> 북한동포 따뜻하게 대하여야 하는 이유	98
<표 4-11>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견해	99
<표 4-12> 대학생들의 통일 및 남북교류 운동	100
<표 4-13>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남북한 관계개선 및 통일에 미치는 영향	100
<표 5-1> 동독인 및 서독인의 상호방문, 여행	117
<표 5-2> 동·서독 청소년들의 상호 교환 방문, 여행	119

그림 목 차

<그림 2-1> 통일 편익의 분류	20
--------------------------	----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민족이 하나되는 통일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통일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남북한 청소년들의 이질화된 체제이념을 뛰어넘어 민족적 차원에서 동질성을 회복시키려는 방안을 찾는 데 있다. 반세기 이상을 체제와 이념을 달리한 삶의 터전속에서 형성된 남북 청소년들의 이질화된 모습을 찾아내고 그것을 민족적 차원의 동질성으로 止揚(지양)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적 목표이다.

또한 극적인 내외의 상황변화에 따라, 독일의 경우와 같이 통일에 대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북한체제가 급작스럽게 붕괴하여 북한 주민의 생존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체제통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예상되는 혼란과 무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한 청소년의 교육과 교류 방안 수립도 본 연구 목적의 하나임을 부기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내용과 방법 및 연구의 시각과 연구상의 문제점 등을 고찰하였다.

II장에서는 통일의 의미와 원칙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검토 분석했다.

통일이란 단순히 두 국가의 두 체제가 하나로 합쳐지는 단순한 제도의 통합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되는 내면적 민족감정의 통합을 뜻한다. 이러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화적, 자주적, 민주적, 민족의 대동단결 등의 통일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III장에서는 통일교육의 의의와 남북한의 통일교육을 검토 분석했다.

통일교육은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 통일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진정한 민족통합을 이룩하는 교육, 이 모두를 포함하는 교육이다.

IV장에서는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실상과 문제점을 문헌 중심으로 검토하고 남한 청소년들의 통일관, 북한관, 민족의식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알아 보았다.

현재 공식적인 남북 청소년교류는 남북 청소년 축구단일팀 구성, 리틀엔젤스 북한 공연이 전부이며, 청소년교류는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어 구체적 실천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 V장은 독일통일이 한반도, 한민족에게 주는 교훈과 시사점을 찾으려는 목적에 따라 분석이 이루어졌다. 독일과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후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동서냉전의 산물로 강대국들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국토와 민족의 분단이라는 공통성을 가졌으나 분단 이후의 상황과 내부적 분단 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성이 거의 없다.

독일과 한반도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청소년들의 교류를 조건 없이 허용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정부의 세심한 지도와 학생들의 자발적 교류 노력이 합쳐진다면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우리 정부와 학생들의 노력에도 청소년 교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당국의 몫이다.

청소년 교류가 구체화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막상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 지면 교류 결과의 사후평가를 통하여 그를 토대로 한 시행착오를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I. 서론

1. 선행연구의 개관

1980년대까지의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연구는 통일안보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체제 비판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각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의 대북정책 지원 내지는 홍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80년대에 통일문제를 다루는 시각은 반공이 중요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 북한이나 통일관련 연구에서 반공이란 기본적 이념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연구물들은 객관성, 학문적 과학성, 진리성에 대한 논의에서 보편적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러한 반공주의적 시각은 연구 주제의 선정에 한계성을 가져와 주로 안보와 정치에 관계되는 연구에 초점이 모아졌다. 물론 당시에도 북한의 청소년, 청소년단체, 교육체제, 학교교육 등의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그들 연구의 목적은 순수한 사실 규명이나 과학적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다가 보다는 북한체제의 정치·사회적 모순을 밝히는데 주 목적이 있었다.¹⁾

80년대 후반부터 남한 정부는 구 소련체제의 붕괴와 동구권의 몰락을 포함한 대외적인 국제질서의 변화와 대내적으로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이른바 레드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특히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 대회의 서울 개최는 역대 한국정부가 고수해온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많은 禁忌사항을 깰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어 보다 폭넓은 공산권과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정세변화는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시야를

1) 이러한 유형의 연구물들은 정세구의 “대학생 대상의 반공교육 개선방안 연구”, 최송범의 “중·고등학생에 대한 통일안보교육”, 김충남의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비교”, 국토통일원의 “남북한 청소년의 의식구조 형성과정 비교” 등 수없이 많다.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그 이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다양해지고 새로운 시각에서 북한을 보려는 노력도 나타났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와 동·서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독일 통일은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을 고조시켰으며 국민들에게는 통일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제고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동독의 급작스러운 붕괴는 북한체제의 몰락과 붕괴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북한체제의 붕괴를 假想하여 다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현실적 정책개발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연구도, 북한체제 붕괴를 전제로 한 정책대안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따라서 통일관련 연구는 80년대 안보중심의 체제 수호적인 소극적 통일연구 자세에서 벗어나 실질적 통일을 가정한, 적극적인 통일연구 자세로 전환되었다. 즉 90년대의 북한 및 통일관련 연구의 특징은 첫째, 실질적 통일을 겨냥한 연구의 활성화, 둘째, 연구주제의 다양화, 셋째, 다면적 연구시각 등을 들 수 있다.²⁾

이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다면적 연구시각이다. 80년대까지의 반공 이데올로기의 틀속에서의 연구는 편향성과 이데올로기적 가치지향성을 띠지 않을 수 없었으나, 90년대에 와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연구시각에서, 연구의 보편성과 과학성을 견지할 수 있는 연구방법의 방향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북한쪽에 경사된 시각에서 연구된 것도 간혹 있긴 하지만, 그러나, 종래의 보수주의적 시각에서의 연구가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 편향적인 연구물도 무조건 배척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인정하여 북한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는 연구자세도 필요하다 하겠다.

2) 김형윤, 조동호, 조민 등의 통일비용에 관한 연구, 송광성, 박성희, 이영숙 등의 북한청소년에 관한 연구, 신세호, 김영철, 김각 등의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등 실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동시에 연합국들은 한반도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두 개의 국가체제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반도에서 6.25 동족전쟁의 참상을 겪게 하였으며, 전쟁 후 양 국가체제는 각각 미·소의 지원하에 경쟁적 체제강화 과정에서 상호 반목과 갈등, 긴장과 대립을 심화시켜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와 비슷한 동기와 처지에서 분단되었던 동·서독은 8년전 국제적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을 깨고 통일위업을 달성하여 하나의 독일을 건설하여 가고 있으며, 베트남, 예멘 등의 분단국들도 통일 방법이나 통일후의 완전한 민족공동체 형성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민족의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된 상태이다.

한반도 이외에도 중국과 대만이 분단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의 분단은 우리와는 다른 내전에서 비롯된 자의에 따른 內爭型的 분단이었으며, 현재 그들 양국간의 왕래와 교류도 우리의 남북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전되어 있다. 또한 양국간의 국력의 불균형은 상황변화에 따라서는 현상적 역학관계를 급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국제관계의 현실을 볼 때, 유독 한반도에서만 냉전의 구시대적 잔재인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이고 통일방법은 쌍방 모두에게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상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평화적 통일이다. 이는 이미 1972년 7. 4 남북 공동성명에서 남북이 합의하였다. 무력적 방법을 수반하지 않는 평화통일은 쌍방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는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호신뢰에 바탕한, 긴장적 敵對感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한반도에서의 남북관계는 상호불신에 찬 대립과 반목·갈등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72년 7. 4남북 공동성명 이래

한국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그 성과는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은 물론 국제정세 변화의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남북접촉의 교착상태는 최근 남북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미국이나 일본 등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더구나 북한측은 남쪽을 배제한 미국과의 접촉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민족의 문제는 남북이 합심하여 민족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바탕하여 민족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누적되어 온 이념적 반목·갈등과 대립에서 탈피하여, 남북한의 정부 책임자들은 물론 남북한 주민 모두가 한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민족이 하나로 통합하는 남북의 통일이야말로 민족의 번영과 미래를 보장하는 역사적 의무이며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남북한 모두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다. 남한은 이제까지 비교적 순조로왔던 개발독재형 고성장 기조가 무너지면서 불어닥친 국제외환결제금의 부족에서 비롯된 경제위기에 직면하였다.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IMF(국제통화기금)의 지원요청으로 최악의 위기는 모면하였으나, 일일이 IMF의 지시와 충고에 따라 국가경제가 운영되는, 소위 IMF 관리체제로 경제주권을 상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 역시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공산주의 붕괴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에 따른 경제상황의 악화로 식량위기가 계속되어 최근 수년간 유엔, 미국, 일본 등의 식량지원에 일정부분 의지하는 상태에 직면하여 있다. 남북이 각기 다르지만,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된 원인은 분단체제 유지를 위하여 양체제 모두가 지나치게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대가를 지불하여 온 데에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통일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남북한 청소년들의 이질화된 체제이념을 뛰어넘어 민족적 차원에서 동질성을 회복시키려는 방안을 찾는 데 있다. 반세기 이상

을 체제와 이념을 달리한 삶의 터전속에서 형성된 남북 청소년들의 이질화된 모습을 찾아내고 그것을 민족적 차원의 동질성으로 止揚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갑작스러운 남북한의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남북한 청소년의 교육과 교류 방안도 살펴본다.

2) 연구의 필요성

통일은 우리 민족이 달성해야 할 지상가치이며 최대과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이 지속되어 가면 갈수록 통일에 대한 열기는 점점 식어가고 한민족공동체의식은 점차 희박해진다. 분단 후 세대들은 민족이 함께 하는 삶의 경험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북한과 남한이 한민족 공동의 삶의 장이며, 과거 역사적·문화적 전통성을 공유하였던 단일 민족이라는 사실을 깊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민족의 애환을 공유하며 살았던 분단전 세대들은 점차 역사의 뒷장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비록 그들은 이데올로기와 6.25 동족상잔의 처참한 희생자들이었지만 동족관념은 강렬하였다. 그러나 여러 조사에 의하면, 남한 청소년들은 동족인 북한주민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반응을 나타낸다. 무관심은 증오보다도 한층 더 떨어진 심리적 상태의 표현이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역설적 표현이다. 그러나 무관심은 철저하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청소년들에게 끊임없이 한민족의 동포형제의를 고취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쌍방적 합의가 전제되고 상호이익이 보장되는 평화통일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호이익의 절충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분단 전 세대들은 남북문제에 대해 감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양극화된 반응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여왔다. 즉 북한 공산집단은 타협이나 화해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이라는 반공주의적 주장과 북한 공산집단도 우리 민족이므로 어떠한 희생과 난관이 따를지라도 통일을 기필코 달성시켜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주장이 맞서 왔다. 반면에 분단후 세대들, 특히 청소년층은 현상적 인식에 근거하여 우리의 희생이 따르는 통일을 고집할 필요

가 없다고 하는, 통일에 대해 외면하고 무관심한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반공주의적 북한 타도론, 감상적 민족통일론, 통일 무의미론들은 극복되어야 하고 한민족의 역사적 인식과 평화와 인도주의적 민족관에 토대한 통일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불안으로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는 통일을 가상하여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혼란을 극소화 할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체제 붕괴 후 북한 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교육의 수립과 대책도 시급히 필요하다. 이를 위한 기초단계로 종래의 체제수호를 위한 안보지향적인 소극적 안보·통일교육을 통일지향적인 적극적 통일·안보교육으로 전환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학교교육을 비롯한 사회교육의 새로운 방향설정이 요망된다.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통일의 당위성을 전제로 하여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연구내용은 과거에 치중하였던 동질성회복 차원보다는 새로운 통합가치를 창출하여 그동안 반세기 가까이 차단되었던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 물음으로 시작된다.

또한 연구방법은 기존 연구문헌, 남북한의 헌법, 법령, 조선노동당 강령, 사회주의 교육의 테제, 남북문제에 관련된 각종 조약, 남북관계 합의서(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 동·서독 관계 조약·합의서 등의 자료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내용분석적 연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記述的 방법을 취한다.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중점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 통일은 왜 필요한가?

나. 통일의 쟁점은 무엇인가?

- 다. 통일과 통일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 라. 남한과 북한은 어떠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들의 청소년 교육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하여 왔으며 그들의 통일정책은 어떠한가?
- 마. 분단 후 북한의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및 청소년 정책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실시되어 왔는가?
- 바. 현재의 우리 통일교육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점은 무엇인가?
- 사. 남한 청소년들의 통일관, 북한관은 어떠한가?
- 아. 남북한 접촉과 교류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그것은 청소년 교육과 교류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 자. 통독 이전의 서독 정부가 전개한 청소년교류와 교육정책은 어떠하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했는가?
- 차. 독일의 청소년 교류 및 교육정책이 한국의 통일대비 교류와 교육정책 수립에 주는 시사점은 어떠한 것들인가?
- 카. 남북한 청소년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와 교육정책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2) 연구방법

(1) 문헌분석

- 가. 남북한 공동발표문, 공동합의서, 남한의 대북제의 및 북한의 대남제의
- 나. 남북한의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 조선 노동당 강령 및 사회주의 교육체제
- 다. 남북통일에 관련된 단행본, 연구보고서, 자료집
- 라. 북한교육에 관한 단행본, 연구보고서, 자료집
- 마. 서독의 통일교육 및 청소년 교류에 관한 단행본, 연구보고서, 자료집
- 바. 독일 통일전후의 정치교육에 관한 자료
- 사. 통독 전후의 동서독 주민 및 청소년 의식조사 자료

아. 통일 독일의 교육통합에 관한 자료

(2) 면담 및 설문조사

가. 북한 연구전문가 및 탈북자 면담조사

나. 청소년들의 통일관 및 북한관 설문조사

4. 연구의 시각 및 문제점

1) 연구의 시각

남한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북한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남북 각 체제의 기초 이데올로기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내지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북한은 60년대 이래 주체사상이라는 유일사상을 내세우고 있다. 즉 두 체제 모두가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표방하면서도 그의 진정한 실현 방법으로 남한에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논리를,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논리를 표방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남한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민주주의, 북한은 집단의 평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족주의 시각에서 양쪽 체제 이데올로기를 통합·포섭하려는 제3자적 통일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출발한다. 민족주의 입장에선 제3자적 통일 이데올로기는 과학적인 학문성을 견지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통일의 당위성과 규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이는 양측 모두에게서 비난과 질책의 표적대상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도 냉전시대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이나 사회주의적 적화통일은 두 체제가 양립하는 힘의 균형관계가 유지되는 한 불가능하다.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상대방은 체제 유지능력을 상실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80년대 말의 구 소련 사회주의 연방체제의 붕괴를 시작으로 하

여 동구 공산권의 몰락과 동독의 서독에로의 흡수통합과 때를 같이한 북한의 식량위기에서 비롯한 경제파탄은 북한체제의 몰락을 가시적으로 판단하여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합하는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이 고조되었었다.

그러나 97년 말에 한국에 몰아닥친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는 설령 북한체제가 붕괴된다 하더라도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여 통합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축적되어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적 통일방안이나 사회주의적 적화통일은 어디까지나 어느 한편의 기득권을 전제로 하는 통일방안이다. 한편의 기득권이 옹호되면, 다른 한편의 기득권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제로섬 게임 이론에 따라 한편이 이익을 본 만큼 상대방은 손실을 입게된다. 이렇게 통일에 대한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한간의 접촉과 대화는 평행선만을 그을 것이다. 이제까지 남북 양측의 기득권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도 미약한 통일방안을 되풀이 하여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냉전시대의 구시대적 통일논리는 불식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는 명백히 그 비능률성이 입증되었다. 자유주의적 혼합경제체제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와의 생산력 경쟁에서 승리하였다. 그 결과 한 때 거의 세계인구의 절반을 차지했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바탕으로 해 왔던 사회주의 국가들은 몰락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현재도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일방적 승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는 20세기 초반부터 자기혁신을 통한 자체모순을 자체적으로 해결해 온 혼합경제체제, 즉 복지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하자면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승리가 아니라 복지주의적 혼합경제에 바탕한 시장경제체제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한 사회국가적 복지원리의 승리이다.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국가적

복지원리를 포괄할 때 꽃피울 수 있는 정치원리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 자체의 몰락이라기 보다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 내재해 있는 비민주적 정치원리의 몰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한민족적 시각이란 바로 민주주의적 시각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란 대화와 타협, 상대방에 대한 관용과 존중을 그 원리로 한다.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민족 대단결의 바탕위에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원칙을 합의해 놓고서도 서로가 한편만의 주장과 이익만을 고집하는 것은 통일을 빙자하여 통일을 방해하는 역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남과 북은 한민족이라는 최대공약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민족이라는 최대공약수에 기반하여 오늘날 남과 북이 처해있는 난국과 위기를 헤쳐 나아가면서 한민족 생존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통일논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2) 연구의 문제점

본 연구는 통일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한 청소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와 교육 정책방안 개발에 목적이 있다. 과학적 법칙과 이론을 도출하기 위한 순수학문 연구에서 엄격하게 요구되는 가치중립적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통일문제 접근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에 바탕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가치지향적·규범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연구의 여러 부분에서 연구자의 자의적·주관적 해석과 판단 가치가 피력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통일 및 북한문제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견해와 입장도 각기 다르다. 특히 관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하여 이해 득실에 따른 반응도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연구자료의 선택과 해석에 모든 각계각층의 요구를 골고루 만족시킬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밖에도 북한 원전자료의 부족은 연구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부족한 자료마저 자료 접근의 제한성과 이용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의 객관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공개한 자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혼란을 야기한다. 또한 북한방문기 및 탈북자들의 증언 등은 단편적이거나 주관적 판단이 게재되어 공통적 일관성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또 북한관련 뉴스나 기사는 오보로 확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미확인된 추측기사 또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실이 왜곡된 의도적 기사도 간혹 있기 때문에 북한 실상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II. 통일정책

1. 통일의 의의와 통일원칙

1) 통일의 의미

辭典的 의미로서의 통일은 나누어진 것들이 하나로 되는 것, 또는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관련되어 떨어질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철학적 변증법에서의 통일은, 상호 대립 모순 상태가 자기부정 과정을 거쳐 질적으로 전환된 높은 차원의 새롭게 고양된 전체로서의 하나의 상태가 통일이다.³⁾

여기에서 논의되는 ‘민족통일’은 단순히 사전적 의미의 통일을 넘어선 철학적 의미의 통일을 뜻한다. 그러므로 통일은 복고적인 원상회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역사 발전에 발맞추는 미래지향적인 창조적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민족이 추구하는 통일은 남북한이 원래 하나의 민족공동체였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다음과 같은 통일이다.

첫째, 민족의 단일성을 회복하고 분단되어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하나로 재결합하는 민족통일이다. 이는 두 개의 국가가 단순히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외형상의 국가통합이 아니라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극복하는 민족 내면적 통일을 의미한다. 즉 한민족이 하나의 민족가치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다.

둘째, 두 개로 나뉘어진 국가주권체제를 하나의 국가주권체제로 하는 체제통일이다. 즉 정치적 통일로 단일주권국가를 이루는 것이다. ‘한민족’이 하나의 통치체제를 이루어 단일한 법질서 속에서 하나의 국가공동체를 구축하고 하나의 민족국가를 형성하여 하나의 국민이 되는 것이다. 분단으로 인한 민족역량의 낭비를 막고 민족에너지를 극대화하여 현재 남북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한민족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통일이다.

셋째, 사상, 이념, 제도, 생활양식, 사고방식 등 남북한간의 이질성을 극

3) 哲學辭典, 平凡社刊 1971年版, 999面 參照.

북하여 사회의 여러 속성들이 조정·통합되는 사회·문화적 통합이다. 남북한은 반세기 이상을 접촉이 단절된 이질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오면서 동안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심각한 이질화 과정을 겪어 왔다.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과 사상에 바탕하여 생활양식과 제도가 바뀌어 사회주의적 사회문화가 형성되었고, 남한은 서구 자본주의적 이념과 사상에 바탕하여 생활양식과 제도가 서구화되어 전통적인 문화가 크게 변질되었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서로서로가 아끼고 존중하는 가족문화에 바탕한 전통문화를 되살려 현대적 감각과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문화적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다.

넷째, 통일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더 나가서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국제적 시각에서 한민족이 하나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는 소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4대 강국들의 균형추로서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지로서의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히 민족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인류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국제적 의미가 있다. 즉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원대한 미래상의 설계도이다.

결국, 통일은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고,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이 어느 일방만의 번영과 복지, 이익만을 보장하고 어느 한편의 희생과 불행이 요구된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통일이 아니라 한편이 다른 한편을 병탄하는 폭력적 합병이다. 병탄적 통합은 쉽게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가능하다 할지라도 결과에 있어서는 전체의 화합과 발전·번영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통일은 남북 어느 한편의 특정계급, 특정집단, 특정세력, 특정 정파의 독점적 전유물이 될 수 없다. 이는 통일 국가사회가 민족 전체의 복지와 번영을 전제로 해야 하는 당위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일의 주체는 민족성원 모두이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무산자 중심의 적화통일론, 남한의 진보적 학생들이 주장하는 민중통일론, 정부 엘리트

중심의 독점적 통일론 등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2) 통일의 당위성

「남북 통일은 꼭 필요한가? 통일하지 않고도 잘 살아왔는데」라는 통일에 대한 회의와 의문을 제기하는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통일에 대한 회의와 의문은 당연하고 타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분단 이후의 세대들에게는 현재의 양체제 유지를 깨는 새로운 체제의 건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또한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개편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었을 때 한 정치가는 ‘국가보안법이 절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준 일이 있는가?’라고 반문한 일이 있다. 그 정치가의 이 같은 발언은, 바로 오늘날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 내지 부정적인 생각을 대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발언도 역시 청소년들의 생각과 같이 분단이라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부정적이라고 해서 통일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다만 분단상태에서 태어나 살다보니 그 생활이 체질화되어 분단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일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대답은 한마디로 우리 민족이 평화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는 민족사적 측면, 인도적 측면, 국가발전적 측면, 국제평화적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정희 외, 1997: 30-33, 59-60).

(1) 민족사적인 측면

우리 민족은 수 천년에 걸쳐 단일민족으로써 단일국가를 형성하여 문화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왔으며, 수많은 국난과 외침에도 불구하고 운명공동체로서의 민족적 단결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단합된 민족의 저력을 연

면히 이어왔다. 이와 같은 민족의 무궁한 생명력은 일제의 폭압 아래 민족사적 단절의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끈질긴 저항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새로운 민족사의 광복을 맞이한 조국은 불행하게도 외세에 의한 인위적 민족분단을 강요당하였으며, 이러한 불행은 역사를 통해서 형성 발전돼 온 단일민족국가로서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

더욱이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는 남과 북의 정치체제는, 체제수호와 안보차원에서 체제경쟁을 일삼아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어 끌어내리고 서로가 상대방의 약점과 치부를 들추어 내고 폭로하여 양측 모두가 깊은 상처를 입어 왔다. 민족적 차원에서 보면, 상대방의 약점과 치부는 바로 ‘한민족’의 약점이며 치부이다. 상호 비방과 헐뜯기는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여 감정적 대립만을 격화시켜 통일의 길을 더욱 멀리할 뿐이다. 상대방 상처 입히기로 인하여, ‘한민족’이 국제적으로 당한 수치는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도 통일은 우리민족이 이룩해야 하는 민족적 과제이다.

(2) 인도적 측면

인위적인 국토분단은 수많은 동포들에게 인간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었다. 우리 민족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가족과 민족의식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에 가족과 친척이 헤어져 생사와 소식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이산가족의 수가 약 천만에 달하고 있다. 이들 이산가족의 고통은 가족이 헤어졌다는 고통 외에도, 사회생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북한에서는 가족이 남한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출신 성분이 문제되어 불순한 반동분자라는 정치적 감시와 핍박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고통을 받아야 한다.

강도에 있어서는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약한 정도겠지만, 역시 남한의 경우에도 가족 중 월북자가 있는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해외 출국이나 취직에서 불이익

을 당했거나, 특히 고위공직자 취임에서 가족 중 월북자가 있다는 이유로 공직취임을 못하는 극단적인 사례마저 없지 않았다.

최근 우리 사회를 소용돌이치게 한 ‘북풍’시비의 근원도 역시 분단의 비극에서 유래한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제기되어 온 입후보자들의 전력시비는 어제오늘의 작태가 아니다. 50년대의 자유당정권 시절의 조봉암 후보의 전력 시비, 60년대 군사정권 시대의 박정희 대통령의 전력에 대한 의문제기⁴⁾, 90년대 2차에 걸친 대통령 선거 당시의 김대중 후보의 전력과 사상시비, 문민정부시대의 일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상검증 시비는 여야를 막론하고 분단을 악용하여 특정 집단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대표적인 악의에 찬 정치적 술수였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모든 근원은 분단에서 비롯되었다.

(3) 국가발전적 측면

나라가 발전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꼭 필요하다. 분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분야는 정치와 경제분야일 것이다.

① 정치발전의 필요성

한국에 민주정치 제도가 도입되어 민주헌정이 시작된지도 정확히 반세기가 지났다. 역대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정권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분단에서 찾았다. 그들이 정권 유지와 연장을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구실은 북한의 침략위협, 전력, 사상시비 등과 같은 분단상황을 이용한 안보이데올로기였다.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남침 위협이나 남한 붕괴 책동이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북한의 남침 위협과 남한 붕괴 책동은 항

4) 박정희 장군의 용공전력에 대한 의문제기는 오히려 군사정권의 강력한 반공정책과 친미정책을 부추긴 결과를 낳았다는 추측도 배제할 수 없다.

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정권은 자기들 필요에 따라 북한의 위협과 책동을 야당과 국민 탄압의 구실로 삼아 정권을 유지하고 독재를 합리화 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분단은 남북 모두의 민주주의 발전의 장애물이 되었고 인권 탄압의 구실이 되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에 바탕한 정치적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한 선결과제로 가장 주요한 것은 통일이라 생각된다.

② 경제발전의 필요성

남북한 모두가 현재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해방 후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바탕으로 半封建의 식민지 예속성 경제를 극복하면서 나름대로의 성장과 발전을 지속해 왔다. 한때 남한은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정책의 성공 모델로, 북한은 자력갱생형 자급자족 경제정책의 성공 모델로 평가되어 각각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모범으로 국제적인 각광을 받았으며 주목의 대상이 되었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서 표면화된 북한의 식량위기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성과 비능률성을 입증하였으며, 바로 그 뒤를 이어 표면화된 남한의 외환위기는 개발독재형 경제성장의 문제점과 한계성을 露呈시켰다. 이는 분단의 부담 속에서의 경제성장은 그 한계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은 경제위기 극복에 총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분단부담에서 벗어 나야 할 절실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일제는 한반도에 대한 효율적 식민지 수탈을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역할을 분담시켰다. 남한은 식량공급지로서 역할하도록 농업을 장려하였고, 북한은 지형과 천연자원의 이점을 이용하여 수력자원을 비롯한 전쟁 수행에 필요한 각종자원과 물자의 공급지로서 역할하도록 공업을 장려하여 식민지 수탈의 효율성을 높였다. 한반도는 식민지 종속 경제체제 하에서 남북간 상호보완적 분업체제를 이루는 산업구조를 유지하여 왔었다. 이러한 남북 분업적인 상호보완적 산업구조가 남북 분단에 따라 붕괴되었을 때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남북 통일은 남북이 동시에 안고 있는 경제발전의 취약점을 상호·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남북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최선의 방안이고 첩경이다.

조동호는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에서 다음과 같이 통일의 이익을 지적하고 있다.⁵⁾

통일편익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얻게되는 경제적·비경제적 편익”으로 정의된다. 분단비용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에 부담하는 경제적·비경제적 비용”으로 정의된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통일이 되었다라면 얻을 수 있었을 것이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비경제적 편익”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단비용의 구체적 내용은 통일편익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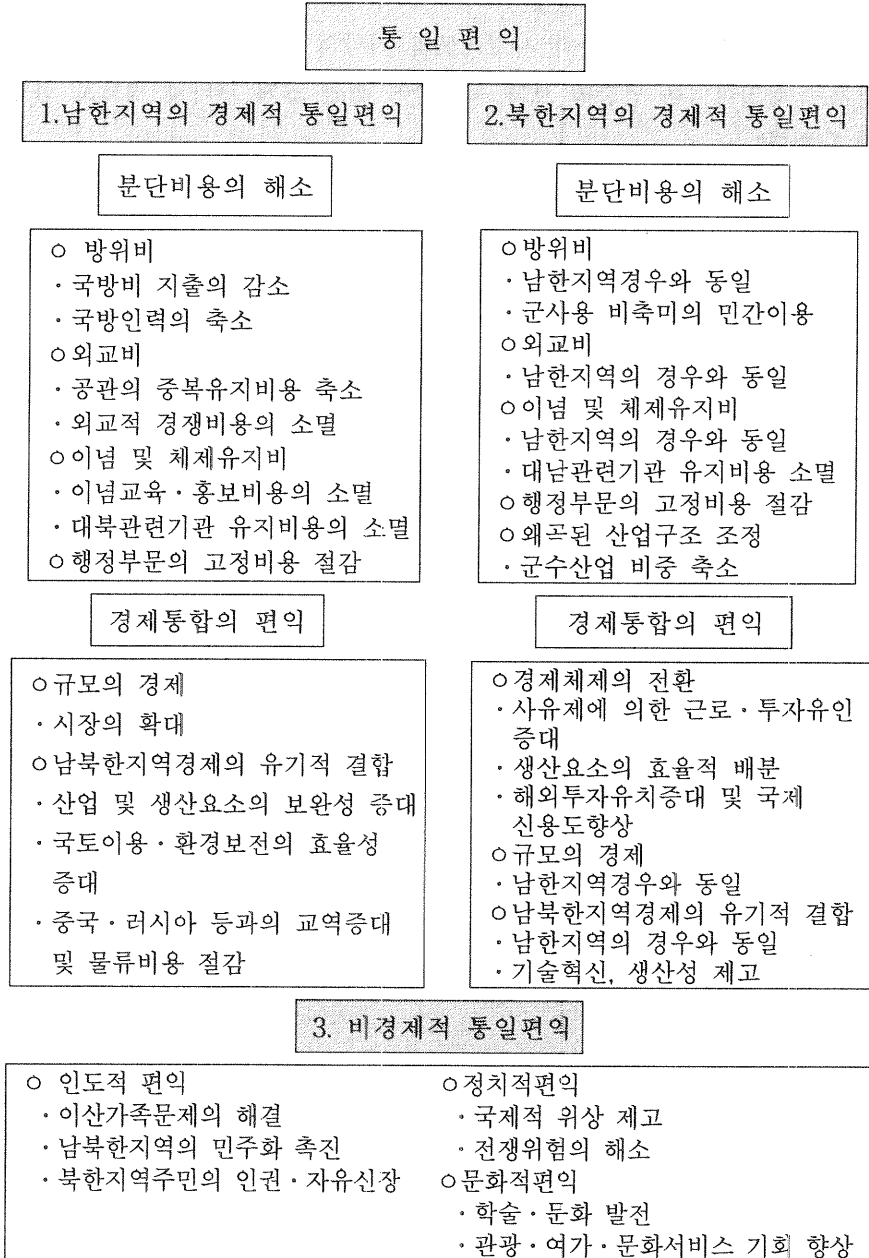
통일의 경제적 편익은 ① 분단유지 비용의 해소(방위비, 외교비, 체제 유지비 등의 절감), ② 경제통합에 따른 편익(시장의 확대에 의한 규모의 경제실현, 남북한 생산요소 및 산업구조의 유기적 결합, 국토이용 및 환경보전의 효율성 증대, 중국 러시아 등과의 교역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으로 나눌 수 있으며, 비경제적 통일편익으로는 ① 인도적 편익(이산가족문제 해결, 북한주민의 인권 신장 등), ② 정치적 편익(국제적 위상제고, 전쟁 위협의 해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통일 편익의 상당 부분은 비록 화폐가치로 나타낼 수는 없으나 매우 소중한 것이다.

위의 지적과 같이 통일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계량화하여 화폐가치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은 계량화가 불가능하여 화폐가치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로서 수치화 할 수 있는

5) 1997년 6월 5일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을 주제로 민족통일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학술연구발표회에서 발표. 조동호,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민족통일연구원의 학술회의총서, 97-02, 57-111쪽.

통일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통일 이익을 남한만으로 국한시켜 생각하는 것은, 구시대적 냉전의 근시안적 사고로 하루빨리 전체 민족적 사고로의 지양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통일이익은 남한쪽 보다 북한쪽이 훨씬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2-1> 통일 편익의 분류



※ 자 료: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학술회의 총서 97-02), 민족통일연구원, 67면.

(4) 국제평화적 측면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민족적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배타적 애국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실현될 수도 없고 만약 그것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한반도의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세계평화와 인류복지 번영에 기여해야 하는 당위성에 근거한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세계 4대 강국인 중국, 러시아와는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일본, 미국과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는 이들 4대강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져 있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분쟁은 국제적 분쟁으로, 한반도의 평화는 국제평화로 직결된다. 이러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한반도는 강대국들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고 이것이 분단으로 이어져 현재까지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한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불씨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통일은 국제평화의 안전판을 구축하는 길이다.

3) 통일의 기본 원칙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는 통일의 기본원칙을 합의한 다음과 같은 ‘7·4남북 공동성명’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7·4남북 공동성명(1972.7.4)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장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하루 빨리 가져와야 한

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의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이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여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 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사이에 상설 통신 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 사항을 촉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을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1일전후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김영주

남북이 합의한 ‘7·4남북 공동성명’(이하에서는 공동성명이라 한다)에서
의 통일의 기본원칙은, 자주통일 원칙, 평화통일 원칙, 민족 대단결에 의
한 통일 원칙으로 집약되어 있다.

(1) 자주통일 원칙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여 ‘한민족’이 통일의 능동적 주체가 되는 자주통일의 원칙을
역설하였다.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한반도의 주인
인 남북한 주민이 주동이 되어 그들 의사에 따라 달성되어야 한다는 자결
의 원칙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자명한 통일원칙이다.

외세에 의한 분단이 민족의 비애와 고통을 안겨주었듯이 외세에 의한
통일은 그들의 이해관계와 편익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전체 한
민족의 기대와 희망과는 거리가 먼 통일이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소수
특정집단이 외세와 결탁하여 전체 민족·국가를 팔아 먹은 한일 합방의 쓰
라린 역사를 몸소 경험했다. 외세 의존적 또는 간섭적 통일도 그와 크게
다를바 없다.

그러므로 통일은 외세의 간섭 없이 한민족이 자결권을 행사하여 자주적
으로 성취해야 한다. 통일 조국이 한민족의 이익과 장래가 보장되는 주권
국가가 되기 위한 통일의 전제적 조건은 자주통일의 원칙이 고수되어야
한다.

(2) 평화통일 원칙

우리가 소원하는 통일은 통일 그 자체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평화를 이룩하여 한민족이 행복과 번영과 안정을 누리
면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통일의 절차와 방법은 평화적이어야 하며, 한민족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세계평화를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통일과정에서도 민족의 안정과 세계평화가 보장되어야 한다.

통일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할 수 없다면 굳이 통일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통일을 위하여 국력을 경주하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기울이는 것은 한민족이 평화와 안정속에서 번영을 누리자는 것이다. 평화적 통일만이 통일 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그러므로 통일은 상대방의 굴욕과 자존심을 손상케 하는 힘에 의존한 무력통일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설득을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통일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공동성명이 발표되기 전까지 평화통일에 대한 논의는 철저하게 금기시 되었었다. 평화통일 논의는 북한에 동조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로 간주되어 평화통일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동조하는 수많은 양식 있는 학생, 지식인, 정치인들이 투옥되고 심지어는 공권력에 의하여 생명까지 빼앗겼다. 당시는 失地 수복을 위한 북진통일, 멸공통일, 승공통일, 반공통일 등의 북한타도 통일 논의만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분위기속에서 공동성명이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통일정책의 전환으로 모든 국민들을 통일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게 하였다. 통일은 일방적인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의 대화와 타협, 흥정과 거래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통일은 쌍방의 욕구와 바람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3) 민족 대단결 통일의 원칙

공동성명에서는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라고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는 민족을 최우선시 하는 민족통일 원칙에 합의하였다. 즉 남북한의 이질적인 사상, 이념, 제도는 민족에 통합되고 민족에 의하여 극복되

어야 할 민족의 하위개념이라는 점에 합의하였다. 민족은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원보다 한층 높은 차원의 상위 가치라는 점을 남북한 당국 모두가 인정하고 합의하였다.

통일은 민족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위이다. 통일은 갈라진 민족이 하나되어 민족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누리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이 남과 북을 잇는 유일한 끈이다. 남북을 연결하는 민족이라는 끊을 수 없는 질긴 끈이 있기 때문에 한민족은 민족분단의 고통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일하자는 것이다.

통일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민족이 단결하여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 오순도순 함께 살자는 것이다. 즉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는 두 국가체제로 나누어져 민족이 분열되어 있는 현상을 타파하여, 하나의 국가를 이룩하여 하나의 민족국가로서 발전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의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은 민족국가의 사상과 이념에 포섭되고 동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다. 민족은 통일의 알파이며 오메가이므로 통일의 접근도 민족문제에서 출발하고 통일의 완성도 민족의 단결로 끝난다. 민족의 대동단결이 다름 아닌 바로 통일이다. 서독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동독이 전체 독일의 일부이며 동독 주민은 독일 민족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정치교육을 반복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의 대원칙에 남북은 합의하였다. 공동성명 문안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하나 간과될 수 없는 민주주의 통일 원칙이 있다.

(4) 민주주의 통일 원칙

민주주의적 통일 원칙이 공동성명 문안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3대 원칙 속에 포괄되어 있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어휘의 모호성 때문이 아닌가 싶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오늘날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로

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을 근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국가, 사회, 사용자에 따라 아주 다른 다양한 의미로 널리 쓰여지고 있다. 예컨대 서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사회의 인민민주주의, 서구 진보정당의 사회민주주의, 과거 유신 독재 시대의 한국적 민주주의 등이다. 여기서 민주주의란 주권이 국민에게 귀속되고 주권행사에 있어, 국민 각자가 자유롭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및 사회제도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적 통일 원칙이란 통일에 대한 모든 선택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고 또한 그 선택권이 국민 각자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행사될 수 있어야 하며, 통일후의 국가체제의 선택도 물론 국민의 자유로운 주권행사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 남북한의 통일정책

1) 남한의 통일정책

남한의 통일정책은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으로서 간단히 줄여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라 한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통일정책 현안으로 굳혀지기까지는 변화무쌍한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와 그에 따른 수 없이 많은 통일정책 변화의 결과이다. 이러한 통일정책의 변화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정책의 변천사는 곧 남한의 대북한 경쟁력 성장사이기도 하다(이흥구 외, 1984: 202-205). 남한이 상대적으로 북한보다 열세에 있었던 1, 2공화국의 통일정책은 수세적이고 회피적이며 대외 의존적이었다. 대북관계에서 불리한 상황과 국내외적으로 냉전적 상황에 직면한 남한정부는 진정한 실현성을 외면한 채 이상적·급진적 접근을 중심으로 남북한을 통일해야 한다는 정책을 펴왔다. 1970년대 초반까지 남한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라는 비현실적 통일방안은 바로 한국국력부족의 인식에 기초한 자구책에 불과한 것이었다(류석열, 1997;

393-395).

남한은 정부수립 초기부터 비현실적인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라는 통일방안을 한동안 주장했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을 정치구호화하여 통일문제를 미수복 지역에 대한 수복의 개념으로 보고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고취하였다. 자유당 정부는 제네바회담⁶⁾ 이후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통일정책기조로 회귀하였다.

제2공화국의 통일정책도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의한 유엔감시하의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라는 제1공화국 통일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여 북한 불승인, 두 개의 한국론 배제를 고수하였다. 제1공화국의 통일정책과 다른점은 북진통일론이 공식적으로 부인되었다는 점이다.

반공을 국시의 제1로 내세운 5. 16군사 쿠데타에 기반하여 탄생하게 된 제3공화국의 통일정책은, 반공을 전제로 한 종래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였으나 ‘선 건설 후 통일’이라는 원칙에 보다 역점을 두어 통일방안의 논의보다는 통일을 위한 국력배양에 힘쓴 이른바 ‘통일역량 배양정책’을 세웠다. 즉 북한을 제압할 힘의 우위를 확보한 후 한국의 제도를 북한에 확대한다는 것이다. 1968년 북한의 청와대 기습사건과 미함 푸에블로호의 나포사건은 공화당 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더 한층 격화시켜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고 반공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와 중공의 유엔에서의 중국의 대표권 획득, 미국과 중공의 관계개선, 미·소의 화해와 해빙무드는 남한의 통일정책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했다. 이리하여 1971년 남북대화가 시작되었고 다음해인 1972년 7월 4일 남북이 통일원칙에 합의한 7.4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이제까지 남한정부가 지속해 오던 통일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남한정부가 북한정권의 실체를 처음으로 인정하여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삼았으며 유엔을 통해서가 아니라 남북 당사자간의 직접적이며 평화적인 대화를 통하여 통일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이다.

6) 1954년 제네바에서 휴전 뒷처리와 한반도 통일을 논의한 회담으로 남한에서는 변영태 외무부 장관이, 북한에서는 남일 외상이 참가했다.

제4공화국(1972. 10-1981. 2)의 통일정책은 ‘선 평화 후 통일’의 단계적·점진적인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을 채택하였다. 남북한은 평화공존의 단계를 거쳐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켜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일에 이르도록 한다는 통일정책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천명한 것이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이다⁷⁾(이정희 외, 86-90).

제5공화국(1981. 2-1988. 1) 정부가 내세운 통일정책은 「민족화합민주 통일방안」이다. 이 통일방안은 크게 화합과 통일의 두 단계를 거치는 점진적 접근으로 남북간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에 걸친 제반교류를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당시까지 남한정부가 제시한 모든 통일정책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단계적 방법에 의한 구체성과 실현성에 중점을 둔 ‘선 평화 후 통일’의 종래의 원칙을 유지했다(류석열, 1997: 396). 8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된 공산권의 붕괴, 서독의 동독 흡수통합, 중국의 개방화, 88 올림픽 개최에 따른 국민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시각변화 등 대내외적인 통일여건이 급속히 호전되어 제6공화국 이래의 문민정부는 「공산권 거주 동포들의 자유로운 모국방문」 제창, 「7.7특별선언」,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제시, 「남북 기본 및 부속합의서」 채택들은 전에 볼 수 없었던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6공화국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비정치적인 측면에서 점진적인 접근을 고집해 왔던 3, 4, 5 공화국의 정책과는 달리, 정치·군사적인 문제의 해결도 동시에 추구하며, 특히 군사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현존 휴전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남북연합」의 구성에 있어서도 남한은 인구면에서의 절대우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동수대표로서 남북연합 각 기구들을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종래의 통일방안이 점진적·단계적 접근에 바탕을 두고 있었던

7) 1974년 8월 15일에 발표한 평화통일 원칙은 단계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한 상호불가침 협정체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상호 문호개방, 토착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대북제의를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것과는 달리 상당히 균형성 있는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통일의 원칙에 입각하여 현재의 불신, 대립, 적대적 관계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① 화해협력의 단계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는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하는, ②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마지막으로 1민족 1국가의, ③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것이다.

(1) 화해협력의 단계

남북한이 냉전구조의 산물인 적대와 불신관계를 청산하고 신뢰 속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해 가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에 현실적으로 두 개의 정치체제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공존공영의 협력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과 북이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통해서 한층 더 깊은 신뢰를 쌓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남북한은 냉전적 사고에서 공존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남북한은 경쟁상대가 아닌 한민족 전체의 번영을 위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2) 남북연합단계

남북한 간의 관계개선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정례화되면서 제도화된 남북기구들의 탄생과 운영으로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남북은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를 이룩해 나간다. 남북정상회담, 남북각료회의와 남북의회 모임을 정례화시켜 남북간에 남아 있는 이질적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한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로 발전하게 되며, 남북연합기구에서 국가통합, 즉 남북의회 대표들이 통일헌법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와 제도의 통일을 위한 여러 방법을 논의하게 된다. 휴전체제는 평화체제로 전환되며, 남북 군축회담이 추진되고 경제협력·교류도 활성화된다. 이 단계가

되면 남북관계는 제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진전되는 것이며, 냉전적 대결과 증오는 상당히 해소된다. 이 단계를 관리해 나가는 데 특히 요구되는 정신은 공존공영이다.

(3) 통일국가단계

남북의회대표들이 제정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실시되는 남북한 총선거로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형태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통일한국은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와 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자유민주주의의 통일된 민족국가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통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회·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공동체적인 통합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통일정부는 민족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가족공동체처럼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통일국가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은 물론 인류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통일을 성취하는 단기적 방안은 흡수통일, 장기적 방안으로는 합의통일을 생각할 수 있다. 흡수통일은 북한을 굴복시켜 한국의 체제로 흡수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남북한 쌍방이 많은 희생을 치루어 민족전체의 불행을 가져올 것이고, 합의통일은 장기간의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통일이 오래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남북한 어느 일방에만 유리한 통일이 아니고 남북한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복지국가를 이루어 남북한 국민들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다.

2) 북한의 통일정책

북한의 통일정책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통일방안이다. 북한이 남북연방제를 최초로 제의한 것은 1960년 8월 14일이었으며 제의된 연방

제의 내용은⁸⁾ 현재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당시 남한의 상황은 4.19학 생혁명으로 사회가 극도로 불안하였으며,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국론의 일치를 보지 못했던 사회·정치적인 혼란기였다. 북한의 이러한 제의는 당시 남한의 민주당 정부에 의하여 즉시 거부되었으나 남한의 일부에서는 지지를 받았다.

그 후 1972년 남북적십자회담과 정치회담이 진행되는 중에 북한은 다시 연방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김일성 주석의 1972년 4월 27일 일본의 NHK와 아사히신문 기자들과의 기자회견, 1972년 9월 17일 마이니찌 신문과의 기자회견, 1973년 남한의 6.23 「평화통일의교정책」 선언에 대한 대응에서 끊임없이 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왔다⁹⁾

소강 상태에 있던 북한의 연방제 주장이 다시 제기된 것은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7.4남북 공동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의 대단결을 제시하며 종래의 ‘고려연방공화국’에 ‘민주’를 첨가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Con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Koryo)’이라는 연방제를 제의 했다¹⁰⁾. 1991년 신년사에서 북한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자’고 제의 하였으며 1992년 9월 14일 북한은 남과 북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8) 당시에 제안된 요지는 ① 외국의 간섭없는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실시한다. ② 남한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한 연방제를 제의한다. 상기제안 등을 남한이 동의치 않는다면, ③ 남북한 실업계 대표로 구성되는 순전한 경제위원회라도 조직한다. ④ 남북한 문화시설 왕래와 과학, 문화, 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를 다시 한 번 제의한다. ⑤ 남한에서의 미군의 즉시 철수를 요구하며, 남북한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할 것을 제의한다. ⑥ 이상의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 남북한 대표들이 합의할 것을 남한 당국과 정당, 사회단체 및 개인 인사에게 제의한다

9) 그 골자는 ① 먼저 대민족회의를 소집하고 민족적 단결을 이룩한다. ② 이 기초 위에 남북한의 현존 두 제도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남북연방제를 실시한다. ③ 연방 국가의 국호는 ‘고려연방공화국’이라 한다. ④ 고려연방공화국은 나라의 분열을 막고 남북간의 연계와 합작을 전면적으로 실현하여 완전한 통일을 앞당긴다.

10) 많은 북한연구 학자들은 이 제의를 북한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막아보려는 의도 아래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적 대단결을 평화통일 이후로 연기하려는 술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있는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선중앙방송, 1992. 9. 14).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안은 그동안 내용이 수정되어 구체화 되었지만 그 골격은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다. 이 방안은 구성의 선결조건, 조직과 기능, 단결과 합작으로 되어 있다.

(1) 전제조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의한 연방제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한이 다음과 같은 선결조건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반공정책과 국가보안법폐지, ② 통혁당(1985. 7.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을 비롯한 개인과 단체의 연공활동 합법화, ③ 현 남한정권의 퇴진과 민주주의 정권으로 교체, ④ 대미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 미군 철수 미국의 두 개의 조선 조작책동과 남한에 대한 내정간섭 중지 등이다.

(2) 조직과 기능

고려연방공화국의 조직과 기능에 있어서 기본원칙은 ① 남북한 사상과 제도를 상호 인정하고 용납하며, 절대화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경제제도와 기업체질을 인정해야 한다. ② 앞으로 이루어질 연방공화국은 통일국가를 성취하기 위한 과도적 조치가 아니고 완전한 통일의 면모를 갖춘 연방형식의 통일국가이다(1991년 북한은 연방형태를 과도적 조치인 국가연합 형식으로 수정). ③ 어느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불력 불가담 중립정책을 유지한다.

이러한 원칙 하에 연방조직은 ① 남북 동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 구성, 그 상설기구로서 연방 상설위원회를 조직하고, ②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는 남북이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을 각각 선출, 그들이 윤번제로 운영하며, ③ 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지역적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장차 중앙정부의 기능

을 높여 나감으로써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연방의 최고기구인 최고민족연방회의는 ① 남과 북의 지역정부를 지도하고, ② 정치, 방위, 교역문제를 포함한 국가의 전반적 이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하며, ③ 남과 북의 단결, 합작을 실현하며 연방상설위원회는 최고민족연방회의의 휴회 중 업무를 수행하며, 남과 북의 지역정부는 지역자치체로서 연방정부 지도 아래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3) 단결과 합작

이상과 같은 기구를 통해 북한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안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남과 북이 단결과 합작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수립된 후 시행할 정책으로서 「10대 시정방침」이란 것을 내놓았다. 「10대 시정방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활동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치정책 실시. ② 전 지역 전 사회의 민주주의 실시와 민족의 대단결 도모. ③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여 민족경제를 자주적으로 발전. ④ 과학, 문화, 교육분야에 있어 교류와 협조를 실시하여 민족문화전통, 민족교육을 발전. ⑤ 남과 북의 교통, 체신을 연결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자유로운 교통, 통신시설을 활용. ⑥ 노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전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복지를 집중적으로 증진. ⑦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연합군을 조직하여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의 보위. ⑧ 해외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 보호. ⑨ 통일이전의 대외관계의 올바른 처리와 두 지역정부의 대외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정. ⑩ 통일국가로서 우호적, 평화 애호적인 대외정책 실시 등이다.

<표 2-1>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특성 변화

내용 일자	현 제도	연방제 성격	연방제 조직	합작, 교류	경제 위원회	통일조정	자유 총선거	전 제	기 타
1960.8.14 (8.15해방 15주년 김 일성 연 설)	현 제도는 그대로 두고, 독자적 활동 보장	통일적 연방 정부가 아닌 고도의 연방제 국가 연합적 성격	두정부의 동수대표로 구성하는 최고 민족 위원회 개별적 외교활동 보장	남북의 경제·문화교류와 상호협조 보장, 남한 경제 파괴 수습	실업계 대표로 남북경제 위원회 조직	이해 촉진으로 평화적 통일여건 조성	통일 여건 조성되면 남북자유 총선거	남한이 자유 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당단체 인사가 모여 회합	통일의 한 방법이며 과정으로서의 연방제
1972.9.17 (김일성 매일신문 기자회견)	현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사회제도로 상대에 강요치 않는 원칙	통일정비에 이르는 과도적 연방제, 국가 연합성격이 나타남	최고민족 위원회는 남북한의 정치·경제·군사·문화의 제문제 해결	남한경제 상태 개선, 경제·문화·예술·스포츠·기자·신문·잡지 교류, 기자대표 및 신문사지국 설치, 남북스포츠 단일팀 구성	언급없음	불신해소, 신뢰조성, 민족적 단결, 외부세력 배척, 평화통일 달성	신뢰회복, 민족적 단결 후 외세간섭 없이 남북 총선거	외세의 간섭이 없어야 함	통일에 이르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연합체
1973.6.23 (김일성체 코당 정부 대표단 환 영연설)		과도적 연방제 명칭은 고려연방 공화국 단일국호로 유엔 가입, 국가 연합 성격	최고민족 위원회는 남북이 국제무대 공동 진출 정치·군사·외교·경제·문화적 협력 추진	남북한의 전면적 관계와 합작을 실현		연방제는 안전한 통일을 앞당김		외군철수, 군축, 무기반입금지, 평화적 협정체결, 대민족회의 소집과 민족적 단결을 기초로함	

1974.11.27 (제29차 유엔총회 이종목 연설)	현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사회제도 상대에 강요하지 않는 원칙	과도적 연방제 명칭은 고려연방공화국으로 유엔가입, 국가연합 성격	연방제하에서는 대민족회의에서 도의된 방침을 구현	이해와 신뢰를 깊게함	언급없음	연방제는 완전한 통일을 앞당김	신뢰회복, 민족적 후견, 단합외세없이 남북총선거	대민족회의 소집	통일에 이르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연방제
1975.12.6 (평양방송)	현 정치기구와 사회제도 유지	단일국호로 과도적 연방제, 후자동적으로 존재상실	최고민족회의는 주권기구가 아닌 정치·경제·문화·군사·문화·협회의, 교류와 합작보장	다방면적인 교류와 합작		평화통일의 유일한 조건 조성	남북총선거 실시, 통일적 중앙정부 수립	UNCURK를 해체하고 미군철수	
1980.10.10 (제6차 당대회 김일성 연설)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절하하지 것	고려연방공화국으로 불록불가담, 통일국가, 완전한 연방제 성격	통일정부로서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를 둔. 통일정부는 남북지역정부를 지도, 전반적인 사업단행, 민족연방군을 둔.	서로 다른 경제제도와 기업체질을 인정, 그 기초 위에 경제적 작과 교류	남북한 당국 또는 기업체 간에 공동회사, 공동시장 조직 운영	연방제 구성이 곧 통일	필요없음	남한사회 민주화, 반공법과 가보안법 폐지, 미군철수	통일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연방제
1990.1. (김일성의 신년사)	하나의 민족, 국가 안에 서로 다른 두 체도와 두 정부 인정, 먹거나 먹히우지 않는 원칙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지역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연합 성격	종래와 동일하나, 지역적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 부여, 장차중앙정부 기능 강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대중운동 전개	언급없음	연방제는 조국통일 방도의 대원칙	후대에서나 가서 생각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소집	통일에 이르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연방제

※ 자 료: 류석열, 북한의 체제 위기와 한반도 통일, 박영사, 1997, 295-297.

3) 남북한 통일정책의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모두가 진정한 통일을 원하는가 하는 입장에서 보면 만족할 만한 통일방안이라 보기에는 미흡하다. 민족의 입장에서 합의된 「7.4남북 공동성명」의 통일의 기본원칙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서로 간의 통일에 대한 명분과 주도권 다툼, 서로가 자기체제 수호 내지는 상대체제 극복을 통한 통일방안의 한계성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 2-2>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구 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고려연방제
통일철학	자유민주주의(인간중심)	주체사상(계급중심)
통일주체	민족구성원 전체	프롤레타리아 계급
통일원칙	자주, 평화, 민주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통일과정	화해 협력→남북연합→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과정 ※ 민족사회건설 우선(민족통일→국가통일)	연방국가의 점차적 완성(제도 통일은 후대에 일임) ※ 국가체제조립 우선(국가통일→민족통일)
통일국가 실현절차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 총선	연석회의 방식에 의한 정치협상
통일국가의 형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국가
통일국가의 미래상	자유 복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	없음
전제조건	없음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 합법화 주한미군 철수

※ 자 료: 통일원 통일문제 해설자료, 1998.

먼저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보면, 이를 「7.4남북 공동 성명에서 공동으로 천명한 숭고한 이념과 원칙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¹¹⁾ 그 배경에 깔려있는 의도는 어디까지나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은 1960년부터 연방제라는 통일의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오면서 그 원칙과 내용, 실현방법은 일관성 없이 수시로 변경시켜 왔다. 즉 60년대의 연방제는 통일문제해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의 선택으로서¹²⁾ 통일의 과도적 방안으로 국가연합의 성격을 띤 내용으로 제시되었으나, 70년대 이후부터의 연방제는 60년대의 그것과는 달리, 통일의 구체적 대안으로 하나의 영속적 국가체제를 이루는 연방국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다시 국가연합적 성격의 연방제로 선회하면서도 그것을 최종적으로 완결된 통일국가로 확정짓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은 일관되게 연방제 통일을 고수하면서도 국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 변화시켜 왔다. 북한이 남한보다 국력이 우위에 있었다고 평가되는 60년대의 북한은, 자신감에 넘치는 적극적인 자세로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 내용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70년대에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에 고무된 북한은 그들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60년대 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통일공세를 펴왔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와서는 계속되는 공산권의 붕괴와 경제정책의 실패로 식량위기를 맞은 북한은, 그들의 통일정책에도 그것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그들의 체제수호에 급급한 나머지, 명분상으로는 연방제 통일안을 고수하면서도 연방제를 통일의 완결형태로 하는 체제 방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남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실현 불가능한 선결조건을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의 통일문제에 관한 모든 주장이 실현성 없는 것은 아니

11) 1980년 10월 10일 6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으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의 대단결을 제시하면서 이는 7.4남북 공동성명의 숭고한 이념과 원칙에 기초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12) 외국의 간섭 없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남북한 자유로운 총선거, 남북 연방제, 남북한 경제위원회 구성중 택일 방법.

다. 그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정치와 군사문제의 우선 해결은 그들의 숨겨진 불순한 의도만 배제된다면 비교적 적절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남북의 대치는 정치와 군사적 대치로 집약된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현실적인 대치상태를 외면하면서 통일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논리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또한 군사문제 해결없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자는 것도 사상 누각일 뿐이다. 왜냐하면 평화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군사적 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사와 정치문제의 우선해결에 대한 북한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서는 당연한 주장이다. 그러므로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의 불순한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이들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여 해결점을 찾느냐에 대한 묘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한이 이들 문제 자체의 논의를 회피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하여 의심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정부의 통일정책을 불신할 수도 있다. 또한 체제 유지에 급급한 북한에게는 남북 접촉과 대화 중단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남한 통일정책의 역사는 북한의 그것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이유는 남한은 북한과는 달리 다원성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도출이 어렵다. 예를 들면, 문민정부의 획기적인 통일정책의 추진의 조짐이 나타나자, 기득권 보수층의 반발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여 정부의 통일정책에 제동을 걸었으며 용공음해 시비가 재연되어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북풍시비가 일기도 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기 전까지의 남한의 통일정책은, 대한민국은 유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정통성에 근거하여,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정책으로 일관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는 국제적으로는 화해와 해빙무드의 진전, 국내적으로는 국력신장에 따른 통일역량의 확대에 힘입어, 남한은 통일문제에 급진적인 변화를 보여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통

일의 대원칙에 남북합의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10월 유신체제의 수립으로, 남한은 1972년 10월 17일 헌법을 중단하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혁명적 비상조치를 단행하여 유신체제를 출범시켰다(이강혁 외, 1991: 206). 북한도 또한 그해 12월 인민민주주의헌법을 개편하여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고 주석제를 도입하였다(최종고, 1996: 63-66).

유신체제를 출범시킨 남한의 유신헌법은 평화통일을 위한 과도기적 헌법임을 강조하였고 사회주의체제를 본격적으로 출범시켰다는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독창적인 헌법임을 강조하였다. 남북한의 이러한 거의 동시적인 정치적 변화는 우연의 일치인지 그렇지 않으면 7.4남북 공동성명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7.4남북 공동성명이 순수하게 통일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남·북한 정부가 담합한 고도의 정치적 술수였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는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7.4남북 공동성명의 합의가 그 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불과 몇 달 후에는 남북대화마저 중단되었으며 그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시켰던 사실을 놓고 볼 때, 7.4남북 공동성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7.4 남북 공동성명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동기에서 실행되었든, 그것은 통일문제 접근의 역사적 대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남한의 경우, 첫째, 공동성명이 나오기 전까지 금기시되었던 평화통일 논의에 대한 금기가 풀려 민간 차원에서도 통일, 특히 평화통일 논의가 활기를 띠게 되었고, 둘째, 남한정부는 「2개 한국론」을 수용하여 북한정권을 대화 및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하였으며, 셋째, 유엔을 통해서가 아니라 남북 당사자간의 직접적이며 평화적인 대화를 통하여 통일문제에 접근했다는 점이다(류석열, 1997: 396).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하여 80년대의 5공화국정부는 적극적인 대북제의를 하고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천명하며 이의 수락을 북한에 촉구하였으나, 북한은 종래 그들이 주장해온 연방제안에 선결조건을 덧붙여

통일문제의 초점을 흐려놓았다.

80년대 후반기에 출범한 6공화국정부와 그 이후의 문민정부는, 5공화국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에서 진일보하여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3, 4, 5공화국정부와는 달리, 정치·군사적 문제도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 자세를 계속 견지하고 있으나 체제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북한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통일문제 협의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96년 북한은 동해안에 잠수함을 침투시키는 등 도발적인 행위를 자행하여 남한정부와 남한주민을 자극하여 문민정부의 적극적인 통일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어 문민정부의 통일정책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상에서 살펴 본 특징을 정리해 보면 첫째, 남북한 정부는 상황에 따라 통일정책을 수시로 변화시켜 왔다. 북한이 남한보다 국력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했던 7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이 통일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하여 적극적인 통일공세를 펴 왔다. 반면 당시 남한의 통일정책은 수세적이고 회피적이며 대외 의존적이었다. 70년대 통일원칙의 극적 합의는 남북한 국력의 균형상태에서 가능했다고 보여지며, 그 이후 국력이 반전되어 남한이 우위에 서게 됨에 따라, 80년대에는 남한이 통일문제에 적극성을 띄게 되었고, 남북한의 국력격차가 현격하게 들어난 90년대에 와서는 남한은 현실성 있는 실현가능한 통일정책을 제시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반면 북한은 체제방어적인 명분상의 연방제통일론으로 대응하고 있다.

둘째, 남북양측은 통일에 대한 주도권 장악을 위한 명분축적에 골몰하여 왔었으며 분단과 통일문제에 대한 진전 없는 대화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양측정부 모두가 명분상으로는 민족적 입장에서 통일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구체적 통일정책의 실상에서는 상대방의 정책에 긍정적인 측면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핀트를 빚나가게 하여왔다. 즉 양측 모두가 자기체제 중심의 통일정책의 한계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북한은 적화통일로 일관하고 있으며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일관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에 근거하여 공산주의 이념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 되어야 하는데도 남한의 통일정책은 그것을 포괄하지 못하는데 약점이 있고, 북한은 연방제 구성의 원칙으로 남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인정하자고 하면서도, 그 선결 조건에서는 남한의 사상과 제도, 정치 질서와 체제를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을 나타내고 있다. 한마디로 양측 모두가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통일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왔으며 준수할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다.

Ⅲ. 통일교육

1. 통일교육의 의의

1) 통일 교육의 의미

교육은 '의도적으로 인간을 형성하는 인간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 통일 교육을 정의 하면, 통일교육이란 민족이 하나 되도록 하는 교육이다. 즉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 활동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통일교육은 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된 국가에서 행복한 삶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직한 지식, 가치관, 태도를 모든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류석열, 1997: 442-443)고 좁게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뿐만이 아니라 통일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내용을 함께 다루어야 하고 동시에 우리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 그리고 통일성취에 대한 현실적 장애와 위협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가르쳐서, 모든 국민이 균형 있고 합리적인 통일관을 형성하고 이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통일원, 1992: 2-5)고 규정할 때 통일교육의 개념은 넓어진다. 즉 통일교육이란 단순히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양성 이상으로 민주국가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기르는 교육까지도 포함되어 민주국가의 시민성 함양교육과 구별이 모호해 저서 통일교육의 초점이 흐리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은 민족분단의 특수상황하에서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두 개의 국가체제의 존속으로 이질화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제도와 의식을 민족적 차원에서 동질화하여 민족공동체를 달성하려는 민족통합교육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즉 통일교육이란 민족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통일국가를 대비하고 완성시키는 데 요구되는 지식, 가치관, 태도, 사고와 판단능력을 기르고 행위 규범과 절차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습득시키는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통일교육의 필요성

한반도가 분단된 지도 이미 반세기가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통일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분단이 장기화 되어감에 따라 오히려 남북한 간에는 가치관, 행동양식, 생활태도 등 민족동질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으며, 체제와 이념의 이질성은 더욱 고착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분단상황은 남북한의 평화와 생존을 함께 위협하고 있으며 동족간의 비생산적인 대결과 경쟁격화로 민족의 역량낭비는 물론 민족적 자해행위가 계속되어 한민족의 장래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간의 자멸적인 적대행위는 일찍이 경험했던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에서 유래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물론 세월이 흐름에 따라 한국전쟁에서 기인한 남북한간의 적대감정은 그 정도가 점차 엷어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념과 체제의 이질화는 점차 심화되어 남북한간의 대결과 갈등은 오히려 제도적 차원으로 굳어져서 남북한 사이에 놓여 있는 간격을 점차 벌여 나가고 있다.

남북한 당국은 이러한 상황에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남북문제 해결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정책을 수립하고 자신의 전략목표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이제까지 추구해 온 남북한의 통일정책의 근본 목적이나 전략은 크게 달라진 바가 없으며, 앞으로도 가까운 시일 내에 달라질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남북한이 냉전시대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책을 고수하는 동안 한반도의 주변정세와 내부상황은 급변해 왔으며, 그러한 변화는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불가피하게 수정시키도록 하고 있다. 80년대 말 이후 새롭게 재편된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한반도의 주변상황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국제관계의 긍정적 개편은 남북한이 각각 그들의 통일정책을 유화적으로 수정시켜 나가도록 하는 데 압력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

고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도출된 통일정책을 널리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국민선택을 통하여 자발적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정책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표출되어 통일정책의 구심력을 상실하여 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 현재까지 안보를 중심으로 한 체제수호 교육의 궤도 수정은 불가피한 시점에 와 있다. 이제 우리의 통일교육도 시대적 요구에 맞게 그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정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냉전 시대의 남북관계에 근거한 적대와 불신의 차원을 넘어 민족의 공존공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이라는 높은 차원에서 사소한 현실적 문제에 구애됨이 없이 장기적이고 폭넓은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류석열, 1997: 442).

2. 남북한의 통일교육

어떤 국가 또는 사회체제가 추구하는 정치·경제·사회 등의 이념은 총체적으로 그 국가 사회의 공교육목표로 수렴된다. 즉 국가 사회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바를 교육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것이 공교육의 목표이다. 따라서 교육은 그 국가 사회를 유지 존속시키고, 그 理想을 실현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이 우리민족이 꼭 달성해야 할 역사적 지상과제라면 통일교육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이나 북한에서의 통일교육은 그들 모두가 주장하는 ‘7000만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기필코 달성해야 한다’는 것과는 달리 극히 소극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양측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통일정책의 진의마저도 의심케 한다.

북한에서의 통일교육은 사상교육의 일환으로 소위 ‘남조선과 미제의 침략위협을 역설하면서’ 내부단결용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남한에서도 통일교육은 학교교육의 독립적인 교과로서가 아니라 민주 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 국민윤리교과에 통일교육 단원이 설정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국사, 사회, 국어 등의 일부 교과에서 부분적으로 통일문제를 다

루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학교교육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편의상 남한의 통일교육은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특히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북한의 통일교육은 북한의 교육정책과 교육목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본다.

1) 남한의 통일교육

(1) 제 5공화국(1945-1987)까지의 통일교육

남한에서 통일교육이란 말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90년대부터였다. 1972년 7.4공동성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정통성을 주장하며, 북한은 우리와 공존할 수 없는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 실지회복을 위한 북진통일, 멸공통일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유진오, 1961: 124-125).¹³⁾

침략자와는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과거에 이미 그들의 침략적 본성을 충분히 드러냈으며, 지금도 기회만 또 있으면 다시 우리를 침략하려고 무력증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들은 지금 우리들과의 평화적 공존을 선전하고 있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방심시키고 그들의 준비가 다 될 때까지 시간을 얻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중략---

결국 우리는 국토가 양단된 채로는 살 수 없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유일한 평화적 통일 방법인 총 선거에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하고 있으니, 남은 길은 무력에 의한 통일밖에 없다. 우리는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 있어서 닥쳐올 북진통일의 날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의 통일교육의 특징은 50년대의 자유당

13) 「국가생활」은 1959년 문교부가 검정필한 중학교 2학년용 사회생활과 교과서이다.

정권과 마찬가지로 멸공통일 또는 승공통일을 기반으로 하여 북한의 무력도발 책동의 경각심을 고취하면서, 먼저 근대화 공업화를 이룩하여 국력을 튼튼히 한 다음에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는 점을 역설했다. 즉 선 국력 신장 후 통일을 교육내용으로 하였다(황산덕 외, 1967: 274-275)¹⁴⁾

6.25 사변을 겪은 우리는 공산당의 침략 정책이나 만행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들의 흉계를 보고 있는 것이다. 즉, 북괴는 간첩을 남파하여 공산당의 지하 조직을 확충하고, 한·일국교 정상화를 틈타서, 일본에 있는 조총련계란 공산집단을 통하여 남침 활동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암약이 남한의 정치적·경제적 발전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가자 그들은 무장 간첩을 대량 남파하여 양민까지 살해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북괴의 이러한 흉계는 소위 평화통일을 부르짖으면서 재차 무력 남침의 기회를 엿보는 공산당의 기본 정책임을 잘 파악하여 이러한 흉계를 분쇄하고 말아야 한다.

우리의 국토 통일은 우리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이며 동시에 국제평화를 확보하는 중대한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의 국토 통일은 우리나라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제연합이 해야 할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산 진영의 반대로 인해서 국제 연합 가입문제조차도 아직 해결을 못 보고 있는 형편에 있다. 우리는 하루속히 국토 통일을 이룩하므로써 민족의 비원을 성취하고 국제 평화 유지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유동적인 국제 정세에 대처하고 보다 더 폭넓은 외교 활동을 전개해야겠다. 특히 아시아·아프리카 제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 여하는 곧 우리의 국제 연합을 비롯한 국제적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공업화에 힘써 경제적 안정을 이룩함으로써 승공 통일의 자주적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

14) 「정치·경제」는 1968년 문교부 검정필한 인문계 고등학교 교과서임.

70년대 초반까지의 힘에 의한 승공 통일 교육기조가 평화에 의한 통일 교육기조로 선회한 것은 조국통일 원칙을 합의한 7.4 남북 공동성명이 계기가 되었다. 이 원칙에 따라 평화통일 교육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국력이 뒷받침한 평화유지와 평화통일이라는 한계를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실체를 이해하려거나 포용하려는 수준의 교육내용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정치·경제 교과서 편찬위원회, 1977: 11-14)¹⁵⁾

우리 민족은 역사상 불행한 일을 많이 겪어 왔으나, 그 중에서도 국토 분단은 더욱 쓰라린 비극의 하나이다. 한 민족이 한 국가로서 번영의 길로 달려야 할 이 때에 우리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고초를 겪고 있다.

이 분단은 세계 열강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분단이 없었다면 6·25사변과 같은 민족상잔의 비극도, 오늘날과 같은 북한 공산 집단의 위협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눈부신 발전과 번영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반드시 단일 민족 국가를 만들어야 하며, 분단된 조국의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력 도발들이 얼마나 악랄하였으며, 또 얼마나 쓰라린 상처를 우리 민족의 역사에 남겼던가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적인 현실을 감안하고 가까이는 6·25 사변의 참상을 상기하며, 민족의 행복을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여 평화적 수단으로 이 민족과 국토를 통일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정부는 1970년에 8·15선언, 이어서 1971년에는 대한 적십자사의 제안으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주도하였으며, 1972년에는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1973년에는 평화 통일 외교 정책에 관한 6·23 선언을 발표하고, 1974년 1월에는 남북 간의 상호 불가침 협정의 체결

15) 이 교과서는 유신체제하에서 종래의 교과서의 검정제도를 폐지하고 국정화된 인문계 고등학교 정치·경제 교과서로서 유신체제 교육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을 제의하였으며, 그 해 8월 15일에는 평화 통일 3대 기본 원칙을 밝혔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우리들은 꾸준히 한반도에서 동족간의 무력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평화를 굳힌 바탕위에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 공산 집단과의 대화를 주도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 공산 집단은 대화를 하면서도 오히려 이를 적화 통일에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는 데에만 역점을 두어 왔다. 한편 우리 국민들이 일치 단결함에 따라 그들이 의도하던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태가 진전되고, 적화 통일이라는 그들의 야욕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인식하게 되자, 고의로 회담을 거부하는 태도로 나오고 있다.

우리는 성의와 인내로서 대화를 계속하고, 실질적이며 점진적인 평화 통일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무력 충돌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평화가 정착되어야만 평화 통일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6.25 사변과 같은 민족적 비극이 또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 민족은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 민국이 압도적으로 북한 공산 집단을 능가하는 국력을 구축해야만 북한 공산 집단의 오판에 의한 재남침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게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다.

우리는 더욱 번영하는 국가를 건설하여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비약하고, 배양된 국력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전통에 입각한 조국의 평화 통일의 숙원을 달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참으면서 조국의 근대화로 국력을 배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여 민족 중흥의 성업(聖業)을 이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

이는 종래의 교과서 내용과는 질적으로 발전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분단의 책임과 비극의 원인을 일방적으로 소련 또는 북한에게 전가

했던 종래의 교과 내용에서 탈피하여 열강들과 우리 민족 모두의 책임으로 기술함으로 실제적 진실에 접근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분단의 책임이 전적으로 어느 일방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 역사적으로 점차 밝혀지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어느 일방에게 떠 넘긴다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북한도 역시 이 점을 정대하고 당당하게 밝혀서, 역사를 왜곡하여 한민족 한반도의 통일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사실과 진실에 입각하여 주민 교육에 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은 평화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교과 내용의 전환이다. 과거에는 북한이 유일한 평화통일의 방법인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무력에 의한 북진 통일을 택할 수 밖에 없다는 무력통일이 역설되었던 내용이, 성의와 인내를 다하여 평화통일을 이루어 내야한다는 내용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통일정책의 변화에 따른 통일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과 태도의 일대 전환의 충분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셋째, '북괴'로 쓰던 북한에 대한 호칭을 '북한 공산 집단'으로 바꾸어 쓰고, 분단의 남북한 공동책임과 평화통일의 절실성을 강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력에 의존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從前의 교육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넷째, 남북대화 중단에 책임을 전적으로 북한에 돌리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1980년대의 교육 내용에서까지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의 국가 안보 태세의 강화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기본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6·25 사변을 통해서 공산 침략 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받았던 쓰라린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공산주의 세력보다도 호전적이며 침략적인 북한 공산집단이 여전히 조국의 한 모퉁이를 강점한 채 한반도 전체를 적화하려고 무력 재침의 준비를 완료하고, 그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일촉즉발의 위협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북한 공산 집단의 재침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 동안 국내외적으로 양론이 대립되어 왔었다. 평화 공존을 지향하는 국제조류나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세력관계 등으로 보아, 북한 공산 집단의 전쟁 도발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낙관적인 견해와, 국제적인 화해 추세나 유우엔의 무력화는 오히려 국지전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북한 공산 집단은 바로 그 점을 노려 그 동안 전쟁 준비를 완료해 놓고 남침 기회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전쟁 재발의 위험성은 어느 때보다도 증대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맞서고 있는 것이다.

----중 략----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안보 문제는 만의 하나라도 오판이 있을 수 없으며, 추호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로서, 항상 유비무환의 안보 태세를 갖추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하물며, 오늘날 북한 공산 집단의 여러 가지 동향과 그 동안의 도발 양상으로 보나, 또한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 과정에서의 공산군의 침략 전쟁 도발 사실을 보나, 북한 공산 집단의 전쟁 도발 위험성은 이미 논쟁의 단계를 넘어선 엄연한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북한 공산 집단의 도발 여하에 달려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안보 태세 여하에 크게 달려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북한 공산 침략자가 아무리 전쟁을 도발하려 하여도 우리의 안보 태세가 철통 같으면 감히 모험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침략자가 침략의 모험을 감행할 수 없을 만큼 항상 미연에 우리의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길 뿐이다. 우리가 국가 총력으로써 총력 안보 태세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문교부, 1977: 222-225).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70년대 평화통일을 지향하여 출범했다는 유신체제하의 제 4공화국 교과 내용은, 힘(군사력)에 의존하여 호전적인 북한의 도발과 남침의 위험성을 잠재워 전쟁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평화통일의 길을 모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안보와 평화통일이라는 상호 갈등하는 두 요소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려는 교육이 강조되었다.

제 4공화국의 유신체제가 무너지고 80년에 출범한 제5공화국은 남북 대화와 통일정책에 적극성을 띠었으나 그에 대한 교육내용의 기조는 크게 달라진 바가 없으며, 오히려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표현 대신, 남북 대화 중단에 책임과 이중성을 통렬하게 비난·질책하는 강경한 표현을 하여 평화통일 교육이 후퇴한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이는 국제적 해빙과 화해의 기류와는 배치되는 특징으로 경직된 국내정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문교부, 1983: 16-18).¹⁶⁾

(2) 제 6공화국 전반기(1988-1993)의 통일 교육

당시 국내 정치는 군사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었지만, 정부로서는 86아시아 게임과 88올림픽에 공산권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했다. 이리하여 정부는 종래에 적성 공산국으로 분류하였던 중국과 소련에까지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고, 적극적인 북방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들은 86아시아 게임과 88올림픽 개최 후,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과 국민 의식의 변화가 안보·통일 교육의 배경이 되어 제 5차 교육과정¹⁷⁾ 개편이 이루어 졌다. 5차 교육과정에서도 종래와 마찬가지로 안보·통일교육은 도덕교과를 중심축으로 하여 사회, 교련, 국어 등의 교과에서 과목 특성과 관련하여 부분적인 내용을 취급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교육과정과 다른점은, 교과 간의 갈등과 중복을 제거하여 도덕교과를 중심으로 하여 집약적으로 통일성을 기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국민윤리 교과서는 6개 단원으로 구성되었다. 안보·통일교육 분야는 5단원 「V. 민주주의 이념과 현대 이데올로기의 문제」의 소단원

16) 1986년 10월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성환 의원의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어야 된다. 통일 또는 민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보다 그 위에 있어야 한다'는 발언이 문제가 되어 이른바 '국시' 파동을 불러 일으켰을 정도로 국내정치는 경직되어 있었다.

17) 제 5차 교육과정 고시는 1988년 3월이었으나 구체적으로 시행된 시기는 1990년부터다.

「3. 공산주의의 이념과 실제」와 6단원 「VI. 조국의 통일과 번영」에서 취급되었다. 「3. 공산주의의 이념과 실제」는 다시 「(1) 공산주의의 대두와 그 배경, (2) 공산주의 이론과 혁명 전략, (3) 공산 사회의 실상, (4) 현대 공산주의의 변용」으로 세분화였다.

공산주의의 대두와 그 배경에서는, 17-8세기의 산업혁명에 따른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을 맑시즘 출현의 계기로 서술하고 있다. 실제로 공산주의가 출현한 것은, 1917년 소련에서 맑시즘에 근거한 레닌이 주도한 볼셰비키 혁명의 성공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이데올로기적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공산주의 이론과 혁명 전략에서는 공산주의의 핵심적 교의를 ① 폭력혁명론, ② 사적유물론, ③ 자본주의 붕괴론, ④ 계급 투쟁론, ⑤ 국가 소멸론으로 규정하고 이들 교의에 대하여 낱말이 실례를 들어가며 신랄하게 비판을 가하고 있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 전략 전술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들의 전략 전술을 소상하게 다루고 있다(교육부, 1992a: 234-235).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공산당의 집권 투쟁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전술적 단계를 거쳤다.

제1 단계는 여건 조성의 단계로서, 공산주의자들은 현존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일으켜 사회불안을 조성하였다.

제2 단계는 연합의 단계로서,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공산주의적 성향을 은폐하면서 민주적, 민족주의적 주장을 내세워 현존 정권에 대한 반항적 세력들을 규합하는 통일 전선 전술을 구사하였다.

제3 단계는 위장연합을 유지하는 단계로서, 제2 단계에서 동지였던 민주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을 제거하고 용공 세력에 의한 혁명의 주도권을 확보하였다.

제4 단계는 당내 불순 세력의 제거 단계로서, 공산주의자들은 자체 내의 당원들 중 분파적이거나 민족주의적 색채가 짙은 당원들을 숙청하였다.

제5 단계는 사회주의 혁명의 단계로서,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전반의 구조 개편과 자본주의적 잔재를 청산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전술 단계마다 군사력과 위장 선전 및 인간의 정치화 교육을 철저하게 활용한다. 따라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론과 전략 전술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시야가 필요하다.

공산사회의 실상에서는 오늘날 공산주의 체제의 몰락 및 붕괴와 참상의 원인을, 공산주의 이론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그 실천 과정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 소련의 붕괴 과정과 중국의 개혁을 통한 자본주의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현대 공산주의의 변용에서는 신 마르크스주의, 신좌파 운동, 종속이론의 일면적인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들 이론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그들 이론들이 국내에 유입되어 한국적 급진 좌경 이데올로기가 등장한 배경을, 역대 정권들의 비민주성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분배의 불공정성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에서 찾고 그것을 솔직히 인정했다는 점은 종래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교육내용의 발전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1992a: 245).

신마르크스주의, 신좌파 운동, 종속 이론 등이 유입되어 한국적 급진 좌경 이데올로기가 등장한 것이 단지 외국에서 유입된 사상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만은 없다. 우리 사회의 내부에 상존하는 문제점도 그 한 원인이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는 정치적으로 민주 발전을 저해하는 많은 장애 요소를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파행성이 계속되었다. 경제적으로도 지속적인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여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부의 배분적 측면을 소홀히 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과서 마지막 단원인 「VI. 조국의 통일과 번영」은 「1. 조국의 분단, 2. 북한 체제의 현실, 3.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국의 분단」에서는 분단의 배경과 대한 민국의 정통성, 「북한 공산 체제의 현실」에서는 북한 체제의 특징과 변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서는 통일의 당위성, 남북한 통일 정책 비교, 통일의 과제를 소재목으로 다루고 있다.

첫째 소단원 「조국의 분단」에서는 분단의 원인을 국제적인 역학관계에서의 강대국의 세력균형과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 역량의 부족이라는 통설에 입각하여 내용이 전개되었다. 이는 분단의 원인과 책임을 일방적으로 북한 공산집단과 소련의 음모로 부각시켰던 종래의 교과서 내용과는 질적으로 다른 보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소의 한반도 협상과정에서, 소련이 미국보다 더 큰 분단의 원인과 책임이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교육부, 1992a: 250).

소련군은 1945년 8월 25일, 평양에 진주하여 38 도선을 봉쇄함으로써, 인적 교류는 물론, 서신 왕래까지도 차단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을 내세워 북한 지역에 공산 정권을 수립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소련군이 처음 평양에 입성했을 당시 북한 지역에서는 이미, 민족 진영 인사들이 일본으로부터 행정권을 인수받아 건국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조선민주당 당수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익 인사 18명과 공산주의자 2명으로 구성된 건국 준비 위원회 평안남도 지부가 그것이다. 그러나 소련 군정 당국은 8월 26일에 이 조직을, 같은 수의 우익과 좌익으로 구성된 정치 위원회로 강제 개편하여 소련 군정에 예속시켰다.

한반도의 정통성에 관한 내용은 종래의 교과서 내용과 다를 바 없이, 대한 민국은 유엔총회 의결에 따라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3.1 운동의 독립 정신과 대한 민국 임시 정부의 국호와 건국이념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둘째 소단원 「2. 북한 공산 체제의 현실」에서는, ‘북한 체제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일이 조국 통일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북한 정치, 경제, 사회의 현실과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변형’이라는 김일성 주체 사상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지배되어 온 공산독재체제로 규정하고, 한국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교육부, 1992a: 260-272). 「북한 체제의 변화」에서는 「첫째, 개방에 대비한 제도 정비와 여건 조성. 둘째, 주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과 생활 환경 개선. 셋째, 체제 능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 강구. 넷째, 사회 간접 자본 확충. 다섯째, 북한 주민의 의식 수준 향상」으로 보고 민족 통일 여건 조성에 있어 비교적 긍정적인 변화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마지막 소단원 「3.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1) 조국 통일의 당위성과 의미. (2) 남북한 통일 정책의 비교. (3) 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통일의 당위성과 의미」에서는 ‘민족사적 요청, 남북한 이질화 극복과 동질성 회복, 인도주의적 요청, 불필요한 민족 역량의 불식, 세계 평화에의 기여와 정당한 민족 자주 역량 발휘’를 통일의 당위성으로 하여 ‘단일 주권 국가를 형성한 생활 공간의 통합’이 참다운 통일이라 하였다.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신뢰와 동질성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남북한 통일 정책의 비교」에서는, 남한의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과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의 출현과 현황을 비교하면서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남한의 시각에 따라 ‘연방제 통일 방안’의 부당성과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타당성을 역설함으로써, 통일교육 내용의 한계성을 보여 주고 있다(교육부, 1992a: 289-290). 「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에서는, 통일 조국의 미래상을 「자주적인 민족 국가, 평화 국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 복지국가, 문화국가」로 제시하면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서, 「국제 정세의 변화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고, 분단 상황의 올바른 이해와 북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하며,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통한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 지상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교육부, 1992a: 295-296).

(3) 1990년대의 통일교육

문민정부 출범과 6차 교육과정 개편이¹⁸⁾ 맞물린 90년대의 학교 교육내용, 특히 통일교육의 교과내용은 일신된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 문민정부의 출범에 따른 가속화된 정치·사회적인 민주화 및 북한보다 절대적 우위가 확보된 남한의 경제력, 그리고 냉전과 군사정권 시대에 형성된 군사문화의 붕괴, 고질적인 비민주적 교육제도와 풍토의 개혁, 또한 공산권의 몰락과 독일의 통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통일교육의 정책, 내용, 방법들은 놀라운 질적 발전을 가져왔다고 보여진다.

90년대의 6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은 역시 도덕교과의 한 부분단원으로서 취급되어 있으며 국사, 사회, 지리교과에서 교과내용과 관련시켜 가볍게 다루고 있다. 통일교육의 양적인 면에서는 90년대 이전의 그것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종래에는 도덕과를 중심으로 하여 통일안보 관련 교과인 교련, 사회과에서도 안보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폭 넓게 다루어 졌으나 6차 교육과정에서는 안보에서 통일로 교육의 무게 중심점이 옮겨짐에 따라 안보관계 내용이 줄게되어 전체적인 통일안보 교과 내용이 양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순수한 통일교육의 내용만 본다면 질적·양적으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즉 공산주의의 이념과 허구성 및 북한 공산체제의 현실에 대한 비판 내용을 감축하고, 민족의 전통과 민족의식을 새로 포함시키는 등 민족공동체의식을 강조하였다(교육부, 1992: 75). 즉 90년대 이전의 교과내용은 안보교육에 종속된 반공을 바탕으로 한 부수적인 통일교육이었으나, 현행 교과내용은 민족의 안전과 세계 평화에 바탕하여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도덕 교과서의 명칭 자체도 과거의 전체주의와 국가주의적 냄새가 풍기는 ‘국민 윤리’를 ‘윤리’로 개칭하였다. 이는 과거의 ‘국민 학교’를 ‘초등학교’로 ‘국민’이란 용어를 ‘시민’이란 용어로 바꾼 것과 같은 맥락에서, 문민

18) 교육부는 21세기에 대비하는 교육개혁을 위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결정하여 1992년에 고시하였다. 중학교는 6. 30 교육부고시 제1992-11호,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9. 30 교육부고시 제1992-15호, 16호, 고등학교는 10. 30 교육부고시 1992-호로 각각 발표되었다.

정부의 군사문화 청산과 민주화 개혁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진다.

① 도덕 교과에서의 통일 교육

『고등 학교 윤리』(이하 ‘윤리’라 표기)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서울 대학교 사범대학 1종도서 「도덕·윤리」연구개발위원회에 위탁하여 편찬한 고등학교용 윤리교과서이다. 1996년 초판이 발행되고 새 교육과정 개편시까지 사용될 매학기 1단위씩 총 6단위를 이수해야 하는 필수 의무 교과목의 교과서이다.

‘윤리’는 5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통일교육 관련 단원으로는 「Ⅲ. 국가와 윤리」, 통일 교육을 직접 취급한 단원으로는 「Ⅴ. 통일의 과제와 전망」이 있다. 「Ⅲ. 국가와 윤리」는 직접적으로 통일교육을 겨냥해서 설정된 단원은 아니지만, 곳곳에 통일에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의 통일 관련 내용 기술의 특징은 민족주의,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념과 국제 관계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통일의 방법과 방향, 통일의 역사적인 필연성과 필요성이 우회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과거의 안보·통일 교육 내용이 직접적으로 반공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자극적이고 감정적으로 북한체제와 공산주의를 비판했던 것과는 크게 다르다.

「(4) 공산주의의 쇠퇴와 그 역사적 교훈」이라는 소제목에서도 공산주의 이론의 출현,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을 당시 사회적 상황을 들어 객관적으로 기술했다. 또한 공산주의 쇠퇴의 원인을 공산주의의 실시 과정에서의 이론과 현실의 갈등을 들어 설득력 있게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본주의가 타락하면 언제든지 사회주의에 대한 향수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내용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교육부, 1997: 139-141).

현존 사회주의 체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그들이 이념적으로 추구하는 ‘계급 없는 사회’라는 유토피아적 목표와 현실적으로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근대화 목표간의 갈등 때문에 적지 않은 딜레마를 경험해야만 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이들 체제는 대체로 사회·경제적으로 후진적

상황에서 공산화되었기 때문에, 근대화란 실로 절실한 과제였다.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자들이 경제적 효율성을 앞세우고 물질적 유인책(誘引策)을 쓰게 되면, 기술 관료 계층의 특권화가 강조되고 불평등이 심화되어 유토피아적 목표가 위협당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유토피아적 목표에 충실하기 위해서 평등을 앞세운다면, 개인의 자유는 더욱 억압되고 일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켜 결국 경기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 그 때문에 많은 나라가 ‘평등주의’ 노선과 ‘실용주의’ 노선 가운데에서 우왕좌왕 하였으며, 어떤 나라는 한쪽으로 기울어 졌다가 체제위기를 맞이하여 다른 쪽으로 급선회하기도 했다.

사회주의 체제가 직면했던 가장 역설적인 장면은, 프롤레타리아의 이름으로 세워진 기존 체제에 가장 치열하게 도전했던 세력이 바로 노동 계급이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이들은 심각한 정당성(正當性)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사회주의의 ‘역사적 몰락’ 과정에서 보여준 또 하나의 역설적 현상은 줄곧 폭력으로만 지탱되었던 이들 체제가 스스로의 각성과 함께 민중의 평화스러운 저항에 힘없이 무너졌다는 사실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중요한 역사의 교훈을 얻게 된다. 국민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못하는 체제는 당이나 군대, 그리고 비밀 경찰이라는 실로 막강한 억압 구조를 가지고도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이다.

기존 사회주의 체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자유의 결손에서 비롯된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 그리고 책임감이 고갈된 사회에서 화석화(化石化)된 관료 독재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개인의 창의성과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을 외면한 채, 국가 독점적 생산 양식에만 의존하던 공산국가들은 하나같이 경제 발전에 실패하였으며, 자유뿐만 아니라 물질적 토대마저도 약화시킨 것이다.

사회주의에서 가장 앞세울 수 있는 덕목이 평등이라는 가치이다. 그런데 공산 국가에서는 낙후된 경제로 인하여 전반적인 복지 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생활 수준도 하향적으로 평준화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평등이라는 가치마저도 허구(虛構)가 되고 말았다. 아직도 지구촌에는 적은 수의 사회주의 정권이 잔존하고 있으나, 하나의 체제로서 사회주의의 실험을 새롭게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회주의가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에 대하여 좀더 진지하게 생각해야겠다. 자본주의가 자기 쇄신 없이 물질이나 인간의 이기심에만 집착하여 '천민 자본주의(賤民資本主義)'로 전락하게 된다면 사회주의에 대한 향수가 되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본주의는 이제 스스로 쇄신과 발전을 통하여 사회주의에서 표방했던 이상 중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민주적 방법으로 그 정책적 실천에 앞장 서야 하겠다. 그렇게 될 때에,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의 결연을 통하여 그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고, 아울러 그 신화성(神話性)을 영원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인식하여야겠다.

그러나 국가안보 내용은, 종래 교과서에서 공산주의의 폭력성과 침략성을 부각시킨 것과는 달리 자본주의에 내재한 모순과 갈등의 가능성을 사회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수용하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결연을 통한 적극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사회주의에 대한 일방적 감정적 매도태도를 지양하고 학문적인 보편성과 객관성을 근거로 한 안보교육 내용으로 전환·발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V. 통일의 과제와 전망」은 통일교육을 직접 겨냥한 단원으로서 「1.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 2. 민족통일의 조건, 3. 통일 이후의 전망」으로 소단원화 하여 통일교육 내용을 전개하였다.

「1. 우리 나라의 통일 문제」에서는 (1)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 (2) 남북한의 통일관과 통일 정책, (3) 남북한 통일의 장애 요인을 소제목으로 하여 다루고 있다.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에서는 민족사적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남북한의 통일관과 통일 정책에서는 남한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비교하면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현실적 적합성을 부각하고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비현실성과 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한 통일의 장애요인에서는 북한의 대남 도발행위와 남북한 합의 사항에 대한 일방적 파기, '남조선 해방론'에 통일의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을 역설하여 북한책임론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앞의책,

267-271).

한국이 북한을 불신하게 된 것은, 북한의 끊임 없는 대남 도발 행위와 남북한이 협의한 사항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해 온 데서 기인한 것이다. 북한의 우려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이후에 국력면에서 월등한 한국이 개방과 교류를 내세워 흡수 통일을 기도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은 남북간의 이질화와 불신감이 해소되지 않는 한 남북한의 공존 공영의 길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통일은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중략---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겠다는 북한의 공세적인 대남 전략 문제이다. 북한은 오랫동안 남한사회가 '외세'에 예측된 식민지 봉건사회이며, 매관 자본과 지주 및 부패한 정치인들이 서로 결탁하여 국민을 억압하고 있는 사회라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인민 민주주의혁명'을 통하여 남한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펴온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남조선 해방론'과 이에 기초한 대남 통일 전선 전략은, 오늘날 남북한 현실과 국제 여건에 비추어 볼 때에 그 실현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한반도에서는 긴장과 불안이 가시지 어려우며, 평화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분위기의 조성이 불가능할 것이다.

「2. 민족 통일의 조건」의 소제목 (1) 새로운 세계 질서와 통일 환경의 변화에서는, 공산권의 몰락, 우리 정부의 북방 외교의 성공,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북한의 대미 태도의 변화, 남한의 민주화와 문민정권의 출현, 북한의 개방화 움직임을 들고 있다. (2) 통일 국가 실현의 전제 조건에서는 통일에 대비하는 대내적 기반 구축,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주변국가와 이해 당사국들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해와 협력, 통일에 따르는 고통에 대한 인내와 희생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들고 있다. (3) 예상되는 통일의 과정과 우리의 자세에서는 오스트리아, 베트남, 예멘, 독일 통일의 유형을 들고 이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통

일에 대한 우리의 역할과 자세를 역설하고 있다.

마지막 소단원 「3. 통일 이후의 전망」에서 통일 국가의 미래상을 ‘자주적인 민족 국가’, ‘자유로운 민주 국가’, ‘정의로운 복지 국가’, ‘풍요로운 문화 국가’로 제시하였으며, 통일 국가의 역할을 국제 사회에서 겪게 될 ‘화해와 협력의 조정자’, ‘태평양 공동체의 중심 국가’, ‘국제적인 경제 중심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래 사회의 한국인상으로 ‘주체적인 인간’, ‘창조적 인간’, ‘진취적 인간’, ‘도덕적 인간’을 들고 있다(앞의책, 301-302).

② 기타 교과에서의 통일 교육

우리 교과 이외의 교과에서 한반도 문제를 가장 밀도 높게 다룬 교과는 사회과이다. 사회과 중에서도 통일문제를 직접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분야는 공통사회와 일반사회 교과에서이다. 「고등학교 공통사회(상) 일반사회」 19의 「V. 개인과 국가」에 소단원 「국제화와 한국 정치의 과제」를 설정하고 「남북한의 갈등과 평화」, 「오늘날의 민족사적 과제」라는 소제목으로 남북분단과 대립, 7·4 남북 공동성명, 통일을 위한 노력, 민족적 과제로서의 통일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종래 교과에서 보여 주었던 정부의 통일정책을 홍보적 내용 기술에서 탈피하여 내용을 객관화하였으며, 국민적 입장에서 민족통일 염원을 기술하였다(교육부, 1996: 223-225).

1970년대에 들어와서 남북한에는 미국-중국, 일본-중국간의 화해 분위기에 힘입어 일시적인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1972년에는 민족 분단 후 최초로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이 바로 ‘7·4 남북 공동 성명’이었다.

이 성명에서 밝힌 민족 통일의 원칙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로서, 오늘날까지도 통일 원리로 인정되고 있다. 또, 1973년에 정부는 ‘6·23평화 통일 선언’을 통하여 그 때까지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을 종식하

19) 6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종래의 「사회 I」 교과서를 개편한 고등학교 공통필수 교과로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편찬한 국정교과서이다.

고, 북한을 공존의 상대로서 인정하는 혁신적인 통일 정책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모두 경제 성장에 따른 체제의 자신감과 통일을 향한 국민들의 여론이 결집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는 냉전 시기의 남북 관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획기적인 진전이었다. 그러나 공동 성명을 발표하던 바로 그 시기에 남북한은 각각 유신 체제와 주석 체제로 이행함으로써 화해보다는 대결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중략---

미·소 냉전 체제 아래에서 분단된 한반도는 냉전 완화 분위기에 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정부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남북한간의 대화를 줄기 차게 시도해 왔다. 그리고 남한의 민주화 운동 세력들은, 1980년대에 들어서 민족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한 당국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이에는 특히 남한 정부가 적극적이었다. 이것은 지난 70년대와는 다른 큰 변화였다.

이러한 시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두 정부 간의 공식 회담을 비롯하여 국회, 체육, 예술, 학술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방문을 실현시켰다. 이는 탈냉전 시대에 우리 민족만 분열과 대결을 일삼을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마침내 남북한은 화해와 불가침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고 유엔에도 동시에 가입하였다. 또, 남한은 서독의 동방 정책과 유사한 북방 정책을 추진하여 러시아, 중국과도 수교함으로써,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주변 여건을 마련하였다.

교수방법에 있어서도 과거의 정치·교화적 주입식 방법을 지양하고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는 구체적인 남북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식 수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일신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앞의책, 226-227).

남북한간의 관계에 대한 쟁점

◇ 다음 자료는 남북한간의 경제 협력과 정상 회담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주장에 담겨 있는 논리를 비교 평가하여, 과제를 해결해 보자.

갑: 북한이 남한의 적화 통일을 포기하였다는 징후는 아직 아무데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남북한의 경제 교류와 협력을 해서는 안된다. 경제 협력은 최악의 상태에 있는 북한의 경제를 회생시켜 주고, 핵무기 개발비용을 보태 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또, 남북 정상 회담을 하자는 것도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 작전일 수 있다. 현시점에서, 민족 공동체의 번영이니 통일 비용의 감소니 하는 것은 낭만적인 생각으로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저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무작정 경제 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 남북 정상 회담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을: 남북한의 경제 협력은 상호 이익을 꾀하는 동시에, 변형된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건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북한의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잘 활용하면, 양측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긴장 상태도 완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제 우리는, 서로의 체제 우월성을 과시한다든지, 상대의 발전을 자기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단지 동정심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북한을 도와준다든지, 경제 협력은 남한에 대한 북한의 공격력을 높혀 주는 셈이라 는 냉전식 사고방식도 버려야 한다.

경제적 접근은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문제를 억제할 수 있고, 통일 비용을 줄이며, 통일 이후를 위한 산업 구조 조정에도 도움을 주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남북 정상회담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1) 갑과 을의 주장이 어떻게 다르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 (2) 갑과 을의 주장 중에서 지지하는 어느 한 견해를 선택하여, 다른 쪽의 주장을 비판해 보자.
- (3) 앞으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 토론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해 보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 교육의 내용과 학습 방법의 획기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남한 주도하에 북한체제를 흡수하는 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체제 교육의 한계로 보여진다.

이제 북한 주도의 통일은 불가능해졌으며, 또 그래서도 안 된다. 결국, 우리에게 열려 있는 가능한 민족 통일의 길은 남한 주도의 평화 통일이다. 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정신 자세는 북한의 동포들을 한 민족, 한 동포로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점이다.

이외의 국사, 한국지리, 세계사에서는 학문적 특성에 따라 한반도 통일 문제를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 정도이다.

2) 북한의 통일교육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교육도, 현재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동등하게 비교해 봄으로써 양측의 통일교육 실상이 정확하게 비교·분석될 수 있겠으나 자료 접근의 제한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부득이 통일원이 북한 교과서를 분석한 「북한교과서 분석」을 토대로 하고, 북한 헌법을 비롯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어린이 보양법 등을 참조하여 북한의 통일 교육을 유추 분석해 보았다.

‘북한의 통일교육’이란 그들 용어로 말하자면 ‘남조선 해방교육’이라 할 수 있고 남한에서 말하는 ‘한반도 적화 통일을 위한 북한의 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통일교육’이라 할 때, 그 것은 정치·사

상 교육을 일컫는 포괄적 의미를 가진다.

(1) 사회주의 국가의 교육

사회주의 국가에서 교육은 사회주의 혁명과업의 실현과 달성을 위한 도구이며 수단이다. 즉 교육은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여 정치교화, 사상교화를 기저에 깔고 사회주의적 생산력 증대를 위한 대중동원의 정치활동이다. 구루프수카야²⁰⁾는 1918년 9월 20일 프롤레타리아 문화·교육회의 연설에서 사회주의 교육의 이상을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위한 교육’(구루프수카야, 1972: 126-134)이라고 하였다. 즉 사회주의 교육은 노동자 농민의 해방을 위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인간이란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생산자이다.

이는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의 교육이념과 목표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소련의 혁명지도자들은 ‘계급투쟁을 위한 「공산주의적 인간」’, ‘경제발전을 위한 「생산기술적 인간」’을 내세웠고 70년대 이후의 중국의 교육목표는 ‘사회주의 이념 실현을 위한 자질(紅: red)’과 ‘현대화에 필요한 전문적 자질(專: expert)을 겸비한 「사회주의 새 사람」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았다(이온죽, 1995: 204-205).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교육을 철저하게 당과 국가가 장악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도구로 당의 지도노선에 따라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고 지도한다. 사회주의적 인간을 기르기 위한 교육은 ① 계급의식의 고취, ② 정치사상 교육의 강화, ③ 집단주의 협동의식의 강화, ④ 조기교육의 중시, ⑤ 이론교육과 실천교육의 통합, ⑥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통일, ⑦ 단선형 학교제도, ⑧ 평등주의 교육, ⑨ 자아비판 및 집단비판 교육방법 활용이라는 특성을 보여준다.²¹⁾

20) 레닌의 부인으로서 소비에트 교육의 창시자이다.

21) 김동규, 북한의 교육학, 문맥사: 1990. 이온죽,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법문사: 1995. 참조.

(2) 북한 교육의 이념과 목표

북한의 교육도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교육의 보편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 특유의 주체사상과 접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이영애 외, 1996: 311). 김동규는 북한 교육의 기본원리를 남한적 시각에서 ① 이데올로기 교육, ② 혁명전통과 주체사상, ③ 집단과 평등주의 사상, ④ 조기교육 효과의 극대화, ⑤ 사랑과 미움의 양극적 감정 대비효과 교양, ⑥ 허위와 허구논리로 규정하고 있다²²⁾(김동규, 1996: 296-321).

북한 교육의 이념과 목표는 북한의 정치지도 이념의 교육·문화분야의 구체적 실천 영역이다. 노동당 규약 전문에서는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과 인민 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라고 그들의 정치노선을 밝히고 있다(통일교육원, 1997: 201).

1992년 개정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43조에는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건실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최종고, 1996: 80).

1976년 4월에 제정된 「어린이 보육 교양법」 제 1 조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 라고 규정하고, 제 2 조는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중요한 시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 교육학에 근거한 교육방법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 조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어린이 교양법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항일 혁명 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 전통을 이어받는 법이다’라고 하

22) 김동규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내 학자들과 재외국 거주 교포 학자들의 북한 교육 원리규정 내용은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주장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고 제 5조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어린이 보육 교양법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1977년 9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14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전체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사회주의 교육의 원리, 제2장은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 제3장은 사회주의 교육의 방법, 제4장은 사회주의 교육의 제도, 제5장은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²³⁾

이 테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주체의 교육 강령이며 공산주의적 혁명인재 교육에 참다운 길을 명시한 교육에 관한 이론, 실천적 문제에 과학적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이며 교육총서’라고 북한에서 평가되고 있다(김병린, 1989: 226-256).

1장의 사회주의 교육원리에서는 교육을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사상·문화 교양의 무기’로 정의하고 교육목표를 전 인민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만드는 데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교육에서 당성, 노동계급성을 구현해야 한다. 둘째, 교육에서 주체를 세워야 한다. 셋째, 교육과 혁명 실천을 결합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주의 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2장의 사회주의 교육내용에서는 정치사상 교양, 과학기술 교육, 체육 교육을 제시하면서 그 중에서도 정치사상 교양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3장의 교육방법에서는 강압적 방법이 아닌 깨우쳐 주는 교수방법, 이론과 실천, 교육과 노동을 결합하는 학습, 조직 및 사회 정치활동을 통한 교육,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결합하는 학습,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병행을 들고 있다.

23) 김형찬 편, 북한의 교육, 을유문화사, 1997, 부록.

정치사상 교양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정치사상 교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다.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적 인간이 가져야 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학생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혁명인재로 될 수 있다. 사회주의 교육에서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하며 여기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4장 사회주의 교육제도에서는 전반적 의무제, 무료교육, 일하며 배우는 제도, 어린이 보육 교양사업을 언급하였고, 5장은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면 북한의 교육 이념과 목표는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공산주의 혁명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3) 북한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

북한의 교육과 교육제도 중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다. 지·덕·체를 갖춘 전인교육, 조기교육제도, 이론과 실천교육의 통합,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성, 협동학습 방법 등은 개별화하여 볼 때,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들과 북한의 교육이념과 목표, 교육과정의 실제, 교과서 내용과 연결하여 보면 결코 긍정적인 제요소들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 결점이다.

북한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과내용과 시간 수를 보면 지도자에 대한 신격화, 우상화 교육이 내용의 주류를 이룬다.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신격화 교육은 탁아소에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표 3-1> 북한의 탁아소 일과표

순서	구 분	시 간		생 활 내 용
		부터	까지	
1	잠 깨 기	6시	6시 20분	잠자리 정돈 대·소변보기, 세수하기, 체온재기 2교대로 30분씩
2	세 수	6시 20분	7시	
3	아침 밥 먹 기	7시	8시	
4	자유 시간	8시	8시 30분	원수님 따라 배우기, 노래 공부 새참은 사탕, 과자 산보 준비 시간 포함
5	놀이 및 수업	8시 30분	9시 30분	
6	손 씻 기, 새 참	9시	9시 30분	
7	산 보	9시 30분	11시 30분	점심먹기 준비 2교대로 30분씩
8	손 씻 기	11시 30분	12시	
9	점심 밥 먹 기	12시	13시	
10	낮잠자기 준비	13시	13시 30분	손발 씻고 대·소변가리기 창문을 열고 깨움
11	낮 잠	13시 30분	15시 30분	
12	손 씻 기	15시 30분	16시	
13	새 참	16시	16시 30분	새참은 우유 기재를 이용하여 밖에서 진행 대·소변가리기
14	놀이 수 업	16시 30분	17시 30분	
15	손 씻 기	17시 30분	18시	
16	저녁 밥 먹 기	18시	19시	2교대로 30분씩 바깥바람쏘이기
17	자유 시간	19시	19시 30분	
18	목 욱	19시 30분	20시	
19	새 참	20시	20시 30분	새참은 사탕, 과자 손씻고 대·소변보기
20	밤잠자기 준비	20시 30분	21시	
21	밤 잠	21시	아침 6시	

※ 출처 : 서동익, 「북에서 사는 모습-그 현장 증언」 (서울: 북한연구소, 1987), 22-23.

탁아소 교육내용 중 원수님 따라 배우기는 조기교육의 핵심을 이룬다. 유일한 스승이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김일성 할아버지 원수님, 김정일 아버지 원수님에 대한 흠모하고 숭앙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김일성 사후, 김일성 할아버지 원수님은 자연스럽게 김정일 아버지 원수님으로 바뀌고 있다. 노래 공부도 모두가 지도자를 찬양하는 노래이다(이영애, 1996: 341-342).

○ 김정일 원수님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매우 존경하셨습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아랫목은 엄마자리로 비워두었습니다.

○ 아름다운 만경대는 원수님의 고향, 우리 모두 언제나 가보고 싶어요.

○ 빨간 사과 따다가 바구니에 담아서 한알두알 따는 사과 누구에게 드릴까. 우리들을 사랑하신 수령님께 드리자.

인민학교 교과 과정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린시절을 각각의 교과목으로 구성하여 우상화 하고 정치·사상교육을 실시한다. 즉 이 두 교과가 정치·사상 교과목이다. 정치·사상교육은 이들 교과 이외의 다른 교과목을 교육할 때에도 김일성 부자와 연관시켜 우상화와 정치·사상교육 목적과 교과에 특정된 순수목적에 동시에 달성하도록 교과 내용을 편성하였다. 문용린이 북한 인민학교 전학년 국어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문용린, 1990: 409-411) 전 교과과정 196개 단원 중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주제가 124개 단원(63%), 노동애호 등 공산주의 도덕교양의 내용과 남한과 미국 등 적에 대한 적개심 내지 투쟁심 고취내용이 40개 단원(20%)에 달하여, 순수 국어를 가르치는 내용은 32개 단원(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 북한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각 단원의 주제별 분포

()은 %

구분 \ 주제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 가계	대남· 미·일 적개심	공산주의 도덕교양	언어생활	계
인민학교 (1-4)	32 (20)	25 (16)	7 (4)	13 (8)	31 (19)	53 (33)	161 (100)
고등중학교 (1-3)	16 (21)	9 (12)	7 (10)	10 (13)	12 (16)	21 (28)	75 (100)

※ 출처: 통일원, 「북한 교과서 분석」, 1992: 1.

<표 3-3> 북한 인민학교의 교과 과정안

구분 과목명	총시간	주 당 수 업 시 간 수							
		1 학 년		2 학 년		3 학 년		4 학 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김 일 성 어린이시절	152	1	1	1	1	1	1	1	1
김 정 일 어린이시절	152	1	1	1	1	1	1	1	1
국 어	1,142	8	8	8	8	7	7	7	7
외 국 어	37							1	1
수 학	834	5	5	5	5	6	6	6	6
자 연	222					3	3	3	3
체 육	304	2	2	2	2	2	2	2	2
음 악	304	2	2	2	2	2	2	2	2
도화·공작	304	2	2	2	2	2	2	2	2
계	3,451	21	21	21	21	24	24	25	25

※ 출처: 통일원 「북한 교과서 분석」 1992: 76.

고등중학교 과정은 총 6년으로 중등반 4년, 고등반 2년으로 되어있다. 중등 정책방향의 지침에서 '고등중학교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의 사상, 이론,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다방면적 지식을 가진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고 하여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관철하여 학생들의 사상교양에 중점을 두며 혁명적 세계관의 골격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영애, 1996: 346).

직접적인 정치, 사상교과로는 김일성 혁명활동, 김일성 혁명력사, 김정일 혁명활동, 김정일 혁명력사, 현행 당정책으로 구성되었다. 그 외의 교과에서도 인민학교 교과내용의 편성과 마찬가지로 실제의 교과내용에서는 지도자의 신격화와 정치교육 목표를 우회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다.

교과과정안의 과목 영역별 비중치를 보면, 국어의 경우 총 75개 단원 중 정치·사상성을 주제로 한 단원이 54개 단원(72%)이며, 언어 생활에 관한 단원이 21개(28%)이다. 편성순서도 인민학교의 국어와 마찬가지로 매학년 시작의 제1과는 김일성을 찬양하며 흠모하는 시를 싣고 있다.

미제를 쳐부신 영웅의 땅에 낙원을 펼치신 아버지 장군님, 찬란한
조선의 미래를 위해 인민은 안녕을 축복합니다(고등중학교 제2학년 국
어 제1과 '축복의 노래').

권력세습화 과정에서 김정일을 미화하여 칭송하는 내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김정일 우상화의 교과 내용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김정일 미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남녘 동포들을 생각하시며 수령님 잠 못 드시던 그 밤들을
함께 지새워 오신 지도자 동지 축포가 터져 내리는 명절의 밤에도
마음속에 더듬어 안으시던 저 햇빛은 강토가 아니던가...
그이의 결심은 조선의 결심 그이의 신념은 조선의 신념
'그이께서는 임진강 기슭을 걸으신다' (고등중학교 2학년 국어 제15과).

<표 3-4> 고등중학교 교육과정안

구 분 과 목 명	총 시 간	주 당 수 업 시 간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김 일 성 혁 명 활 동	150	2	1	1			
김 일 성 혁 명 력 사	195				2	2	2
김 정 일 혁 명 활 동	112	2	1	1			
김 정 일 혁 명 력 사	110				1	1	1
현 행 당 정 책	102						
국 어 문 학	769	5		4	(34)	(34)	(34)
한 문	251	2	4/5	1	4	3	2
외 국 어	591	3		3	1	1	1
력 사	280		2/1	2	3	3	3
지 리	344	2	3	2	2	2	2
수 학	1,283	7	1	6	2	2	
물 리	549		2	3	6	6	7
화 학	381		7	2	3	4	5
생 물	410		2	2	3	4	4
체 육	309	2		2	2	3	3
음 악	143	1	3	1	1		1
미 술	76	1	2		1	1	
녀 학 생 실 습 (녀)	210	1	1	1			
기 계 조 작 실 습 (남)	197		1		1	1	1
제 도	60		1				
실 습: 전 자 기 계	120				1	1	
선 택 과 정	100				(30)	(50)	(34)
						(26)	(74)
계	6,742	27	31	31	34	34	34

※ 출처: 통일원, 「북한 교과서 분석」 1992: 77.

<표 3-5> 고등중학교 과목 영역별 배치

영역	북한
	고 등 중 학 교
수학·과학 (기계전기기술 포함)	41.6%
국 어·외 국 어	22.8%
정 치·사 상	11.6%
사 회	9.3%
예 · 체 능	7.6%
기 타	7.1%
계	총 6,626시간 (100%)

※ 출처: 강신창 외 10명, 「북한학 개론」(서울: 법문사, 1996), 348.

외국어 교육에서도 예외 없이 북한은 외국어의 습득능력과 정치, 사상 교화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양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정치교양의 목적성을 가진 북한 영어교과서 내용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김형찬, 1996: 276).

Long, long ago there was a village called Chestnut Village by the River Amnok-gang. The villagers were all poor and tenanted the farmland of Landlord Hwang. Dolsoe also worked for Landlord Hwang as a farm hand. He was forced to toil to death. However, he got nothing but a few maize-cakes a day. All the year round he was in rags and hungry.

The portraits of the great leader Marshal Kim Il Sung and the dear leader Mr. Kim Jong Il are on the front walls of the class-rooms. On the floor we have the Study Hall of Marshall Kim IL Sung's Revolutionary Activities.

외국어 교육은 당해 외국의 생활문화의 정확한 이해와 그 문화에의 동화과정을 통하여 언어습득 능력이 길러 진다는 상식에서 이탈한 북한의 외국어 교육에서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회교육 측면을 살펴보면 90년 5월 김일성은 ‘조국통일 5대 방침’으로 ‘평화적 환경 마련, 자유내왕 및 전면개방, 유리한 국제적 환경조성 원칙에 입각한 대외관계 발전, 대화발전, 전민족적 통일전선 형성’을 제기하였다. 89년 평양축전 이후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각지에는 ‘조선은 하나다’ ‘조국은 하나다’,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 주자’라는 등의 통일구호가 거리를 메우고 북한 주민 누구를 만나건 가장 먼저 들고 나오는 화제는 통일문제라고 북한방문자들은 전하고있다(연합통신 편저, 1991: 347). 또한 1993년 4월 7일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김일성이 직접 작성하여 평양에서 개막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 제안한 중립적 통일국가의 창립, 동족간의 정치적인 논쟁의 중지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남북문제 연구소, 1996: 83-86).

근 반세기에 걸치는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의지이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전민족이 대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유산자이건, 무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 나가야 한다.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어 모두가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융성, 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민족분쟁을 끝장내고 통일된 7천만 거래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쳐야 한다.

① 온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당·각파·각계 각층의 모든 민족 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전민족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전민족 통일국가는 북과 남의 두지역 정

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연방국가로 되어야 하며, 어느 대국에도 기울이지 않고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불력 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

② 민족애와 민족 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전민족은 각자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연결시켜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혁명으로 지키려는 하나의 뜻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가지고 민족의 주체의식을 쫓먹는 사대주의와 민족 허무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

③ 공존·공영·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 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말고 함께 진보와 번영을 누려가야 한다.

지역적·정치적 이익에 앞서 전민족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하며, 모든 노력을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 기울여야 한다.

④ 동족 사이의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의 전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대결을 추구하거나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형태의 전쟁을 중지하고 비방·중상을 그만 두어야 한다. 동족끼리 적대시 하지 말고, 민족의 힘을 합쳐 외세의 침략과 건설에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⑤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상대방을 서로 위협하지 말아야 하며,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상대방에 자기 목적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을 흡수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⑥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한다. 통일논의의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정치적 반대파라 하여 탄압, 보복, 박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친북, 친남을 시비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정치범을 석방, 복권시켜 조국통일 위업에 함께 이바지 하게 하여야 한다.

⑦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財富)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것을 민족단결을 도모하는데 이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통일이 되기 전에는 물론, 통일이 된 후에도 국가적 소유, 협동적 소유,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 외국 자본과의 공동 이권을 보호하여야 하고, 과학교육·문화예술·언론출판·보건체육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명예와 자격을 인정하며,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혜택을 계속 보장하여야 한다.

⑧ 접촉·내왕·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 접촉과 내왕을 가로 막는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고,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내왕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 각당, 각파·각계의 각층에게 동등한 대화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쌍무적이며 다무적 대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⑨ 조국 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에서 조국 통일에 유익한 것은 편견없이 지지 성원하고, 각자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서로 보조를 같이 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조국 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단체와 각계각층 동포들이 조직적으로 연합하여야 한다.

⑩ 민족 대단결과 조국통일의 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민족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과 애국열사들과 그 후예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야 한다.

지난날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들도 과거를 뒤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광명으로 대하며, 조국통일에 이바지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위의 ‘조국통일 5대 방침’이나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10대 강령’들은, 정치지도이념의 구체적 실천이라는 북한교육의 특성으로 볼 때, 북한 통일교육 내용이 되었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나 그들 내용이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더구나 제시된 조국통일 방침이나 강령들은 북한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교육이념이나 목표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이하 강령으로 표기함)은,

구구절절이 순수한 민족주의, 평화주의에 입각한 조국통일의 절실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다. 강령의 어느 구석에도 그들의 한반도 적화통일 의도는 찾아 볼 수 없으며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민족의 이상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일념뿐이다. 또한 평양과 각 지역에서 무수히 발견할 수 있다는 ‘조국은 하나이며 후손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자’는 통일구호는 한민족의 통일 염원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러나, 강령이 제기된지 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북한에서 강령내용이나 북한전역에서 볼 수 있는 통일 구호들은, 그들의 한반도 통일정책으로 구체화되지 않았다. 강령이나 통일 구호들이 북한 당국의 진실이라면 남한 당국의 대북제의 특히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받아들여 그들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과 함께 남북 대표들이 만나 진지하게 검토되고 논의 되어야 했다. 그러나 남한의 대북접촉 제의 마저도 빈번히 거부해 왔다. 이러한 북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이중적 태도는, 평화통일에 관한 그들의 주장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게 한다. 즉 민족 대단결 강령이나 통일구호가 그들의 진심이 아닌 대외 선전 선동용 내지는 주민 결속용일 수 있다는 의심을 낳게 한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북한 방문자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보여주는 통일 열정은²⁴⁾ 그들에 대한 의심을 더하게 하고 통일교육의 단면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즉 북한의 평화통일 교육은 통일을 위한 실천적 통일교육이라기 보다는 체제통합의 한 방편으로 인민들의 가슴에 상징·조작적으로 통일열기를 불어넣는 선전 선동 교육적 측면이 강조(연합통신, 1991: 347-352)되는 것

24) 연합통신의 장영섭 기자는 IPU총회 취재 방북기에서 “북녘땅에서는 그 누구를 만나건 가장 먼저 들고 나오는 문제가 통일이라는 지상명제이다”라면서 ‘북의 주민들이 내세우는 통일론은 비록 정치학습을 통해 배운 것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내용이 많았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통일이라는 명제가 호소력있게 담겨 있어 민족적 동질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연합통신 권재현 기자의 청소년 축구 취재 방북기에서는 “3-4의 어린이들이 ‘우리의 소원’을 함창하면서 두 눈에 구슬 같은 눈물을 흘렸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얼굴도 보지 못했던 “립수경 언니를 생각해서”라고 대답할 때 우리는 이들에게서 무엇을 느낄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으로 추정된다.

(3) 남북한 통일교육의 평가

남한은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통일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북한은 북한교과서를 분석한 간접 자료와 교육이념과 목표, 북한 방문자들이 감지한 북한 주민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하여 통일교육의 내용을 유추하여 분석해 보았다.

먼저 남한의 통일교육을 보면, 정부의 통일정책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정부의 통일정책 홍보차원에서 통일교육이 실시되어 왔다는 것이 그 특징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통일정책의 변화는 통일교육의 변화를 가져왔다.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이전에는 금기시 되었던 평화통일 논의가 공동성명에 따라 활성화되었고 「북한괴뢰」로 표기되었던 호칭이 「북한」으로 바뀌었다. 교육의 내용도 종래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체제를 체제경쟁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대화와 타협의 파트너로 받아들였다.

80년대 후반 제6공화국 출범으로 추진된 북방정책에 따른 통일정책의 변화는 통일교육의 전환점을 가져왔다. 북한을 체제경쟁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통일교육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북한을 하나의 민족으로서 상호 협력하여 세계평화와 통일을 달성해야 하는 체제를 달리하는 민족공동체로 간주하여 한민족 공동체 통일교육에 관심을 가지기에 이르렀다.

90년대에 들어와 문민정부 출범으로 가속화된 민주화에 따라 남한은 한층 더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제시하였다. 적극적으로 제시된 통일정책은 통일교육에 반영되어 종래의 남한 편향적인 안보를 강조했던 통일교육이 통일과 안보의 균형을 이루면서 통일교육의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지속적인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의 발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통일교육이 7·4 공동성명의 통일 대원칙에서 합의한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민족의 대단결 원칙에 입각한 통일교육에는 이르지 못한 것

으로 보여진다.

한국의 통일교육이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가는 전술하였다. 현재의 자본주의만을 옹호하는 폐쇄적 자유민주주의 교육내용을 가지고는 북한식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에 굳어진 북한정부 당국자는 물론 일반 북한 주민들과의 대화와 타협에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통일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북한에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통일교육이라는 교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체제교육, 정치사상교육의 일환으로 각 교과목에서 ‘남조선 해방’의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북한의 교육 특성상 김일성 또는 김정일의 교시나 지도, 당의 정책, 최고인민회의 결의, 북한 당국의 대남제의 등이 있을 때마다 수령과 지도자의 업적 찬양, 당과 정부 정책의 홍보, 주민결속과 통제의 차원에서 수시로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을 통하여 ‘남조선 해방’을 역설하면서 조국통일 결의를 다지고 그것을 교육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이 일찍부터 평화통일을 주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교육 이념과 목표, 교과내용 등의 구체적인 교육의 장면에서는 순수하게 민족적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다룬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현행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 9 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하였고 조선로동당 규약은 「---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의 통일교육은 헌법적, 정책적 차원에서 포괄적인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해방을 겨냥한 정치사상 교양의 일환으로 실시된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60년대부터 평화통일을 주장해 왔다. 남한에서 평화통일 논의가 금기로 되어 있었던 60년대에 이미 그들은 평화통일을 주장하여 통일논의에 있어서 남한을 궁지로 몰아 넣었다.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통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통일이란, '남조선 인민이 봉기하여 미제와 미제의 꼭두각시 정권인 남한의 괴뢰정권을 타도하고 남조선에 인민(민주)정권이 세워지고 그 정권이 공화국 북반부와 협력하여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북한의 통일교육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통일교육은, 첫째, 단순한 통일의지를 담은 실천적 교육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주의 혁명투쟁 교육이다. 둘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 광범위하게 취급된다. 셋째, 정책적 필요에 따라 수시적으로 선전 선동교육으로 이용된다. 넷째, 미제 및 남조선 정권과 남조선 인민과의 離間을 통한 통일전선 형성이 강조된다. 한마디로 북한의 통일교육은 진정한 민족통일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북한체제의 유지, 강화, 확대 교육으로 평가된다.

IV. 남북한 청소년교류 및 청소년 의식

1.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실상과 문제점

1) 남한 청년학생들의 통일요구와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실상

지금까지 남한에서는 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남북교류가 정부주도에 의해 끊임없이 추진되어 왔다. 또 한편으로는 청년학생들의 통일요구 차원에서 정부의 통일정책과 대립·갈등하면서 학생들은 계속하여 남북교류를 제기했으며, 마침내 89년 평양축전에 정부의 승인없이 학생대표가 파견되어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국의 학생운동은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민주화 운동으로 출발하여 통일운동으로 귀결되어 왔다.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는 조국통일이기 때문에 학생운동의 기저에는 통일의 염원이 깔려있다. 그러므로 과거 자유당 정권과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학생운동은 민주화를 열망하는 민주화 세력과 연합하여 항쟁을 계속한 결과 문민정부를 출범시켰으며 마침내는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하여 국민정권이 출현을 보게 되었다. 민주화를 실현한 학생운동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통일운동으로 전환되었다.

학생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통일문제에 관한 시각은 정부의 그것과는 항상 갈등·대립하여 왔다. 정부는 체제안보적 입장에서 체제보위와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적 통일정책을 구사하면서 남북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학생들은 조국통일의 열정과 민족감정을 앞세워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를 등거리에 놓고 이상에 치우친 통일과 교류·협력을 주장해 왔다.

남한 정부는 실현성을 도외시 한 통일의 열정과 민족감정을 앞세운 학생들의 통일주장을, 북한에서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론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적행위로 간주하여 탄압해 왔다. 실제로 학생들이 주장해온 통일과 교류의 내용중에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점이 꽤 많이 발견된다. 그러나 학생들의 통일 주장과 북한의 평화통일 주장은 근본적으로 동기에서 차이

가 있다. 학생들의 주장은 순수한 민족애와 애국적 열정의 발로인 반면 북한의 주장은 다분히 정략적이며 선동적인 불순한 동기가 숨겨져 있다.

그동안 한국 학생운동의 주류를 이루어 온 대학생들은 청소년 세대이다. 1960년 4·19혁명에 의하여 자유당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학생들은 곧바로 민족통일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최초로 제기하여 정치사회적 과문이 일기 시작하였다. 1960년 9월 고려대학교에서는 ‘남북통일 전국 대학생 토론 대회’를 열고 미군 철수와 통일 문제 협의를 위하여 남북한 대표로 구성된 ‘전국 통일 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한 교류를 통한 민족, 자주, 통일 성취를 주장하였다.

또한 1960년 11월 18일 서울대학교에서는 ‘민족통일 학생연맹’을 결성하여 남북한 서신교류를 정부와 사회에 촉구하였다. 뒤이어 각 대학에서는 시국선언문 발표를 통하여 문화교류, 서신왕래, 경제교류, 학생회담 등 비정치 분야의 남북교류를 호소하였다.

1961년 5월에는 ‘민족 통일 전국 학생연맹’이 창립되어 남북한 학생회담을 지지하고 민족 자주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 정치협상, 남북한간의 서신, 문화, 인사 등의 교류와 남북체육대회 개최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민주당 장면정권은 이러한 학생들의 호소와 주장을 강력히 저지하였으며 5·16 군사 쿠데타로 학생들의 민족통일 운동은 미처 싹도 틔우지 못한 채 가혹한 탄압을 맞았다.

5·16 군사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민간차원의 통일문제 논의를 엄격히 금지하고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만을 허용하였다. 통일문제 논의에 대한 정부창구 단일화 정책은 8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1976년 5월 방콕 아시아 청소년 축구대회시 대한축구협회 김종하 회장이 남북한 축구교류를 북한측에 제의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80년대의 후반에 들어서면서 국제적으로는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국내적으로는 급속한 민주화의 진전과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대회에 공산권 국가의 참가 유도의 필요성 등은 6공화국의 대북, 대공산권 정책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6공화국 정부는 적극적인 북방정책,

개방적인 대북정책을 전개하게 되어 학생들도 이제까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방향을 분단 극복을 위한 통일운동으로 전환했다.

1988년 3월 서울대학교 학생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김중기 후보는, 북한측 학생들에게 공개서한 형식으로 남북한 학생회담을 판문점에서 개최하여, 민족 화해를 위한 남북한 청년학생의 국토 종단 순례 대행진과 민족 단결을 위한 남북한 청년학생 체육대회 개최문제를 논의하자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명시하여²⁵⁾ 제의하였다. 이에 북한은 즉시 응답하여 1988년 4월 2일 답신을 보낼 것을 발표하였으나 한국정부는 통일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를 들어 답신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로 비롯된 남북한 학생교류 운동은 계속 확산되어 서울지역 총학생회가 연합하여 1천만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책과 남북한 청년학생간의 상호 교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청년학생 대표간의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하였다. 1988년 5월 14일에는 전국 대학생 협의회를 열고 올림픽 공동개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남북한 학생회담을 열자고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그 후 학생들은 남북 학생회담 성사를 위한 집회를 계속하였으나 정부의 저지로 끝내 성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회담성사를 위한 노력은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군사 쿠데타 이후 철저하게 금지되어 왔던 민간 차원의 통일 논의의 물꼬를 트게되었으며 조국 통일을 위한 범국민 연합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박성희 외, 1992: 46-49).

이와 같이 학생들이 남북한 학생교류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중에, 정부는 1988. 7. 15일 문교부를 통해 '남북한 교육당국자회담'을 제의하고 이 회담을 통해 남북한 학생간의 조국 순례 대행진과 친선 체육 교환경기 및 음악, 미술, 무용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공연 및 전시회의 교환개최, 명승지와 민족 사적지를 관광하는 '수학 여행단' 교환 등 학생교류 추진에 관련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 제안을 학생들 문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였다.

25) 회담 일자: 1988. 6. 10일. 대행진 일자: 1988. 8. 1-8. 14일. 체육대회 일자: 1988. 9. 15-17일.

1988년 12월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는 89년 평양에서 열리는 세계청년 학생축전에 남한의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전대협)를 초청하였고 전대협은 초청을 수락하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한 대학생교류 추진위원회'의 평양축전 참가 추진은 거부하였다. 정부가 전대협의 평양축전 참가를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1989년 7월 임수경을 남한 학생 대표로 비밀리에 파견하여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시켜 정치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1990년 8월 학생들은 정부의 저지속에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 대회'를 열고 남북한의 전면 개방과 자유왕래, 남북한 군축과 평화협정 체결, 평화통일 방안, 범민족 대회의 의의와 방향에 대하여 대토론회와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1991년 6월에도 학생들은 정부가 참가를 불허한 베를린 '남북 청년학생 해외 통일 대축전'에 대표파견을 강행했다.

1993년 문민정부 출현으로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는 더 이상 그 명분이 없어졌다. 이리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학생운동에 무관심하게 되었고 소수의 학생들만이 남북 통일과 교류에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통일과 교류에 적극성을 띤 학생들은 1993년 4월 한총련(한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을 발족시켜 재야 통일운동 단체인 범민련(조국통일 범민족연합)과 연합하여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과 남북교류를 촉구하는 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시에는 각 대학에서 조문과 분향소 설치문제를 둘러싼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으며 1995년 조국광복 50주년을 맞아 한총련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은 정부의 결정을 불복하면서 범민족대회 및 민족통일대축전을 열기도 하였다. 그들은 최근 북한의 주장과 흡사한 주한 미군 철수,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과 반미 자주통일을 주장하는 과격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부를 자극하여 정치사회적 갈등과 긴장상태를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충정을 이해하려는 통일을 염원하는 양심적인 국민들마저도 그들의 과격한 주장에 실망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통일원의 「한총련의 투쟁노선과 북한의 대남 혁명노선 비교도」는 지나치게 과장되어 도식화된 면도 보이나 학생들의

주장도 일반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온건하다고는 볼 수 없다.

<표 4-1> 한총련의 투쟁노선과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비교

구 분	한총련의 투쟁노선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비 고
지도이념	주체사상	주체사상	동일
한국사회 평가	식민지 半 자본주의 사회	식민지 半 봉건사회→식민지 半 자본주의 사회	유사
혁명의 성 격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인민대 신 민중 사용
당면(대남) 투쟁과제	자주 민주 통일(구국운동의 좌 표)	자주 민주 통일(대남투쟁 가령)	동일
3대 투쟁 목표	반미 지주화, 반파쇼 민주화, 조 국통일 투쟁(선 미제축출후 파쇼 타도)	반미 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조 국통일 투쟁(선미제 축출후 파 쇼 타도)	동일
혁명역량 편성	주력군: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보조역량: 각계각층 민중	주력군: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보조역량: 각계각층 인민	인민대 신 민중 사용

※ 자 료: 통일원 통일문제 자료해설, 1998.

또 한편으로 학생들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종교계 및 북한동기 운동단체와 협력하여 북한돕기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학생다운 참신한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와 통일과 교류에 유리한 국내외적 정세변화, 남한 정부의 적극적인 통일과 교류정책, 통일과 교류에 대한 학생들의 과격하리 만치 적극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고 양측에 피해를 주지 않는 비정치적인 청소년 학생들의 수심건에 달하는 방북신청이 있었으나 성사된 것은 거의 전무하다. 예외적으로 방북이 성사된 것은 1991년 5월 8일 제6회 세계청소년 축구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1차 서울 평가전과 5월 12일 제2차 평양 평가전후 단일팀을 구성하여 리스본 대회에 참가한 것과 1998년 5월 13일 리틀 엔젤스의 평양공연 방문이다. 이 두건이 분단

반세기 동안의 청소년 교류의 전부이다. 공인된 2건의 교류외에 정부가 불허하여 실정법을 위반하고 강행된 학생들의 교류가 몇 건 있을 뿐이다.²⁶⁾

2)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한계와 문제점

지금까지 학생운동에서 나타난 청년학생들의 통일 요구에서 비롯된 남북한 청소년 교류와 협력과정을 살펴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소년들의 교류와 협력육구는 매우 강렬한 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청년학생들은 통일의 염원을 가장 절실하게 표명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분단 반세기 동안 ‘선 건설 후 통일’ 또는 ‘선 평화정착 후 통일’ 정책을 고수하면서 통일문제 창구의 단일화를 표방하여 국민들의 통일염원에 대한 행동표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거나 심지어는 통일문제 논의 자체마저 금지하는 정책을 펴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주화의 발걸음이 빨라진 80년대 후반부터는 강렬한 국민들의 통일염원은 자연스럽게 표출되었으며, 정부로서도 민간차원의 통일문제 논의의 족쇄를 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로부터 민간차원의 통일문제 논의가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통일 염원은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개선은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와 갈증을 충족시킬 만큼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더욱 청소년 분야에서의 접촉과 교류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보더라도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남북한은 그 동안 조국 순례대행진, 친선 체육경기, 문화·예술분야의 각종교환, 민족 사적지 및 명승지의 답사와 수학여행 등 수없이 많은 청소년 교류에 관한 상호제안과 접촉과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은 거의 모두가 성

26) 1989년 7월 임수경의 평양축전 참가, 1991년 7월 박성희와 성용승 두 학생이 베를린에서 열린 ‘남북 청년학생 해의 통일대축전’ 참가 등이다.

사되지 못하고 단지 제안·제시에 그쳤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이처럼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남북 관계의 총체적인 면에서 보면,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주체인 남한의 정부당국과 학생, 북한당국 3자가 상호 갈등·대립하는 인식, 접근 목적과 방법을 들 수 있다.

남북한 양 정부당국은 자기 체제를 우선시 하여 고도의 정치적, 체제적 목적을 바탕으로 깔고 자기들 목적과 방법에 유리 또는 불리한가를 엄격히 계산하면서 취사선택적으로 교류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여 왔다.²⁷⁾ 그리고 남한의 청년학생들은 남북한 양측 기존 정치세력들(양측 정부는 물론 야당까지 포함하는 제도권)의 통일외지와 남북 통일, 교류·협력정책을 불신하고 남과 북의 민중이 연합하여 통일을 향한 교류와 협력을 해야한다는 이른바 민중통일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학생들의 주장은 정부의 통일운동에 있어서의 대북창구 단일화 원칙과 배치된다. 이러한 3자의 통일에 대한 손발이 맞지 않는 동상이몽 속에서 추진되는 교류와 협력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또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로 국한해서 보면 청소년 분야의 교류는 정치, 군사, 경제의 교류와 같이 주목을 받지도 못하고 당장의 파급효과나 선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청소년 교류는 미래의 남북관계에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서로 상반되는 이념과 체제속에서 서로 다르게 성장한 남북한 청소년간의 접촉과 교류는 그들에게 상당한 충격과 변화를 주어 체제위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구나 양측 체제는 자기 체제의 정통성과 상대 체제의 이단성을 강조하여 상대 체제의 진상을 왜곡하는 과장된 교육을 해왔다는 사실은 그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청소년 접촉과 교류를 통한 진실

27) 남한 당국은 '선 신뢰 회복 후 평화 체제구축'의 원칙을 고수하여 기능주의적 접근을 모색하고 북한 당국은 '선 평화 체제구축 후 신뢰 회복'을 고수하여 정치·군사 문제의 우선해결을 고집하고 있다.

이 알려지는 것이 양측 정부를 곤혹스럽게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 교류와 접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남한에서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왜곡되었던 공산권과 북한관계 교육내용이 수정되어 현재는 사실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종래의 왜곡된 남한에 관한 교육내용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보다도 한층 더 남한의 실상과 거리가 먼 교육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교육현실은 남북한 청소년 접촉과 교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 청소년 접촉과 교류는 북한이 남한의 실상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교육을 계속하고, 남한 정부의 대북 접촉창구의 단일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급작스럽게 진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즉 남북한 양측 정부가 정략적 목적을 버리고 미래 조국통일의 주체가 될 남과 북의 청소년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한 청소년 접촉과 교류를 도모하여 그를 뒷받침 해야만 남북한 청소년 접촉과 교류는 활성화 될 것이다. 남북한 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남북한 분단 47년만에 이루어 낸 「남북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교류·협력분야에 청소년 부분의 교류가 빠졌다는 사실은 청소년 교류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그러나, 통일은 미래적인 것이고 미래 통일의 주역은 오늘의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남북한 청소년 접촉과 교류는 정치, 경제, 군사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못지 않게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접촉과 교류는 뒷전에 밀려 국민의 주목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접촉과 교류는 대표적인 비정치적인 분야로 남북간의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측면에서도 비교적 첨예하지 않은 분야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분야이기도 하다. 청소년 접촉과 교류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들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남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동서독의 통일은 한국 국민들에게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부풀리게 했다. 이로 인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 되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 조사도 각종기관과 통일문제 연구자 및 청소년 문제 연구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이루어 졌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 11월과 1998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실시한 「통일교육 개선을 위한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를 종합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알아보았다. 이 조사는, 1997년 11월 조사에서, 15명의 학생(4개조로 편성)이 전국의 초·중·고·대학생 591명을 대상으로 면접 또는 설문지 배포를 통하여 조사하였고, 1998년 4월 조사에서는, 31명의 학생(6개조로 편성)이 역시 전국의 초·중·고·대학생 765명을 대상으로 면접 또는 설문지 배포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각 조는 독자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면접 또는 설문지 배포, 조사내용, 대상 등 각 조가 자유롭게 선택하였다. 조사가 조 개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없다. 그러나 각 조의 조사내용은 유사한 내용이 많았으며 유사한 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조의 조사내용 중 유사한 분석 결과가 나와 각 조의 조사결과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과 유의도와 타당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조사 내용만을 취사선택하여 남한 청소년들의 통일관, 북한관, 민족의식, 청소년 교류관 등을 알아보았다.

1) 통일관

통일 의지를 묻는 ① ‘통일을 원하십니까?’라는 김홍례조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 청소년의 통일의지

학교 급별 응답자 수 \ 응답내용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나와는 상관 없다	계 (%)
중학생 (%)	58 (58)	28 (28)	14 (14)	100 (100)
고교생 (%)	63 (63)	24 (24)	13 (13)	100 (100)
대학생 (%)	96 (87)	9 (8)	6 (5)	111 (100)
계	217 (70)	61 (19)	33 (11)	311 (100)

중학생들 보다는 더 많은 고교생들이, 고교생들 보다는 더 많은 대학생들이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통일에 무관심 내지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의 숫자는 나이가 많고, 많이 배우고 사회생활의 폭이 넓어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교육의 효과인지 사회생활의 영향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바람직한 현상임에는 틀림없다.

(1) 통일을 원하는 학생들의 이유

통일을 원하는 학생들의 이유를 정리해 보면 경제적 이유, 정치적 이유, 한 민족이기 때문에, 기타 이유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이유에서는 ‘우리의 경제 위기를 통일로 극복할 수 있다.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을 얻을 수 있다. 땅이 넓어진다’는 구체적인 답변 외에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일본과 경쟁할만 하다’ 등 간접적인 답변내용도 포함되었다. 정치적인 이유에서는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실현, 자유의 확대, 북한의 위협을 병자한 자유의 유보, 독재의 추방’ 등을 들었다. 민족적 이유에서는 ‘한 국가를 이루어 살아 왔었던 한민족이기 때문에 한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내세웠고. 또 ‘피는 이데올로기 보다 진하다’는 논리로 이산가족의 아픔의 해소를 든 학생이 많았기 때문에 이산가족 아픔의 해소를 사회적 이유로 분류하지 않고 민족적 이유에 포함시켰다. 기타 이유에서는 백두산, 금강산관광, 그냥, 소원, 북한이 불쌍하다, 일본이 우습게 본다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4-3> 청소년들이 통일을 원하는 이유

통일을 원하는 이유	응답건수	응답 %
경제적 이유	121/243	50
정치적 이유	37 /243	15
민족적 이유	63 /243	26
기타 이유	22 /243	9

* 본고에서는 복수응답의 개별응답으로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응답자의 성격이 다른 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개별화하여 별개의 응답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므로 응답건수가 응답자수를 초과할 수 있음.

총 응답수 243건중 통일을 원하는 이유로 경제적, 정치적인 현실적 이유를 든 것은 158건으로 전체 응답건수의 65%를 차지한다. 반면에 민족적 이유는 이산가족의 아픔이 포함되었는 데도 63건 26%에 불과하다. 이는 청소년들이 현실적 이해관계 즉 이기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을 원한다고 보여진다. 즉 자기들에게 이익이 없으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2) 통일을 원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이유

청소년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정리해 보면, 통일로 예상되는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약될 수 있다. 혼란을 이유로 든 학생들은 정치적 혼란, 사회적 혼란, 가치관, 도덕, 문화적 혼란, 이데올로기 사상적 혼란, 심지어는 혼란으로 인하여 정치·사회체제가 붕괴하여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멸망한다는 극단적인 이유마저도 들고 있다. 경제적 이유를 든 학생들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부터 통일은 남북한 모두의 경제를 붕괴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최악의 상태를 가상하는 통일 비판론까지 들고 있다. 또한 소수의 학생들은 이기주의적 입장에서 가난한 북한을 떠맡을 필요가 있겠느냐, 손해보는 통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유도 제시하고 있다. 기타 이유로는 ‘그냥, 북

한 사람이 싫어서, 불행한 사람을 책임지기 싫다,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는 등을 포함시켰다.

<표 4-4> 통일을 원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이유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응답건수	응답 %
예상되는 경제 악화	44 /115	38
예상되는 혼란	57 /115	50
기 타	14 /115	12

통일을 원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혼란을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들고 있다. 총 응답 115건수 중 57건, 50%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통일을 이룩하느냐에 따라 혼란과 충격은 커질 수도 극소화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치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응답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응답건수의 38%를 나타낸 경제적 이유는, 반대로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 반수 정도는 통일을 원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즉 같은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한편에서는 통일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다른 한편에서는 통일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양극적인 시각은 기성 세대들의 양극적 시각의 반영으로 보여진다, 통일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기존세력들은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희생을 과장평가하며 독일의 예를 들고 있다. 반면 통일염원 세력들은 통일후의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희망과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최근 통일비용과 통일후의 경제적 손익계산 연구물들은 공통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려움과 손실이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통일이 경제발전과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이득이 크다는 낙관적인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로 볼 때 경제적인 이유로 통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반통일적 변명으로 여겨진다.

(3) 통일추진의 주체

통일추진의 주체를 묻는 설문으로, 강소정 조의 ‘통일은 누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설문에서, 통일은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정부의 지원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통령(정부)이 주축이 되어 독자적으로가’ 11%, ‘대통령(정부)이 주축이 되고 국민모두가 협조하여’가 35%의 응답률을 보여 주고 있다. 반면, 대학생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12%로 나타났다.

<표 4-5> 통일추진의 주체

응답내용 \ 응답자수	응답자수 및 응답비율	
민간단체가 주축이되고 정부가 지원	48 /123	39%
정부가 주축이 되어 독자적으로	13 /123	11%
정부가 주축이 되고 국민모두의 협조	43 /123	35%
대학생이 주축	15 /123	12%
기타	4 /123	3%

응답결과를 분석해 보면 통일 추진은 민간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1%이고 정부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6%로 양분되어 민간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약간 우세하다. 그러나 정부 또는 민간 어느 일방이 독점적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을 절대 다수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11%에 불과하고 대학생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12%에 지나지 않아, 정부 또는 민간의 어느 일방적 통일 추진 의견을 합쳐도 23%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정부 또는 민간이 주축이 되어 상호 협력하여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합치면 74%에 이른다. 즉 통일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다수 청소년들의 의견으로 나타났다.

2) 북한관

서울 교육대학교 거의 모든 조사팀들이 청소년들의 북한에 대한 생각과 북한 인지도를 알아보기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들의 조사내용 중에서 타당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선택하여 남한 청소년들의 북한관 및 북한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주변국에 대한 선호도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와 가장 싫어하는 나라를 보기(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 하나씩만 골라 써 주십시오’(이인용 조의 설문조사)라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6> 가장 좋아하는 나라

응답 나라	응답자 합계	전체응답(%)	초등생응답(%)	중학생응답(%)	고교생응답(%)
북한	20 / 131	15	10	38	10
미국	67 / 131	51	67	38	30
일본	24 / 131	18	13	13	36
중국	13 / 131	10	6	7	13
러시아	7 / 131	6	5	4	11

<표 4-7> 가장 싫어하는 나라

응답 나라	응답자 합계	전체응답(%)	초등생응답(%)	중학생응답(%)	고교생응답(%)
북한	38 / 131	29	26	18	41
미국	4 / 131	3	0	2	10
일본	38 / 131	29	31	30	25
중국	17 / 131	13	18	6	11
러시아	34 / 131	26	26	44	13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미국으로 나타났고 북한에 대한 선호도는 전체 15.3%, 초등 10.3%, 중등 38.2%, 고등 10.2%로 나타났다.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는 일본과 북한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혐오도는 전체 29%로, 초등 25.8%, 중등 17.6%, 고등 41%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청소년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적대적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제까지의 한국교육이 반공에 기초한 교육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5.3%의 청소년들이 북한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선호한 것은 민족애의 발로로 해석된다.

(2) 북한관

‘북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이인용 조) 라는 물음에서 함께 살 민족 공동체라는 답변이 전체의 56.7%, 초등생 56.9%, 중학생 79.4%, 고교생 35.9%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의 27.4%, 초등생의 32.7%, 중학생의 17.6%, 고교생의 28.2%가 62.5전쟁을 유발한 민족 반역집단으로 답함으로써 응답의 양극화 현상을 보여 주었다.

<표 4-8> 북한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

응답자 응답내용	응답자 합계 (131명)	응답자 합계 (%)	초등생58명 (%)	중학생34명 (%)	고교생39명 (%)
6.25를 일으킨 반역 집단	36	27.4	19 32.7	6 17.6	11 28.2
우리의 경쟁상대	5	3.8	4 6.9	0 0	1 2.6
함께 살 민족공 동체	74	56.7	33 56.9	27 79.4	14 35.9
기타	16	12.2	4 6.9	1 2.9	11 28.2

(3) 대북한 경제지원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나 민간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비료, 식량

등 대북한 경제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강소정 조)라는 응답에서, ‘형편에 맞게 조금씩 지원해야 한다’에 39%가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망설이지 말고 도움이 되도록 더 지원해 주어야 한다’에 33%가 응답하여 전체 청소년들의 72%가 대북 경제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으로 족하다’가 15%로 나타난 반면에, ‘지원해 줄 필요 없다’에 9%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 24%의 응답자들은 대북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보여진다.

<표 4-9> 대북한 경제지원에 대한 의견

응답내용 \ 응답자	응답수 및 응답비율(%)
망설이지 말고 도움이 되도록 더 지원해 주어야 한다	33/98 33.7
형편에 맞게 조금씩 지원해 주어야 한다	39/98 39.8
현재의 지원으로 족하다	15/98 15.3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9/98 9.2
기타	2/98 2.0

(4) 대북한 식량(쌀) 지원

‘북한에 쌀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가’(이연숙 조)라는 설문 응답에서도, 지원해야 한다가 71%, 지원할 필요 없다가 27%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여 준다.

3) 민족의식

청소년들의 민족의식에 대한 생각을 직접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없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민족의식은 조사된 그들의 통일관, 북한관에서 그 편

린을 엮 볼 수 있었다. 김봉우조의 통일의지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71%가 어려워도 통일은 꼭 되어야 한다는 답변은 통일을 민족의 당위로 인식하는 민족의식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또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71%의 응답도 같은 민족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표현으로 평가된다. 57%의 청소년들이 북한을 ‘우리와 함께 살 민족공동체’로 답변한 것도 민족운명공동체라는 일차사회 의식의 발노로 생각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을 감싸며 사이좋게 지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김봉우 조의 수서, 장충, 남부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설문)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4-10> 북한동포 따뜻하게 대하여야 하는 이유

응답내용 \ 응답자	응답자수(응답률: %)
한민족이니까	112/200(56)
그것이 예의이니까	28/200(14)
평화롭게 사는 방법이니까	6/200(3)
오랫동안 헤어져 살았으니까	14/200(7)
마음의 통일을 이루려고	40/200(20)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건전한 민족의식은 통일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소수 청소년들은 민족의식의 부재 내지는 배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민족의식의 양극성을 보여주는 것은 통일문제 뿐만이 아니라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남북한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그에 앞서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통합되어 통일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민족의식은 분절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4) 남북한 청소년 교류관

(1)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견해

‘북한 청소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신숙희 조)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초·중·고생의 60.5%, 대학생의 43.3%가 같은 동포 형제자매들이라고 답하여 단일 민족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불쌍한 친구들’로 대학생들은 43.3%, 초·중·고교생은 25.6%로 나타났다.

<표 4-11>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견해

응답내용 \ 응답자	전 체 (응답: %)	초·중·고생 (응답: %)	대학생 (응답: %)
형제·자매·친구들	79/166(46.7)	27 /45(60.5)	52/121(43.3)
무서운 친구들	16/166(9.6)	10 /45(2.3)	6/121(5)
낯 선 외국 사람	2/166(1.2)	0 /45(0)	2/121(1.7)
불쌍한 친구들	64/166(38.6)	12 /45(25.6)	52/121(43.3)
관심없다.	15/166(9.0)	6 /45(11.6)	9/121(6.7)

반면에 ‘관심없다’, ‘낯 선 외국 사람’이라는 냉정한 응답도 10%정도 나타났다으며 ‘무서운 친구들이’이라는 적대감이 풍겨지는 응답도 거의 10%가 된다. 이는 갑자기 통일이 닥쳤을 경우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우려된다.

(2) 대학생들의 통일 및 남북교류 운동

‘일부 대학생들이 직접 북한 청소년들과 만나 통일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신은정 조)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의외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운동권 학생들의 통일 및 남북학생 교류 운동에 대하여 직접 당사자들인 대학생들은 49.6%만이 긍정적 응답을 하였고 50.4%가 부정적 응답을 하였다. 반면 초·중등 학생들은 79.1%가

긍정적 응답을 하였고 20.9%만이 부정적 응답을 하였다. 이 응답 결과로 본다면 대학생들의 통일 및 남북교류 운동은 초·중등 학생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막상 같은 대학생들에게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표 4-12> 대학생들의 통일 및 남북교류 운동

응답자 응답내용	전 체 (응답비율: %)	초·중·고 (응답비율: %)	대 학 (응답비율: %)
매우 긍정적	39 /166(23.4)	17 /45(37.2)	22 /121(18.5)
약간 긍정적	57 /166(34.3)	19 /45(41.9)	38 /121(31.1)
약간 부정적	55 /166(33.1)	4 /45(9.3)	51 /121(42.0)
매우 부정적	15 /166(9.1)	5 /45(11.6)	10 /121(8.4)

(3)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남북한 관계개선 및 통일에 미치는 영향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남북한 관계개선 및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신숙희 조)라는 청소년교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 에 전체 응답자의 66.9%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에, 6.6%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에, 26.5%가 별 영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즉 절대 다수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교류를 통일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표 4-13>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남북한 관계개선 및 통일에 미치는 영향

응답자 응답내용	전체 (응답률: %)	초·중등생 (응답률: %)	대학생 (응답률: %)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친다	33/166(19.9)	10/45(21.0)	23/121(18.6)
약간 좋은 영향을 미친다	78/166(47.0)	24/45(53.5)	54/121(44.5)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4/166(26.5)	9/45(20.9)	35/121(29.4)
약간 나쁜 영향을 미친다	9/166(5.4)	1/45(2.3)	8/121(6.7)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	2/166(1.2)	1/45(2.3)	1/121(0.8)

5)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에 나타난 청소년 통일의식의 평가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면, 첫째, 절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통일을 원하는 이유는 현실주의적 실익의 측면과 민족 당위론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둘째, 북한에 대한 생각은, 6.25 전쟁과 이데올로기적인 적대 관계에서 형성된 증오의 감정과 민족적 애정이 교차하는 상호 모순·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셋째,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3/4정도의 청소년들은 이데올로기보다 민족을 우선시하는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다. 넷째, 절대 다수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교류를 희망하고 그것이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 통일과정에서 크게 기여하리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소수의 청소년들은 경직된 냉전적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이기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고, 실제로 그들은 통일운동 및 남북관계 개선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통일이 구체화되고 더 나아가서 제도적 통일이 이루어 졌을 때 그들의 행동과 태도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V. 독일 통일의 특징 및 한민족에게 주는 시사점

1. 독일 통일과 한민족

1) 독일 통일을 보는 한민족의 입장

독일의 통일을 바라 보는 중국과 대만, 남한과 북한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아마도 중국인이나 대만인의 느낌은 한민족의 감회와는 사뭇 달랐을 것이다. 중국과 대만은 민족 구성원도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한민족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분단도 외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이념적 토대에 기초에 내분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대만은 양국가가 대등인 위치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군사력, 경제력 등의 많은 부분에서 엄청난 국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한쪽이 다른쪽을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분단상황이다.

그러나 한반도는 주관적, 개관적으로도 그들과의 상황과는 다르다. 한민족이 원해서 분단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민족성원들이 분단을 자초하는 행위를 한적도 없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및 극소수의 남과북의 지도층들이 분단을 자초했을 뿐이다. 누가 원한다고 해서 한쪽을 흡수할 수도 다른 한쪽이 흡수될 리도 없다. 더구나 분단이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양쪽이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지도 않다. 그러므로 한민족이 독일의 통일을 바라보는 심정과 감회는 남다를 것이다. 예컨대, 북한의 특권층은 공포와 두려움이 앞섰을 것이고, 남한의 권력층은 통일에 자신감이 생겼을 것이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한의 보통 사람들은 부러움, 희망, 자괴지심으로 착잡한 심정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이 독일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독일 통일 모형이 한반도 통일의 모형으로 적절한가? 한반도, 한민족 특성에 맞는

통일방안은 없는가? 통일비용은 얼마나 들고 어떻게 조달하며 과연 그것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또한 그것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통일비용을 들여가면서 통일을 서두를 가치가 있는가? 등 독일의 통일을 한반도 통일문제와 구체적으로 연관시켜 생각하게 되었다.

독일의 통일을 보는 입장은 다양하다. 분단이익을 누리고 있는 소수층과 분단의 고통과 손해를 겪고 있는 절대 다수층으로 대별될 수 있고 또 자신들은 통일에서 얻을 것도 없고 분단에서 잃은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통일 무관심층도 있다.²⁸⁾ 통일을 꺼리는 분단이익을 누리는 소수층은 독일이 통일에서 겪고 있는 진통²⁹⁾에서 나타난 부정적 측면, 즉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통일비용 투자로 인한 경제성장을 둔화, 재정적인 어려움, 심각한 실업난 등 경제적 진통외에도 동서독 사람들 사이에 생긴 '마음속의 장벽'과 극우파의 등장 및 난동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반도 통일의 준비 부족과 분위기 미성숙, 북한의 무력도발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통일열기를 식히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에서는 독일통일의 특수한 구조, 동력, 그리고 통일 이후에 드러난 제반 문제점 등을 객관적인 면밀한 분석 없이 각자의 정치적 입장이나 처지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평가하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독일통일이 우리들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와 교훈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다.

2) 독일통일이 주는 시사점

근본적으로 다른 두 체제하에 살던 독일민족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어떠한 문제에 부딪치면서 통일을 이루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관심사다. 독일통일은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교훈과 부정적인 교훈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인의 입장과 처지에서 독일통일을 분석해 본다면,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28) 이러한 구별은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29) 독일에서는 '통일진통'이라는 용어 대신 '체제변혁의 어려움'이라는 말을 쓴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통일 논의를 점검해 보는 작업에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독일과 한반도의 역사, 문화, 사회, 내부의 협력과 대결의 양태, 주변정세와 상황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독일의 분단은 한반도의 분단과 그 유형이 다르다. 독일과 같은 분단모형을 ‘국제형’이라 하고 중국과 같이 내전에 의한 분단 모형을 ‘내쟁형’이라고 하여 분단모형을 두 가지로 유형화 한다. 한반도와 같이 분단이 국제적 성격을 띠면서도 내분이 도화선으로 작용하여 분단된 경우를 ‘국제형’과 ‘내쟁형’의 ‘복합 분단형’으로 규정한다(정용석, 1992: 26). 즉 한반도와 독일의 분단은 그 유형부터 다르다. 다시 말하면 독일의 분단은 순수하게 내분 없이 국제적으로 이루어 졌으나, 한반도의 분단은 국제적으로 짜여진 분할 점령의 틀이 내분에 의하여 고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독일의 분단은 철저하게 미, 영, 불, 소의 의도에 따라 국제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독일 민족에게는 애초부터 내분적인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끼어 들 여지조차 없었다. 그러므로 통일이 되기까지의 짧은 40여년의 분단역사 속에서도 이데올로기의 내분으로 인한 동·서독간의 분쟁은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1961년 8월 13일 동·서 베를린 경계에 동독이 설치한 베를린 장벽은 동·서독뿐만이 아니라 전세계를 긴장시키게 했다. 그러나 이것은 동·서독간의 이데올로기의 내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소련과 동독 정부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동독인들의 서독으로의 탈출로를 봉쇄하기 위한 일방적으로 강행한 동베를린 봉쇄 조치였다.³⁰⁾

동·서독의 분단이 한반도의 분단과 다른 형태로 이루어 졌듯이 분단歷程에서도 동독과 서독은, 남한과 북한이 보여주었던 상대방을 자극하는 도발과 비방, 모함 등 야비한 작태는 연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독은 서로 상충·대립하는 체제 이데올로기를 고수하면서도 교류와 협력

30)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쌓아올린 가장 큰 이유는, 분단 후 1961년까지 서독으로 탈출한 동독인 수는 300만에 달하게 되었으며 유출인구의 대부분이 젊은 층이었기 때문에 동독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맞게 되었다.

의 기초를 깨뜨리지 않고 통일을 이룩한 날까지 지속할 수 있었다. 동·서독은 분단 다음 날인 1949년 10월 8일에 당장 ‘프랑크푸르트협정’을 체결하여 양독간의 상품교역을 뒷받침하도록 양독 중앙은행들을 지불청산기관으로 설정하였다(정용석, 1992: 123).

분단 기간 동안에 동·서독은 체제를 달리하는 독일민족이라는 기초를 바탕으로 하여, 동·서독의 문제를 독일 내부의 문제로 취급하였다. 그러면 서도 동·서독은 상호 국가주권을 인정하여 1973년 유엔에 동·서독이 개별 국가로서 동시 가입하였으며 교류와 협력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1972년 12월 21일 체결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상호관계에 의한 기본조약’ 제1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동등자격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정상적 선린관계를 발전시킨다.’ 제2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유엔헌장에 규정된 목적과 원칙, 특히 모든 국가의 주권평등, 독립, 자주성 및 영토보전의 존중, 자결권, 인권보호 및 무차별에 관한 목적과 원칙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엄연한 두 개의 독립국가임을 명백히 하고 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서독간의 문제를 내독문제로 취급하였다는 것은 정면적으로 상호 배치, 모순된다. 이렇게 상호 모순, 배치되는 요소를 독일인들은 독일내에서는 내부적 관계로 다루었고 국제적으로는 두 개의 개별 독립국가로 행세함으로써 양자의 모순관계를 극복하였다. 즉 대내적으로는 독일민족을 결집하여 정체성을 유지시키면서 국제적으로는 독일 통일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진 국가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다.

흔히 독일의 통일을 ‘탈출 혁명(Exit-Revolution)’에 의한 통일이라 한다(송두율, 1997: 25). 1989년 9월 헝가리가 서독에로의 이주를 원하는 동독 시민들을 위해 국경을 개방함에 따라 수천명이 오스트리아를 경유하여 서독으로 넘어 올 수 있었다. 헝가리의 이 같은 바르샤바조약의 파기는 동독 시민들의 저항운동을 고무시켜 대대적인 시위를 유발케 하였다. 이리하여 호네커를 사퇴시키고 1989년 11월 9일 드디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려 동독 시민들의 ‘탈출혁명’은 결실을 거두어 마침내 통일로 이어졌다.

그렇다고 ‘탈출혁명’ 그 자체가 통일은 아니었다. 이러한 사태의 급박한 진전은 모스크바와 서방국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고르바초프는 1989년 12월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에서 ‘독일 민주공화국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두 개의 독일 국가의 존재는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역설 하였다. 또한 미국 국무장관 베이커도 서방측의 의견을 대변하여 서독에 대하여 ‘독일 인접 국가들의 합당한 우려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경고성 충고를 발하였다. 그러나 서독은 외교적 절충을 통하여 동·서 양측 국가들의 통일반대 입장을 극복하고 1990년 10월 3일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독일통일의 성원을 마침내 이루어 냈다(이관우, 김희철: 57-63).

독일통일은 동독의 시민들이 대량 탈출이 동독의 붕괴원인이 되었고 동독의 붕괴는 곧바로 통일로 연결되었다. 그러면 동독의 붕괴 요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재독 학자 송두울은 독일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동독=북한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였다(송두울, 1997: 24-34). 그는 동독을 북한과 동격으로 취급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 ① 동독 시민의 급작스런 심리적 변화와 갈등
- ② 1980년대에 들어서서 동독의 정통성과 이데올로기의 급격한 영향력 상실
- ③ 반체제 사회운동의 고양과 역동성
- ④ 동독 사회와 국가의 정치조직에서의 결손
- ⑤ 경제의 비능률과 혼란
- ⑥ 동독 사회의 미분화(현대 산업구조의 조정의 실패)
- ⑦ 외적 요인으로서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동구의 변화와 개혁

위의 요인들을 북한에 대입해 보면, 외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은 대입에 무리가 없으나, 내부적인 심리적 요인에서는, 북한과 동독은 전혀 공통성

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동독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변화 사태가 북한에서 재연 되리라는 기대와 희망은 전혀 할 수 없다. 외부적으로는 공산권의 몰락, 내부적으로는 신으로 받아들여졌던 김일성 주석의 사망, 극한 상황에 달한 식량부족, 경제의 침몰 등 제반 사정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체제에 대한 충성심은 별로 달라지지 않고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로, 북한 사회의 폐쇄성을 든다.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된 완벽한 통제상태하에서 이른바 주체사상으로 세뇌되고 철저하게 사회주의 혁명사상과 체제 교화교육을 받은 북한주민들에게 그들의 체제와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북한당국으로서는 그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을 외부와 단절시켜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붕괴 이전의 동독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동독정부는 동독시민들을 외부와 단절시킬 수 없었다. 동독정부가 동독시민을 외부와 차단시킬 수 없었던 요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가장 큰 요인은 동·서독관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독은 대동독 문제를 독일 내부분제로 취급하여 정치적 전략, 체제적 계산, 경제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독일민족의 입장에서 일방적이다시피 배풀면서 교류와 협력을 계속하였다. 교류와 협력과정에서 동독 시민들은 사실 그대로의 서독을 알게 되었고 서독의 동독에 대한 꾸밈없는 진실한 태도도 이해하게 되었으며 또한 서독체제의 우월성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독 체제를 동경하여 목숨을 건 탈출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이른바 ‘탈출혁명’에 의한 통일을 이루었다.

이러한 동·서독 관계의 맥락에서 볼 때, 북한 당국의 폐쇄정책으로 인한 주민들이 외부와 단절되게 된 책임의 일단은 남한 정부, 남한 주민 즉 우리들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남한 정부의 대북 제의들은, 서독의 동독에 대한 그것들과 같이 순수하였으며 정치 전략이나 정권적 계산없이 한 반도의 평화와 국민들의 민족통일의 염원이 그대로 반영된 것들이었는가? 입장을 바꾸어 우리 남한주민이 북한주민이라고 할 때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에 어느정도 신뢰감을 가질 수 있었는가? 남한의 교류, 협력제의를 포

함한 모든 대북제외들이 가감없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었다고 가정할 때, 북한주민들은 동독 시민들과 같이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남한을 동경하였을까? 이러한 물음들에 ‘그렇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다수일까? 하는 점을 남한정부, 남한 주민 즉 우리 모두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서독의 정치교육과 동·서독 청소년 교류

1) 독일의 정치교육

독일의 정치교육은 서독사회의 발전을 촉진시켰고 통일의 내적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통일 후에도 동서독 주민간의 심리적 갈등과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허물고 동독지역 주민들을 새로운 사회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정치교육을 주관하는 연방정치교육본부의 모델은 1918-1933 향토봉사를 위한 제국본부였다. 1952년 향토봉사를 위한 연방본부가 탄생되었고 1963년 향토봉사를 위한 연방본부는 연방교육본부로 개칭되었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내무성장관의 산하에 있지만 문부성과 업무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1966년 연방정치교육법이 제정 실시되어 서독의 정치교육 운영은 본(bonn)에 위치한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이 기구의 특별 목표는 인종주의 특히 유대인 배척주의와 투쟁이었으며 다음 목표는 공산주의와의 투쟁이었다(신세호 외, 1993: 33-36).

정치교육은 정치 참여와 의식 구조를 통합하기 위한 범 시민교육이다. 동·서독 관계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정치에 대한 이해와 참여 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서독은 내부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정치 교육(politische bildung)의 틀 속에서 학생과 성인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방정치교육본부와 각 주 정치교육본부의 총괄 아래 실시된 정치교육의 내용은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 동부독일(동독) 문제 등을 포괄하는 범교과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정치교육의 과정에서 동독

및 동구 지역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와 자료보급 체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서독 국민들로 하여금 동독과 동구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였다.

통일 후에도 서독의 정치교육은 동독 지역에 확대 실시되고 있는 바, 동독의 학생과 주민들이 장기간 분단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상의 혼란을 감안하여 실시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신세호 외, 1993: 2).

정치교육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목표를 가지고(신세호 외, 1993: 34-35)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아래의 영역에 특별한 비중을 두어 정치교육 업무를 추진하였다(신세호, 1993: 34-35).

□ 정치교육의 임무 및 목표

1. 정치교육을 통해 독일민족의 정치적 사실에 대한 이해를 장려하고
2. 민주적 의식을 견고히 하며
3. 정치적 일을 함께하는 자발성의 강화를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해 노력한다.

4. 현실적 계도에 도움이 되는 정치과정의 요소와 기능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를 주도록 힘쓰며
5. 정치적 문제의식, 정치적 판단력을 자발적으로 갖도록 교육시키는 데 주력하고,
6. 전체사회의 범위 속에서 자신의 위치의 인식을 촉진시키고
7. 자유민주주의, 법치 및 사회국가적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긍정하도록 이끌며, 시민이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 하도록 노력하고,
8. 정치행동에 대한 자발성과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며
9. 민주주의 규율의 의미를 인식시키고 민주적 방법에 익숙하도록 힘쓴다.

□ 정치교육의 영역

1. 민주주의 국가질서 및 사회적 발전과 변화에 대한 이해의 촉진
2. 의회 법치국가적 민주주의의 묘사와 서술, 특히 정치, 경제, 문화적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의 기능과 가능성의
서술과 설명

3. 자유·법치주의의 적대자들 (특히 극우파와 극좌파의 출현)의 목
적과 활동에 대한 정신적·정치적 논쟁
4. 선입견과 배타적 태도의 극복(특히 소수민족, 그리고 종족에 대한)
및 상호관용에 대한 인식
5. 독일역사에 대한 선입관이 없고 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교육,
특히 독일연방공화국과 나치스 시대 및 바이마를 공화국의 발전에
대한 지식 전달
6. 국제정치관계 및 다른 국가와 민족의 생활양식과 정치관심에 대한
지식 전달
7. 유럽의 통합, 국제협력 및 정치적·경제적, 군사적 평화안정의 필
요성과 문제성들에 대한 이해의 촉진
8. 국가와 사회 또한 제 3세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미래를 향한
준비(특히 경제적·기술적·사회적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의 환기
와 강화를 통해서)

정치교육은 인간에게 어떤 독트린을 주입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교육을
통해 계도를 위한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정치교육을 통해 시민에
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 요체는 구체적으
로 정치문제의 이해, 정치의식 함양 그리고 정치참여능력의 고양으로 압
축될 수 있다.

정치교육의 목적은 정치교육의 내용에서 그 특징을 잘 보여준다. 특징
중의 첫째는 독일 '기본법에 대한 이해'와 해석 문제를 주 임무중의 하나
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의 이해와 해석은 법률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기본적 소양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의 기본적인 정치체도와 국민의 권리, 국가관이 헌법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교육의 구체적 실시가 연방정치교육본부와 함께 각주에 설치
된 주정치교육본부 그리고 학교 기타 성인교육 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서로 역할 분담을 적절히 하면서 유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정치교육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즉 ‘쟁점중심의 정치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그러한 쟁점을 다루지 않고 교과서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진정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견지에서라고 보여진다. 다루는 쟁점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쟁점 뿐만 아니라 교육과 환경 문제에 걸쳐 광범위한 영역에 관련되어 있다. 교육정책에 관한 학습내용으로 제시된 것을 보면, 입학정원제, 가장 적합한 학교교육의 형태에 관한 논의, 직업교육제도의 개혁 등의 독일 교육 부문에서 쟁점화 되고 있는 문제를 포함시키고 있다.

넷째, 정치교육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집단의 특성에 따라 그 형식과 내용을 적절히 조직하고 있다. 즉 교육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하고 있다.

다섯째, 정치교육의 교과목을 보면 정치교육의 범위가 넓음을 알 수 있다. 거의 모든 사회과학 분야가 망라되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정치교육의 목적에 부합되는 주제를 골라내고 있다.

중요한 부분으로서 법에 대한 교육, 연방과 주에 대한 관계 등 통치구조 문제, 동독지역에 대한 이해의 증진, 노동, 사회에 대한 인식 함양,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와 적응능력, 유럽 국가로서의 독일의 특성과 유럽 공동체에 대한 교육, 소련에 대한 교육, 동부 유럽에 대한 교육, 국제정치와 독일 분단 문제 등에 걸쳐 있다. 이는 필요한 교과와 지식이 하나로 수렴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서로 분리되어 실시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치교육 교과영역들을 살펴보면 더욱 그 광범위한 내용이 정치에 관한 지식과 참여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수렴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거의 모든 사회과학들이 망라되어 정치교육의 목적에 부합한 주제를 골라 구성되고 있다. 학습영역을 보면, 정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와 결사, 일반사회, 경제, 법, 서유럽, 동방문제, 현대사 등으로 짜여져 있다.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러한 전분야에 걸친 학습내용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법률적 문제’라는 것이다. 예컨대 정치영역에서도 자유, 법치 민주국가라는 내용이 있고, 동방문제 영역에서는 동독의 헌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법교육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연방과 주의 관계를 비롯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운영과 통치에 관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는 관리 경영적 차원에서의 기술적 합리성을 지향하는 행정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구조가 어떠한지 권한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중요시 함을 나타내 준다.

셋째, 정치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테면 민주시민교육, 통일교육, 국민정신교육, 경제교육, 환경교육 등 다양한 교육들의 ‘정치교육으로의 수렴’ 현상을 볼 수 있다.

넷째, 동독의 법질서 등 동독과 동유럽에 대한 기초지식을 함양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다룰 줄 알게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럽공동체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 국제정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과 판단능력을 학생들에게 함양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행동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제정치가 전문가나 다룰 사항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알아야 할 문제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기본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양독의 교과서들은 서로 상대방의 사회 질서에 대하여 여러가지 비판을 가하고 있었다. 즉 양독 교과서는 서로 상대방의 체제가 비사회적이고 비인도적이며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착취당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었다. 또한 독일 분단의 책임이 서로 상대방 정권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정권은 자기들의 통일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력적인 정복만을 통해서 전독일을 통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독 교과서의 내용은 1972년 이래 많이 수정되거나 교정되었다. 서독 학교의 정치교육은 연방정치교육본부(BPB)에서 총괄하고 있으나 정치교육에 필요한 교과

서의 선택과 같은 세부사항은 주마다 다르다. 서독에서 청소년들에게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은 정치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정치적인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또 그들의 의무와 권리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 훌륭한 시민으로 교육시키려는 데 있다. 이것은 물론 장래 그 청소년들 스스로의 정치행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에서는 정치기구와 정치과정에 관한 지식과 헌법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인 가치에 관한 긍정적 국가관, 그리고 사회문제와 갈등의식에 관한 지식들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전 서독의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 정치교육을 구서독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교육부에서 발행한 '정치교육지침서'인 '정치교육의 방향(Richtlinien für Politikunterricht (1987. 8)'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정치교육의 방향에 의하면, 정치교육은 민주국가에서의 자유에 대한 이해와 자유의 범위 그리고 개인에 속한 사회에서 자유와 자치를 보장해주는 관념과 제도들이 헌법이라는 범주 내에서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왔는가를 알려주며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정치교육이라는 말은 정치 실체에 대한 경험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 사회가 목표하는 바를 촉진시키거나 가능하게 하는 의식, 행동방식, 태도 등을 의도적으로 전수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의식, 행동방식, 태도 등을 전수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정치교육은 학생들이 점점 더 복잡하고 개관하기 어려워지는 세계를 좀 더 잘 이해하고 맹목적으로 여건에 적응하기 보다는 실제에 대한 지식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 및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갖게하는 하나의 학습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 바탕 위에 학교정치교육의 목표로 다음과 같은 능력의 배양을 들고 있다 (신세호, 1993: 69-72).

- 가.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한 실제적 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
- 나. 사회에 대한 인지 능력을 배양하는 것
- 다. 근거를 가지고 판단 하는 것
- 라. 행동에 따른 결과 및 부차적인 결과를 평가하는 것
- 마. 책임성 있는 결정과 행동을 하는 것

정치교육은 젊은 학생들의 결정 능력을 함양시키고 참여자세를 함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업의 주제는 구체적, 현실적, 실제적이어야 하며 학생들의 경험과 흥미에 맞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앞으로 학생들이 겪게될 생활 환경을 전제로 하여 설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치교육과 생활상황의 연계’를 강조한다. 또한 정치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실제적 지식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고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교육과 인접 학문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등의 학문구별은 학문상의 구별이며 사회 현실 문제가 이러한 구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견지에서 정치교육은 정치학 교육이나 경제학 교육과는 구별되고 이러한 교육의 총합도 아니다라고 본다. 정치교육은 사회, 정치, 경제적 생활을 밀접히 연결시키면서 이들간의 상호작용을 분석·이해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경제와 관련된 어떤 주제가 다루어질 때 그 주제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관련성도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경우, 중등과정 1에서는 정치교육이 사회이론이라는 학습 영역의 한 부분이다. 정치교육은 이 학습영역 내에서 역사수업, 지학수업과 더불어 학교 내에서 정치적 교육에 본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정치교육은 사회구조를 다루고 정치생활에의 참여 능력을 갖게하는 것을 통하여, 역사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지속성과 변화 가능성을 다루고 경험 세계가 역사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다룸으로써, 지리교육은 정치적 행동의 결정, 책임 영역인 공간을 다룸으로써 이 세가지 수업은 모두가 사회적 현실에 대한 상이한 파악을 가능하게 하며 행동에 관련

된 인식에 그 나름의 방식으로 협력한다. 이러한 세가지 영역은 그 어느 것과 다른 영역을 대신할 수 없다. 아무튼 근본적으로 이 세 영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존재하며 이때 각각의 영역은 고유의 문제 설정과 연구 방식, 인식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세 영역은 서로 협력관계에 있다고 한다.

정치교육은 그것이 헌법과 갖는 관계, 인접 학문과의 관계, 법질서와의 관계 그리고 현실적인 정치 상황과 갖는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를 갖느냐 하는 것을 파악해 봄으로써 그 위상을 규정할 수 있다. ‘정치교육의 방향’에 의하면 ‘정치교육의 위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교육의 합법성이다. 정치교육은 헌법의 기본원칙과 헌법이 정하고 있는 태두리를 존중해야 한다. 정치교육은 그러한 헌법의 태두리 속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정치 과정의 참여 준비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배양해주는 것이며, 헌법적 원칙 아래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미성년으로부터의 해방’을 도와 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는 수많은 사회화 기관 중의 하나임을 교사들은 감안해야 한다.

둘째, 정치교육과 인접학문의 관계이다. 정치교육은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등의 축소판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즉 이 같은 학문분야의 구분은 실제 현실과 다르며 따라서 정치교육은 실제 생활과 관련시키면서 진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교 정치교육은 정치·역사·지학 교육의 협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한편으로는 학교의 종류와 학년에 따라서 내용과 형식이 조절되어야 한다. 직업교육만을 하는 학교와 직업교육, 일반교육(allgemeinebildung)을 병행하여 하는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의 내용과 형식은 달라지며 김나지움 상급반과 같은 교과에서 정치교육을 하게 되는 등 조절이 필요하다.

셋째, 정치교육과 법질서의 관계는 이중적인 관계이다. 하나는 정치교육은 현존하는 헌법 및 법질서와 밀접한 관련성 아래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과 동시에 헌법과 법질서에 대한 이해 자체가 정치교육의 주요 내용을 구성한다는 점이다. 정치교육이 목표로 삼는 정치 참여 능력, 정치

행동은 법질서의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치교육의 내용으로서 법질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민주적 사회적 법치국가, 연방의 통치구조 등이다. 정치교육은 이같은 법률학적 규범과 함께 사회적 규범도 중요하게 다룬다.

넷째, 정치 현실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정치를 단순한 관점에서 보는 것을 지양하게 하고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즉 정치를 단순한 권력 추구를 위한 투쟁으로 보거나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라는 일반적 이해를 초월하여 정치에 대한 인식이란, 정치가 일어나는 인식이나 틀, 정치적 행동의 내용, 대상, 목표, 그 목표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과정 즉 갈등과 대결, 그리고 정치제도와 정치단체에 대한 이해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독일 정치교육에서 분단 민족으로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서독의 정치교육은 첫째, 동독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기본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교육이라는 점이다. 둘째, 서독시민들에게 어떤 독트린을 주입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정치교육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셋째, 독일역사에 대한 바른 비판적 인식을 통해 동·서독의 분단과 분단현실을 객관화 했다는 점이다. 넷째, 동·서독간 기본조약(1972년 12월 21일 체결)에 따라, 동독의 존재를 국내법적으로 인정하여 일민족 이국가라는 특수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상호간 독립과 자주성을 존중하고 양독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독일 민족교육이라는 점이다. 다섯째, 정권적 정파적 차원을 초월한 서독 국가적 시민적 차원에서 실시된 일관성 있는 교육이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독일의 정치교육은 한반도에서 실시되어 왔던 통일교육과는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여 준다.

2) 동·서독 청소년 교류

1949년부터 1989년 사이에 동서독 국경과 베를린 장벽을 넘어 동독을 탈출하려다 사살된 사람들은 모두 119명에 달했다(주독대사관, 숫자로 본

독일통일). 그러나 이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동·서독간 인적 교류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1953년부터 1988년까지 동독인들이 서독을 여행한 건수는 매년 평균 1,000여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1953년에는 1,516명, 이듬해에는 2,227명의 동독인이 서독을 방문했으며 1960년대초에 27명, 50명 정도로 격감했다가 1965년부터는 다시 1,000여명 정도의 수준을 회복하여 1988년에는 6,750명에 이르렀다. 한편 서독인들의 동독 여행은 이보다 더 많아 1967년에는 1,424명의 서독인들이 동독을 방문했고, 1972년부터는 6,000명 수준을 돌파하였고 그 후부터는 5,000명 내지 6,000명의 인원이 매년 동독을 여행하였다.

<표 5-1> 동독인 및 서독인의 상호방문, 여행

연도	동독인의 서독여행	서독인의 동독여행
1967	1,072	1,424
1970	1,048	2,654
1975	1,370	7,734
1980	1,594	6,746
1988	6,750	6,671

※ 자 료: 주독대사관, 숫자로 본 독일통일, 1992.

1984년까지 연로한 정년퇴임자를 제외한 동독인의 서독 방문인 숫자는 매년 1만명에서 2만명 수준이었으나, 1985년 이후에는 이 숫자가 무려 200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988년에는 정년퇴임 여행자 수를 합치면 동독인의 1/3정도가 매년 한 번씩 서독으로 여행한 셈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독간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교류도 활발

하게 전개되었다. 분단 후 1960년대까지는 동독의 ‘자유독일 청소년단(FDJ)’이 동서독 청소년 단체간의 대화와 접촉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단체간의 교류와 대화를 추진하였으나 FDJ의 정치성에 대한 서독의 청소년 단체들의 반발로 대화와 교류가 크게 활성화 되지는 못했다.

1970년대에 들어와 72년의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73년의 동서독 유엔 동시가입으로 양독관계가 정상화 되어 청소년 단체간 교류와 대화의 확대 계기가 마련되었다. 73년 8월 동베를린에서 열렸던 ‘제10회 세계청소년학생축전’에서 서독의 ‘독일연방청소년연맹(DBJR)’과 FDJ가 접촉하였고 78년에는 이들 두 단체간의 다각적 교류에 합의하였다(박성희, 1992: 12-17)

DBJR과 FDJ는 1982년 9월 20일 동·서독 청소년들에게 상호 이해 축진을 도모하고 독일 문화의 뿌리를 확인시키기 위해 청소년 교류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미 1972년 기본조약 체결 전부터 서독의 사민당 청년 단체나 기독교 또는 카톨릭 청년회 등의 주관 아래 서독 청소년들이 동독을 방문하였었다. 이러한 청소년 교류계획은 1974년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하여 1982년에는 35개 그룹에서 약 1,220명의 동독 청소년이 서독을 방문하였고, 서독 청소년 22,000명이 동독을 방문하였다. 1984년에는 모두 1,272개 그룹에서 약 36,000명의 서독 청소년들이 동독을 방문하였고, 1985년에는 더욱 증가되어 68,000명의 서독 청소년들이 동독 땅을 밟았으며, 동독 측에서는 344개 그룹에서 약 1,000명이 서독을 방문하였다. 그들 가운데 약 80%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

1986년 5월 동서독 정부간에 체결된 문화협정에 ‘청소년교류촉진조항’이 생겼고, 또 1987년 9월 호네커가 서독을 방문했을 때 공동성명에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이 거듭 강조되면서 1987년 한해 동안 서독 청소년 77,000명, 동독 청소년 3,760명, 1988년에는 서독청소년 78,000명, 동독 청소년 5,000명이 상호 교환 방문하였다. 서독 청소년들의 동독 여행은 연방 정부나 주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데, 서독 연방정부는 기차여행일 경우 기차 요금의 전액을, 버스여행일 경우 전세요금의 80%까지를 지원하였고, 이밖에 체제비 보조로 1인당 하루 5DM씩을 지급하였다. 또 서독

연방정부는 동독의 자유독일청소년단의 회원들이 서독을 방문할 때도 1인당 하루 20DM씩 여비 보조를 해 주었다.

이러한 여행을 한 청소년들은 방문한 곳에서 박물관과 전시관을 구경하고 가게에서 물건을 사거나 거리를 산보하고, 또 그 곳 사람들과 일상 생활에 관하여, 독일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눔으로써 이제까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선입견을 바꾸고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노력하였다. 이 때 이데올로기나 서로의 체제비교와 같은 서로에게 자극을 줄 만한 얘기들을 서로 자제하였다고 한다. 이 밖에 동독 유적지에서의 수학여행, 국경부근 학교들끼리의 자매결연에 의한 각종 교류를 통해서 공동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할 기회를 많이 가졌다(박성희, 1992: 8-9).

<표 5-2> 동·서독 청소년들의 상호 교환 방문, 여행

(단위: 명)

연도	동독청소년의 서독 여행 방문자 수	서독청소년의 동독 여행 방문자 수
1981	-	10,000
1982	300	15,000
1983	12,000	22,000
1984	300	36,000
1985	1,000	50,000
1986	3,000	50,000
1987	3,760	77,000
1988	5,000	78,000

※ 자 료 : DBJR 서류(박성희, 「남북한 청소년교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청소년연구원, 1992: 20 재인용)

* 일일 여행은 제외

그러나 동서독 청소년 교류에 있어서 여행자의 연령 구조는 서독의 경우가 대부분 초·중고등 학생들이었는데 비하여 동독은 20대 중반의 연령이 많았으며 따라서 동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서독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서독 학생들에 비해서 적게 주어졌으며, 동독에서는 국립 청소년 단체 내지 국가의 통제를 받던 청소년 조직이 교류에 관한 조직을 담당하여 서독에로의 여행은 체제에 대한 맹종에 일종의 보상으로 체제 순응을 위한 교육적 기능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동독 측은 청소년 교류의 확대를 긴장 완화 정책의 진전 상태에 연계시키려 했던 반면, 서독 측은 인간간의 접촉 확대가 정치적 관계의 진전에 역동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동독은 청소년 교류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을 위한 조건으로 보았으며 서독은 양독간 접근을 위한 대 전제임은 물론 민족 공통의식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보았다. 동독 시민들이 자본주의 서독의 현실 체험을 통해 혐오감을 얻게 될 것을 기대했던 동독의 희망은 오히려 동독이라는 국가의 정통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신세호 외5인, 앞의 책: 126-196).

이상과 같이 동서독 청소년 대화와 교류의 특징은, 민간 청소년 단체 주도로 이루어 저정치적 색깔이 없었다. 서독 청소년의 동독 방문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의 일방적 교류가 되었으며 교류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방문 동기 연령이 동서독간에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서독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초,중,고등 학생들로서 자신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참가한 데 반하여 동독의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20대 중반 청장년들로서 정치적으로 선발된 참가자들이었다.

3. 독일통일이 한민족에게 주는 교훈

독일의 통일, 정치교육, 청소년 교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분단 국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서 보자면 동서

독이 체결한 기본조약(1972. 12. 21)보다 남북한 사이에 이루어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 2. 19발효)는 거의 20년 뒤에 이루어진 것이다. 더구나 동·서독은 기본조약을 실제로 효력있는 것으로 운영했으나 남북합의서는 거의 사문화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는 ‘법’으로서의 기능을 한 반면, 합의서는 일방이 쉽게 사문화 할 정도로 취약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둘째, 민주화 민주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서독에서 민주화가 정착되고 당내(CDU) 평화적 정권 교체가 아니고 당 대 당 즉 여당에서 야당, 집권당에서 반대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 사민당(SPD)의 빌리 브란트가 서독 수상이 된 1969년의 일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최초로 선거에 의한 여야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1998년으로 독일보다 근 30여년 정도가 늦었다. 여야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민주주의와 정치문화 발전의 척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겠으나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을 반영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어쨌든 서독이 한국에 비해서 민주주의적 정치문화가 앞서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더욱 북한과 동독의 민주정치 발전의 차이에서는 한국과 서독의 편차보다도 훨씬 더 큰 편차를 보인다.

셋째, 서독의 대동독 정책은 긴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독일민족적 차원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왔으나 우리의 경우는 정부업적적 차원에서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면서 참을성 없이 조급하게 추진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북한사정의 변화 또는 돌출적 행동이나 국제정세의 변화에 신경질에 가까운 민감한 반응을 보여 정책을 수시로 변경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지 못했다.³¹⁾

넷째, 서독은 동독과 동독의 체제 이데올로기를 이해하고 그의 긍정적 측면을 ‘기본법’과 ‘자유민주주의’의 테두리내로 끌어들여 포용하려는 大我

31) 1994년 북한 주석 사망시 조문 파동으로 인한 정책의 선회, 1995년 대북 식량계획을 발표하고서도 일부 여론의 악화에 따른 철회, 1996 북한잠수함의 동해 침투에 반응한 대북 강경 정책으로의 선회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선회들이 있다.

的 정책으로 임했으나, 우리는 북한과 북한의 체제 이데올로기를 자유민주주의의 적으로 돌려 우리의 체제 밖으로 떠밀어 내는 小我的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섯째, 동서독의 상호 교류와 협력 차원에서 보면, 동서독은 분단후 통일시까지 단절없는 교류와 협력이 계속되어 왔으나, 한반도에서의 남북관계는 6·25 동족전쟁, 자유당 독재, 뒤이은 군사독재 정권의 출현 등으로 20년 이상이나 완전히 차단되었었다. 그러던 것이 국제적 해빙무드와 더불어 70년대에 와서야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재개된 남북대화가 정권안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³²⁾ 남북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시키지는 못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서독 ‘기본조약’은 ‘남북한 기본 합의서’보다 20년 전에 체결되어 기본조약은 양독이 성실하게 준수하였지만 남북한 기본합의서는 남북 양측이 합의서만 교환하였을 뿐 준수되지도 않았고 양측 모두 준수할 의지마저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최근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관계는 기본합의서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원칙론을 천명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제상황을 놓고 볼 때 남북한 간의 교류는 동서독간의 교류보다 30-40년 정도 지체된 것으로 평가된다.

여섯째, 주민 왕래와 통신교환은 동·서독에서는 분단시점에서부터 막힌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산가족의 아픔이 발생할 소지가 없었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우 분단으로 말미암아 1000만 이산가족을 양산하였고 왕래는 커녕 서신 교환도 막혀 있어 극 소수의 이산가족을 제외한 모든 이산가족들은 부모 형제들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이 50여년 동안이나 가슴에 분단 고통의 한을 품고 살아오고 있다. 이들의 고통과 한을 안겨준 남북 양측 책임자들은 동서독의 책임자들의 교류와 협력 정책을 본 받아 이들의 한과 아픔을 달래줄 책임과 의무를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서독의 경우는 연방제 국가로 출발했다, 따라서 국가 정책의 결

32) 7·4 남북공동 성명 이후 곧바로 10월 유신 독재체제로 이어 졌으며 5공화국의 일련의 전향적 대북 제의들은 국시파동 이후 그 진의를 국민들은 의심하게 되었다.

정 매카니즘은 중앙집권적 국가였던 동독과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연방제 국가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분권체제는 통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역할 분담을 원활히 함으로써 통일의 순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경우 남북 양체제가 중앙집권적인 유리한 체제임에도 그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으며,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남북교류에 대한 역할 분담은 한국적 정치문화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여덟째, 독일의 정치교육은 서독체제의 절대적 우월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국가 사회주의와 인종주의의 타파,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 사회국가적 민주주의의 정착에 공헌함으로써 동서독 정통성 경쟁에서 서독은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독일의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 안보교육으로 지칭되는 정치교육은 독일의 경우처럼 체제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권 또는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보존하는 역할을 강조 하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황병덕, 1995: 11-12). 독일의 정치교육과 우리 한국의 그것과는 내용상 큰 차이를 나타냈다. 그 내용상의 차이는 독일의 정치교육에서는 동독의 체제 이데올로기인 사회주의(공사주의)를 자유민주주의에 포괄하는 내용이고 우리의 경우는 북한 체제 이데올로기의 기초가 되는 사회주의(공사주의)와 주체사상을 자유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적대사상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차이는 자유 민주주의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느냐 축소 해석하느냐의 차이이다. 즉 오늘날 헌법상의 보편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어떠한 범위까지로 한정하느냐의 문제이다. 현재 사상과 양심, 신조의 자유에 대한 해석은 그 국가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정도, 정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분단으로 이데올리기적 갈등을 겪고 있는 두 국가 체제의 통일이 민족적 역사적 대과제로 주어진 우리들로서는 체제 이데올기 극복을 위해서 이에 대한 해석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동서독 정부가 교류와 협력에 임한 태도와 자세를 보면, 그들

특히 서독정부는 조용한 가운데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실속있는 결실을 거두어 통일을 이루었다. 반면에 남·북한 정부는 공개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남북한 정부의 교류와 협력은 크게 진전되지도 못했으며 현재까지 쌓아 놓은 실적도 별로 신통치 않다. 그렇다고 앞으로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 되리라는 전망도 밝지만은 않은 것 같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논의의 요약)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민족적 시각에서 통일은 민족적 당위라는 명제로부터 출발했다. 최소한 한민족이 세계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다.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분단이 지속된다면 한민족은 살아남기 어렵다. 이는 현재 남북한이 처해있는 경제위기로도 증명된다. 한민족이 현재 처해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하려면 민족역량을 키워야 한다. 분단으로 인하여 소모되는 민족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잠자고 있는 민족의 저력을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통일이 꼭 달성되어야 한다. 통일을 이룩하여 민족의 저력이 제대로 발휘되면,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은 물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 한반도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존에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II장에서는 통일의 의미와 원칙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검토 분석했다.

통일이란 단순히 두 국가 두 체제가 하나로 통합되는 제도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되는 내면적 민족감정의 통합을 뜻한다. 이러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화적, 자주적, 민주적, 민족의 대동단결의 통일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남한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북한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통일방안들은 민족적 시각에서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하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남북한 양측은 7·4 남북공동 성명에서 평화, 자주, 민족 대단결의 통일원칙을 합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제 통일방안은 적화통일을,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전제

하고 있다. 또한 그들 통일방안은 통일명분 쌓기와 상대방 통일방안에 대한 대응 또는 견제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비쳐 지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외견상으로는 일관된 통일방안으로 보이나 그 내용은 남한의 대응이나 남북 국력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어 왔다.

III장에서는 통일교육의 의의 및 남북한의 통일교육을 검토 분석했다.

통일교육은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 통일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진정한 민족통합을 이룩하는 교육 모두를 포함하는 교육이다. 그러나 남한이나 북한의 통일교육 모두가 자기들 체제수호 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자기들 정부가 주장하는 통일방안을 절대화하여 그것을 각기 자기들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수준에서 통일교육이 행해져 왔다. 그러므로 양측의 통일교육은 통일을 위한 교육이 되지 못하고 한민족의 동질성을 파괴하고 상대체제 상대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감 내지는 적대감을 조장하여 반통일적 역기능을 하여 왔다.

IV장에서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실상과 문제점을 문헌 중심으로 검토하고 남한 청소년들의 통일관, 북한관, 민족의식 등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알아 보았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는 현재 논의 단계에 머물고 구체적 실천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여진다. 남북 청소년 축구 단일팀 구성, 리틀 엔젤스 북한 공연이 공식적인 남북 청소년 교류의 전부이다. 남한 대학생들은 정부의 통일정책과 계속적인 마찰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학생운동의 차원에서 통일과 교류를 끊임없이 강렬하게 제기하여 왔다. 학생들이 주장해온 통일과 교류요구는 급진적이며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이상주의적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들의 통일주장 중에는 북한의 통일정책, 통일방안과 유사한 점도 많이 발견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들의 주장을 利敵的 주장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주장과 활동을 다스리고 제한해 오고있다.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관, 북한관, 민족의식에 대한 설문 또는 면접조사

에서, 70%를 조금 웃도는 청소년들과 30%를 약간 밑도는 청소년들간의 의식의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 주고 있다. 70% 이상의 절대 대다수 청소년들이 통일을 원하고 30% 이하의 청소년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이유들(통일을 원하건 통일을 원하지 않건)은 현실적 이해관계로 집약되는 공통성을 보여 준다. 즉 청소년들 거의 모두가 이기적 통일관에 집착되어 있다.

청소년들의 북한관 민족의식의 분석 결과는 3/4에 달하는 절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북한주민에 대하여 같은 민족으로서의 애정을 가지고 같이 살아야 할 동포로서 인식하고 있다. 나머지 1/4의 청소년들만이 북한주민에 대하여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V장은 독일통일이 한반도, 한민족에게 주는 교훈과 시사점을 찾으려는 목적에 따라 분석이 이루어 졌다. 독일과 한반도는 제2차 세계 대전 종전후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동·서냉전의 산물로 강대국들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국토와 민족의 분단이라는 공통성을 가졌으나 분단 이후의 상황과 내부적 분단 관리에 있어서는 거의 공통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즉 남한=서독, 북한=동독이라는 등식은 성립될 수 없다.

독일의 분단은 전적으로 전승국의 분할정책에 의한 국제형이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분단은 국제적 분할점령에 바탕하여 내분이 작용한 국제형과 내분이 복합된 복합적 분단유형이었다. 그러므로 분단후의 양독의 정부는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내부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계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1972년 기본조약 체결후 양측은 기본조약의 원칙에 따라 서로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상대방 체제 이데올로기를 인정하면서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실질적으로 상대방 체제에 도움을 주는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켰다. 이 결과 양독 주민들은 상대방의 실상을 더 많이 알게 됨으로써 이해의 폭은 점차 확대되었다. 또한 동서독 정부는 조용히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여 그들의 통일에 두려움을 가지는 주변 국가들을 안심시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통일 저해 요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효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는, 분단이 바로 6·25의 동족전쟁으로 이어 졌고 동족전쟁은 분단의 장벽을 한층더 높이 쌓아올려 남북한 양측은 상대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용납할 수 없는 타도의 대상으로 보아 왔었다. 동서간의 긴장 완화와 국제적 해빙무드에 영향을 받아 1970년대에 와서야 겨우 남북대화의 물꼬가 터졌다. 그러나 계속된 남북대화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하지 못했다.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가 교환되었으나 합의서는 지켜지지 않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서독사회의 발전을 촉진시켜 서독체제의 절대적 우월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통일의 내적기반을 다졌다. 독일의 정치교육과 한국의 통일교육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데올로기 교육이다. 서독의 정치교육에서는 동독의 체제 이데올로기인 공산주의를 서독 기본법(헌법)의 사회국가적 원리에 입각하여 하나의 분파적 체제 이데올로기로 포용하여 이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통일교육에서는 북한의 체제 이데올로기인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을 정치사회 현실에서는 물론 학문 세계와 교육의 세계에서 마저도 용납하지 못하는 小兒病的 교육적 태도를 견지해 왔다. 한국에서도 민주화의 발전에 따라 90년대에 들어와서야 겨우 학문 세계에서 공산주의와 주체사상 연구의 금기사항은 무너졌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현실 정치와 교육의 장에서는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을 우리 헌법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적대 이데올로기로 간주하여 우리 헌법상의 체제내 하위 이데올로기로 용납하거나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합의된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민족의 대단결에 대한 교육의 실제에서 학생들의 의문을 풀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으며 그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동·서독의 청소년 교류에서, 서독 정부는 청소년 교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 청소년 교류단체를 지원·육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동·서독 청소년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취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일연방청소년연맹(DBJR)은 동·서독 청소년 교류에 있어서 산파역을

말아 동·서독의 긴장완화에 크나큰 기여를 하였다. 반면 한국정부는 남북관계 창구의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여 청소년 학생들의 교류를 지워해주기보다는 그들의 교류와 교류요구를 원칙적으로 봉쇄해 왔다.

2. 남북한 청소년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과 교류에 대한 제언

1) 동질성 회복의 전제 조건

(1)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투명성 보장

남북한 청소년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성 세대들에게 누적되어 있던 상대방에 대한 해묵은 감정과 원한을 일소하고 아량과 관용을 발휘하여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즉 통일을 저해하는 과거의 원한과 냉전적 감정을 극복하고 제거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 정부는 물론 남북한의 상당수 주민들 마저도 과거 원한의 응어리를 마음속에 간직한 채 통일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각종 통일방안을 제시하여 왔다. 특히 북한 정부는 현재까지도 남한을 자극하는 각종 도발행위를 계속하는 이중적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

북한체제를 이해하는 데는 불가사이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통 마르크스주의로는 물론 마르크스주의를 응용·발전시킨 어떤 좌파주의 이론으로도 북한에서 일어난 부자간의 권력세습을 설명할 수 없다. 서구 자본주의 발전법칙에 근거한 자유주의적 시민사회 이론으로 북한체제를 인식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역대 독재정권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정권안보를 위해서 북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 또는 통제하였다. 정권적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북한의 진상을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않고 때로는 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축소 은폐하기도 하면서 정략적으로 이용해 오기도 했다. 그러므로 정부의 북한에 대한 발표는 공신력을 잃어 왔다. 이리하여 국민들은 정부가 북한의 도발행위 및 기타 북한문제에 대

한 진실을 발표하더라도 이를 일단 의심하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에 행여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지는 않는가 하고 그 이면에 대한 의심을 현재까지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와 국민간에 의심과 불신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아무리 이상적인 통일방안을 내놓고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려 해도 국민들이 이를 불신하고 의심하는 한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우선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과 불신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자료를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북한의 언론매체 및 통신매체를 남한 국민들이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해야 한다. 생산력과 이데올로기 경쟁에서 계획경제 체제의 비능률성과 자유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우월성이 입증되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였거나 자체변혁을 통하여 그들 스스로의 활로를 모색하여 가고 있는 이 마당에 북한의 언론 통신매체들의 선전·선동이 남한에 북한 동조 세력을 형성하여 남한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남한의 자유 민주주의적 복지체제의 문제점에서 비롯한 것이다.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산당을 인정하고 그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집권한 예는 90년대 이후에는 없었다. 남한체제가 북한체제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생활체험을 통하여 스스로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은 북한체제의 현실을 사실 그대로 가감없이 알게하는 것이다. 이는 남한 정부가 북한문제를 정권적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도 없애 줄 것이므로 한국 민주정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남한 정부는 국민들에게, 남북한 모든 민족과 북한정부에게, 세계 국가들에게 인정받아 당당하고 떳떳한 정부가 될 것이다.

(2) 학생들의 통일의식과 대정부 태도 변화

통일의 주역은 남북한 양측 정부가 될 수 밖에 없다. 통일의 핵심적인 과제는 정치, 군사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문제는 국민들의 대표성을 가지는 양측 정부가 국민들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치, 군사적인 문제는 직접적으로 남북한 체제의 사활이 걸린 피차가 선불리 접근하여 취급할 수 없는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로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분출되면 문제 해결의 초점을 흐리게 하여 사태를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

현재 남한의 국민정부는 역대 정권의 대북정책의 긍정적 측면을 수렴하여 ‘햇볕정책’으로 일컬어 지는 대북한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대북정책 3원칙인 ① 무력도발의 불용, ② 흡수통일의 배제, ③ 화해와 협력의 추진³³⁾을 기조로 삼고 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여 협공당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햇볕정책’을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음모로 비난하면서 남한을 자극하는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잠수정 침투, 무장간첩 침투에 분노한 국민들 중에 일부는 정부의 ‘햇볕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대북 강경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대북한 강경정책을 촉구하는 일부 국민들의 주장은 이렇다. 우리가 아무리 쌀을 주고 소떼를 몰아다 주어도 북한은 여전히 간첩을 남파하고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다. 북한의 적화통일 원칙은 전혀 요지부동인데 우리만의 일방적인 대북 유화적 포용정책을 취하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여 적화통일 정책을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대북 강경정책을 구사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아주 명쾌하고 가장 현실적인 주장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이 주장에서 간과된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민족통일이라는 점이 간과되어 있다. 이 주장은 민족통일의 역사적 사명을 망각한 무책임한 단

33) 통일부,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의 해설자료, 1998. 4.

세포적 논리의 전개이다.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는 계층은 냉전적 사고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부 보수적 국민층만이 아니다. 현실을 무시한 급진적 통일론을 주장하는 대학생들도 역시 정부의 대북정책의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과거의 독재정권하에서 젊은 학생들은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선도하여 민주화를 이룩하였으며 정략적 대북정책에 대항하여 국민들의 통일염원을 대변하여 왔다. 그러나 학생운동권에서는 아직까지도 민주화된 현정권을 과거의 독재정권과 동일시하여 현 정부의 통일정책, 대북정책에 대해서 불신을 품고 독자적인 통일정책, 대북교류를 주장하면서 모험적인 급진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청년 학생들의 순진한 통일에 대한 열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통일은 현실문제로서 현실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다. 학생들은 설령 자신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주장이 100%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현실정책으로 반영하는 데는 수많은 조건들이 갖추어 지고 극복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자신들의 올바른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와 정면 대결하여 한판 승부를 벌리자는 태도를 뒤로 미루고 정부의 편에 서서 정부가 처해 있는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선행시켜야 한다. 정부는 국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요구와 바람을 받아들이고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수립된 정책을 집행 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겪는 정부의 고충과 애로를 이해하려는 입장에 서서 이를 감시하고 실현성 있는 통일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학생다운 지성과 양심의 대변자적 태도이다. 구체적으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와 급진적인 통일이상을 지향하는 청년 학생들이 갈등과 대립을 지양(止揚)하여 상호협력할 때 통일은 앞당겨 질수 있다.

2) 청소년 교육과 교류 실재에 대한 제언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전제 조건, 즉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한 청소년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과 교류방안을 탐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또한 실효성도 없다. 먼저 정부가 국민들의 대북정책 내지 통일정책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정책을 펴나간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믿고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 일방적인 노력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국민들 역시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 생각을 버리고 후세대들, 민족,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면서 통일문제를 가다듬어 정부의 통일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성원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과 교류에 대한 원론적 원칙을 제언 한다.

(1) 청소년 교육에 대한 제언

해방 후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 구축을 위하여 서로 다른 교육을 시작하였다. 즉 남한은 미국식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서구 민주주의 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었고 북한은 소련식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주의 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리하여 남북한 양체제는 각각 다른 체제 교육을 통하여 그들 체제를 공고하게 다져 왔다. 또한 공고화된 각각 다른 체제는 교육을 규정하고 통제하여 양측 교육의 이질성을 점차 확대시켜 왔다. 이러한 분단체제 교육은, 남쪽에서는 서구적 자유 민주주의적 인간을, 북쪽에서는 공산주의적 인간을 길러 냄으로써 한민족의 동질성은 점차 희박해 지지 않을 수 없었다. 분단이 지속되면 될수록 멀어져 가기만 하는 한민족의 동질성은 민족통일의 공통분모를 점차 작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양측의 체제교육은 적어도 민족의 동질성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한 양측의 체제교육은 한민족이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남한 체제

교육이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상대방 체제 또는 상대체제 이데올로기를 비방하거나 헐뜯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상대방의 자존심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이에 대해서는 독일의 정치교육이 좋은 본보기이다. 서독의 정치교육은 독일민족의 입장에서 동독체제를 이해하고 동독체제 이데올로기를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로 인정하는 교육이었다.

둘째, 교육내용은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해야 한다. 분단후 남한의 교육은 최근까지 반공을 기저로 한 체제 안보교육이 학교 정치교육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 정부는 북한 및 공산권에 대한 정보를 철저하게 독점하면서 정부가 교육내용을 통제하여 취사선택적으로 교육내용을 결정하였다. 객관성이 결여된 편향적인 교육내용은 피교육자들을 맹목적 반공주의자로 만들었다. 또한 극소수의 피교육자들에게는 공산주의에 대한 호기심이 유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어쨌든 객관성 없는 편파적 반공교육 내용은 피교육자들에게 북한 및 공산주의에 대한 객관적 사실 인식을 그르치게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90년대 이후의 최근 교과서는 교육내용의 객관성이 놀라울 정도로 확보되어 있으나 아직도 완벽하게 객관적이지는 못하다.

셋째, 냉전시대의 경직적 교과용어 사용과 흑백논리적인 단정적 교과서 기술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교육내용의 편협성과 함께 교과서의 용어 사용과 기술 방식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의 반대 용어는 ‘공산주의’라는 단정적인 결론을 전제로 교과서들은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산주의가 왜 민주주의의 반대가 되는지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민주주의’ 반대 용어가 ‘공산주의’이면 ‘자본주의’에 대립되는 반대 용어는 무엇인가? 공산주의 국가들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동독은 “독일민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은 공산국가이면서도 왜 ‘민주주의’라는 공산주의와 상반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된다. 이와 같은 무분별한 용어 사용과 단정적 교육내용의 기술은 현재의 교과서에서도 여전히

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기술된 교과서로서는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열망, 북한 주민에 대한 민족적 애정을 불러 일으키는 교육울 기대할 수 없다. 또한 학생중심의 탐구수업이나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 개발도 기대할 수 없다.

넷째, 가능하다면 북한체제 이데올로기인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남한의 자유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에 포용하여 융합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 서독의 정치교육은 사회 국가적 서독 기본법에 의거, 기본법의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동독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인정함은 물론 동독과 동유럽에 대한 기초지식을 함양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다룰줄 알게 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독일과 한반도는 역사적 배경, 민주주의의 발전의 정도, 국민 의식과 감정, 사회적 환경, 주변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독일의 정치교육 모델이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타산지석으로 삼을만한 가치가 있다.

다섯째, 종래의 윤리와 교련과목을 통일교육 교과목으로 개편하여 종래의 안보중심의 소극적 통일교육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통일교육 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남북 격차, 국제적인 공산국가의 몰락 및 공산주의의 후퇴 등을 감안할 때 남한 체제안보를 우려할 시기는 지났다고 보여진다. 현재 다수의 조용한 국민들은 왜 정부가 통일문제, 대북정책에 소극적인가 이제 자신을 가지고 대범하게 가진자 힘센자의 아량과 관용을 보여도 좋을 때가 아닌가 하고 의아해 하고 있다. 북한의 간첩이 넘어와 포섭공작을 편다고 해서 그에 설득당하여 북한에 동조하는 남한 사람이 있을까? 북한의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한다고 해서 북한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활모습과 사회와 체제를 부러워하여 돌아오지 않는 남한 사람이 있을까? 북한의 신문, 방송매체를 개방한다고 해서 그들의 매체를 통한 선전·선동에 넘어가 북한체제에 동조하는 사람이 생길까?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의 실상이 거짓이 아닌 한 전혀 그럴 염려는 없다. 그것은 이웃나라 대만과 중국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다.

(2) 청소년 교류에 대한 제언

통일을 맞을 세대는 현재의 기성세대가 아니라 미래의 청소년 세대들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청소년 교류문제는 남북한 양측당국자들의 관심 밖이었고 실제 교류실적도 전무하다시피 부진했다. 다만 4·19 학생혁명 이후 학생들은 줄기차게 청년학생교류를 정부와 갈등, 대립하면서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법적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불모 상태에 있는 우리의 공식적인 남북 청소년 교류에, 동·서독 청소년교류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독일의 청소년 교류는 민간 청소년 단체가 주도하고 정부는 청소년 단체를 법률적, 제도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동·서독 청소년 교류를 촉진시켜왔다. 서독 정부는 서독 청소년들을 내독성의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동독을 여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서도 동독을 여행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과 사후평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서독 정부는 청소년들의 동독에로의 여행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동독을 여행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1인당 1일 체제비로 5DM씩 지불하였고 기차요금은 전액 무료, 전세 버스 대절료는 85%를 부담하였다. 또한 서독 정부는 동독 청소년들의 서독 방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특혜와 편의를 아낌없이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서독 정부는 서독을 방문한 동독 청소년들에게 1인당 20DM씩 여행보조금을 지불하였다. 이와 같이 서독 정부의 청소년 교류정책은 우리정부의 청소년 교류정책을 부끄럽게 만든다.

우리 정부도 서독의 청소년 교류정책을 본 받아 학생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남북 학생교류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따른다. 독일과 한반도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학생들의 교류를 조건 없이 허용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통일문제와 남북 학생교류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한총련은 불법단체로 활동을 금지당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학생운동을 탄압하려는 구시대적 정치권력의 전횡'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도 별로 없고 국민들의 지지도 높지 않다. 대다수 국민들은 한총련의 유아독존적 주장이 못마땅하여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정부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그들의 활동을 불법화 하는 정부의 행위도 지나친 행위라고 안타까워 하고 있다.

청소년 교류가 구체화 되기 위해서는 현행의 법과 제도적인 규제조치가 정비되어야 한다.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청소년 교류가 활성화 되기 어렵다. 특히 북한집착의 허가제도는 집착 절차상의 복잡성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교류를 저해하여 교류의 폭을 좁게하여 제한적인 집착만이 가능하게 할 뿐이다.

청소년 교류가 구체화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냉전구조 속에서 경직된 교육을 받은 우리 청소년들이 체제가 다른 북한의 제도와 문물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으며 북한주민들과의 만남에서 친화적일 수 있겠는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북한의 이상적인 이념이나 사상에 오염될 가능성은 없는가?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려와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이해,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 주체사상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당당하게 비판하고 민족적 입장에 서서 통일에 대한 뚜렷한 주관을 표명할 수 있는 교육이 청소년 교류의 전단계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막상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 지면 교류 결과의 사후 평가를 통하여 그를 토대로 한 시행착오를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교육부(1992a), 『고등학교 국민윤리』,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_____ (1992b),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 _____ (1992c), 『제6차 교육과정의 개요』, 교육부.
- _____ (1996), 『고등학교 공통사회(상)』,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_____ (1997), 『고등학교 윤리』,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김동규(1996), “남북한 학교 교육체제의 이질화 과정과 통일후의 동질화 방안”, 『남북한 통합 그 접근방법과 영역(하)』, 소화.
- 김병린(1989), 『북한의 교육』, 국토통일원.
- 김삼웅(1995), 『통일론 수난사』, 한겨레 신문사.
- 김학준(1997), 『북한이 열리면 21세기가 보인다』, 동학사.
- 김형찬(1997), 『북한의 교육』, 을유문화사.
- 남북문제연구소(1996), 『북한의 대남전략 해부』, 남북문제연구소.
- 류석열(1997), 『북한의 체제위기와 한반도 통일』, 박영사.
- 민족통일연구원(1997),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학술회의 총서97-04)』, 민족통일연구원
- 문교부(1977), 『자유수호의 길』, 문교부.
- _____ (1983), 『고등학교 정치·경제』,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 박성조(1992),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통일연수원.
- 박성희(1992), 『남북한 청소년 교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숭실대학교 통일정책 대학원(1996), 『북한의 이해』, 집문당.
- 송두울(1997),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한겨레 신문사.
- 신세호(1993), 『독일 교육통합과 파생문제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여만철 외49인(1996), 『와 헛바퀴를 돕네까?』, 다나.
- 연합통신 편(1991), 『北. 행복도 강요되는 땅』, 연합통신사.
- 유동열(1996), 『한국 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 다나.

- 유진오(1961, 단기 4294년), 『국가생활』, 일조각.
- 이강혁 외2인(1991), 『한국 헌법사(하)』, 한국정신문화원.
- 이관우 외1인(1995), 『독일문화의 이해』, 학문사.
- 이영애(1996a), “북한의 교육과 인권”, 『북한학개론』, 법문사.
- 이영애(1996b), “북한의 정치교육 효과성에 관한 연구”, 『96 북한 및 통일 연구논문집(II)』, 통일원.
- 이온죽(1995),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법문사.
- 이용필 편(1991), 『남북분단과 사상적 갈등』, 인간사랑.
- 이정희 외2인, 『민족통일론』, 형설출판사.
- 이형래(1997) 『남북통일 이래서 안된다』, 태일출판사.
- 이흥구(1984),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 박영사.
- 정용석(1992), 『분단국 통일과 남북통일』, 다나.
- 정치·경제 교과서 편찬위원회(1977), 『고등학교 정치·경제』, 고등학교서
주식회사.
- 조동호(1997),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민
족통일연구원.
- 최성철 편(1996),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 최종고(1996), 『북한법』, 박영사.
- 통일교육원(1997a), 『북한이해』, 통일원 통일교육원.
- _____ (1997b), 『통일문제의 이해』, 통일원 통일교육원.
- _____ (1997c), 『통일문답』, 통일 교육원.
-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1997), 『남북대화 65호』
- 통일원(1993), 『동서독 조약·협정 자료집』, 통일원.
- _____ (1996), 『독일통일6년, 독일재건 6년』, 통일원.
- _____ (1992), 『북한교과서 분석』, 통일원.
- _____ (1992), 『화해와 협력시대의 통일교육 기본방향』, 통일원.
- 평화문제연구소·한스자이텔재단(1996), 『기다리는 통일 준비하는 통일』,
평화문제연구소.

황병덕(1995), 『독일의 정치교육』, 민족통일연구원.

황산덕(1967), 『고등학교 정치·경제』, 장왕사.

<외국문헌>

クルプ-スカヤ著, 勝田昌二譯(1972), 『國民教育論』, 明治圖書.

カーデ ウシシンス키著・柴田義松譯(1971), 『教育的人間學1』, 明治圖書.

G. クラップ著・大橋精夫譯(1961), 『マルクス主義の教育思想』, 御茶の水書房.

哲學辭典(1971), 平凡社

<참고자료>

김정일(1984),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동경: 구월서방.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

어린이 보육교양법(1976).

대학에 관한 규정(1949).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1997).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1958).

고등교육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1965).

보통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62).

조국통일 5대방침(1990).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1993).

1998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연구보고서 ◆

정 책 연 구

- 98-01 천정웅 · 김정주 · 김영지 「청소년정책 평가지표 체계 연구」
- 98-02 김정주 · 천정웅 · 김영지 「지역청소년센터 운영모델 연구」
- 98-04 노 혁 · 길은배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성화 방안 연구」
- 98-05 이민희 · 이명숙 · 정희욱 · 이춘화 「청소년폭력 대책 모델 개발」
- 98-06 이민희 · 이명숙 · 정희욱 · 이춘화 「가출청소년 쉼터 모델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98-07 고성혜 · 맹영임 · 신선미 「특성화된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98-08 전명기 · 김영한 · 박창남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방안 연구」
- 98-09 황진구 · 임지수 「청소년 정보 분류 · 검색체계 개발 연구」
- 98-13 김정배 · 정화수 · 서수자 「청소년 자원봉사 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 98-14 윤철경 · 박영균 · 정화수 · 서수자 「중 · 고등학교 봉사활동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해외 청소년정책 동향

- 98-16 정희욱 「세계 청소년장관회의 자료집」
- 98-17 이종원 「일본 청소년 이시메의 실태와 대책」
- 98-18 이종원 「일본 청소년육성의 현실과 대응방안」
- 98-19 이수봉 「중국의 청소년 조직과 활동」

청소년정보자료

- 98-10 김혁진 「청소년정보 길라잡이」
- 98-11 황진구 「인터넷에서 청소년 정보 찾기」
- 98-12 이해연 「청소년문제 어디서 어떻게 지도하나」

프로그램 개발

- 98-15 김정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모음집」
- 98-21 고성혜 · 맹영임 「'98 청소년 수련거리백과」(CD-Rom 별도)
- 98-03 천정웅 · 김정주 · 김영지 「청소년정책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제4회 청소년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보고서)

◆ 학술행사 및 세미나 자료집 ◆

- 98-S01 「청소년육성의 방향과 과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역별 관계자 워크숍 (1998. 6)
- 98-S02 「국가 경제위기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방향」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도를 위한 워크숍 자료집 (1998. 6 문화관광부·중앙일보사 후원)
- 98-S03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1998. 6)
- 98-S04 「청소년육성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협의회」 청소년 관련기관 및 전문가 정책협의회 자료 (1998. 7)
- 98-S05 「학생봉사활동 지도교사 일반 연수」 연수교재 (1998. 7)
- 98-S06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 요약·설명자료」 (1998. 8)
- 98-S07 「청소년정책과 청소년 참여 - 청소년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년과 함께하는 정책 워크숍 (1998. 8)
- 98-S08 「청소년 자율참여와 미래」 1998년도 1급 청소년지도사 연수교재 (1998. 9)
- 98-S09 「새로운 청소년 현장을 위한 공청회」 청소년의 권리·청소년의 책임·사회의 역할 (1998. 9 문화관광부 공동주최)
- 98-S10 「21세기 새로운 청소년정책 방향 모색 - 한·중·일 국제심포지움」 (1998. 9)
- 98-S11 「지역중심 청소년정책의 실천 방안과 과제」 새로운 청소년정책 과제의 실천을 위한 청소년지도자 세미나 (1998. 10. '98년 1급 청소년지도사 연수와 정 세미나 준비위원회)

◆ 학술논문집 ◆

- 『한국청소년연구』 1998년 제9권 제1호(통권 제27호)
- 『한국청소년연구』 1998년 제9권 제2호(통권 제28호)

◆ 청소년지도자 교재총서 ◆

청소년심리학 / 청소년문화론 / 청소년문제론 / 청소년지도론 / 인간관계수련활동 / 전통문화활동 /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 관계 법과 행정 / 청소년활동론 / 집단지도론 /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청소년과 지역사회 / 청소년 기관운영

연구보고서 98-20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청소년 교육과 교류방안 탐구

- 통일을 대비하는 청소년 교육과 교류방안 -

인 쇄 1998년 12월 23일
발 행 1998년 12월 28일
발 행 인 최 충 옥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등 록 1993. 10. 23 제21-500호
인 쇄 처 문 영 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578-7924(자료실)

ISBN 89-7816-206-1

